

제41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1 호
(정기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3일(수)

장 소 제2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1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9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9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9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위원장 박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주질의는 20분, 보충질의는 5분, 재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일 회의 산회 이후에는 서면질을 접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모든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차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방송으로 보시기에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조금 더 자리에 있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충남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는 제가 동해 석유 시추, 원전·신재생에너지 예산 등 산자중기위에서 여야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나 소위원회에서 논의에 논의를 거쳐, 숙의를 거쳐 여야가 예산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여야 국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서 다소간에 협치 가능성을 봤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이 첫 번째 질의에서 국회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지, 민의가 외면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강승규 위원 지난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특활비 80억 9000만 원, 특경비 506억 9000만 원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강승규 위원 전액 삭감 되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수사 어떻게 하지요?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특활비는 마약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돈이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특경비는 지명수배자 검거, 압수수색 등에 사용되는 현금 플러스 카드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감사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강승규 위원** 감사원도 특활비 15억 1900만 원, 특경비 45억 19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감사원의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는 돈인가요?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 특활비는 감찰활동이라든지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 조사활동입니다. 그 활동에 쓰여지는, 감사정보 수집활동에 쓰여지는 경비고요.

그 외에 특경비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현지감사 출장 갔을 때 활동비 이런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강승규 위원** 특활비·특경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들은 감사활동에 필수적인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님? 왜 민주당이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를 다 깎았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 정확한 뜻은 얘기가 논의되지 않았고……

○**강승규 위원** 요즘 감사원에서 민주당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전 정부 관련해서 조사하는 게 있나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난 정부에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이 감사한 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글썄요……

○**강승규 위원** 북한 GP 부실 검증 이런 것들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그건 지금 현재 조사 중에,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사드기지 정상화 지연도 지금 감사하고 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게 연관된다고 보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은 안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연 때문에, 저희들 경비 집행에 대한 내역이나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명드릴 만큼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승규 위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강승규 위원** 특경비를 삭감하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 등이 4개 지청에 대한 특경비의 소위 사용내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4개 지청이 어디……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수사가 많이 진행된 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검사 탄핵을 연속으로 요구하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의심도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승규 위원 일단 다시 묻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 특활비와 특경비를 사용하는 검찰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특정한 몇 명이라고 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직원들에게 수사 활동에 필요한……

○강승규 위원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대략?

○법무부장관 박성재 우리 검찰 수사관이 전국에 검사 합해서 1만여 명 정도……

○강승규 위원 수사관까지 합해서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강승규 위원 감사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 직원은 한 1000여 명 되는데요. 저희들도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특경비를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은 지급을 안 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특경비까지 받을 수 있는……

○감사원장 최재해 글썄요, 한……

○강승규 위원 절반은 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절반은 좀 넘습니다. 한 칠팔백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나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사무총장입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우리 국회에 주는 특활비·특경비가 총 얼마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특수활동비는 9억 8000이고요, 특경비는 183억입니다.

○강승규 위원 특경비는 183억입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총 199억 5000만 원 정도 되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국회의원 일인당 특활비…… 국회의원에게 특활비 지급됩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의원들한테 특활비는……

○강승규 위원 없지요?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사업의 성격상 조사 업무라든지 예산 업무라든지 그럴 때 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에게도 특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특경비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특활비는 없고 특경비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대략 국회의원실에 지금 특경비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한 달에?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신청별로…… 특경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승규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특경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잠깐만요.

약 3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회의원도 의원실당 보좌진들이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활동 등에 특경비로 월 300 정도 쓰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그 이상 됩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한 달에 얼마 정도 지급되니까?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상임위원장님은……

○강승규 위원 월 200씩 정도……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상임위 간사에게 월 100 지급되고 있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상임위원장들에도, 월 위원장 300에 여야 간사 하면 500 정도가 지급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특경비가?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얼마나 지급되니까, 매달?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199억 5000만 원 중에서 일부 9억 정도가 특활비고 183억 중에 특경비 그리고 의원 300명에 지급되고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이외에 대개 의장실, 국회의장, 부의장 등이 쓰지 않겠습니까, 특활비를 포함해서. 그렇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예.

○강승규 위원 국회도 이렇게 움직이는 데 특활비·특경비가 지금 쓰이고 있지요? 물론 예전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특활비·특경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요.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2010년도에……

○강승규 위원 아니, 잠깐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특활비가 91억이었는데요 2019년도에 필요 최소한으로 해서 84% 줄여서 9억 8000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강승규 위원 예, 됐습니다.

경찰청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면 경찰청의 경우 2017년에 특활비가 411억, 특경비가 5075억 그래서 5486억으로 하다가 21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보면 특활비는 39억으로 줄고 특경비는 또 6126억으로 늘어서 경찰의 경우는 특활비 플러스 특경비가 6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2.5% 늘었어요. 그다음에 법무부의 경우를 보니까 법무부는 2017년에는

특활비·특경비 합해서 778억 하다가 2021년에는 701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렇게 많은 특활비·특경비를 쓰다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해서 지금 199억 정도를 특경비·특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우리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측면에서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도 이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도, 국회는 얼마나 일을 잘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서 특활비 등에 199억을 써야 되나, 저도 본인에 해당됩니다만. 특활비·특경비를 쓰고, 정부 특활비·특경비를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그대로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한번 해 봅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위원님, 제가 국회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틀린 것 아니면 얘기하지 마십시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지금 특활비는 9억 8000입니다마는 특경비가 현재 183억입니다. 그중에 141억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 지출인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강승규 위원** 사무총장님,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에서 의무적 지출이든 수사비 등에 쓰는 것이 무슨 주머니 싹짓돈 쓰는 것 아니잖아요. 제가 국회에 비유하는 것은 지금 국회가 이렇게 법원과 감사원에 대해서 폭력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회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가 그대로 드러내 보자는 거예요. 국회가 잘못 쓰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저도 그 당사자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활비·특경비가 어떻게 쓰이냐는 것인데, 정상적인 업무 처리인데 이것을 대표를 수사한다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이렇게 보복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예산심의냐.

제가 어제 우리 산자중기위에서 소위원회에서지만 이렇게 협치의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서도 원전, 신재생에너지 다양한 부분으로 여야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시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산자중기위는 위원장부터 여당 위원장, 예결소위 위원장까지 여당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특활비·특경비, 오늘 우리 국회 현장은…… 국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우리 국회가 어떤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정부에게 일을 하게 하는 건지, 이게 제대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인지, 그저 횡방 놓자는 것인지 이 현상을 좀 국민께서 제대로 아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굳이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 나오셨나요? 비서실 누가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나왔습니다.

○**강승규 위원**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특활비·특경비 삭감한다 또는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직 운영위가 안 열렸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아직 운영위가 안 열렸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 등은 어떻게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자료 요구 등은 왔습니다.

○강승규 위원 예?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자료 요구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어떤 자료 요구입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산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강승규 위원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특경비 썼나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강승규 위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에서 쓰는 특활비와 특경비가 지난 정부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지난 정부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강승규 위원 얼마 정도 감소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인 2020년도에 163.9억 원의 특활비·업추비를 포함한 업무지원비가 있었고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2020년 대비 불과 6.3% 증가한 정도 수준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승규 위원 혹시 대통령실의 특활비나 또는 특경비로 대통령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옷값 등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다른 생활비 지출한 게 있습니까? 관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무슨 활동비 등에서 지출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자세한 내역은 보안 사항입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혹시, 특활비는 현금으로 지출하지 않습니까? 특활비 할 때 관봉끈을 묶은 채 그냥 지급합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아닙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 적이 없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강승규 위원 혹시 대통령경호처 나오셨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대통령 퇴임 후 경호시설을 지어야지요? 준비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집권 3년 차부터 준비합니다.

○강승규 위원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희가 기금예산으로 137억 편성……

○강승규 위원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정도 썼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 당시……

○강승규 위원 그 당시 요구한 것과 실제 사용한 것이 어떻게…… 자료가 있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지금 현재 그 당시 건축비용만 따지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 요구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결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요구액입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요구액이고요. 이게 소모 예산이 아니고 기금예산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까? 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럼 대통령실 경호, 그러니까 대통령 퇴임하신 이후에 사용할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경호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현재 미정입니다.

○**강승규 위원** 그런데 경호처 신축 예산 등을 왜 또 야당이 쟁점을 시키고 있을까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모든 정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만 그 예산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에 내려가시다 보니까 부지매입비가 상대적으로 좀 작았고요. 현재 저희 편성 요구안에는 그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부지매입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상승돼 보입니다.

○**강승규 위원** 기금예산 요구를 할 때 거기에 경호실은 어떻게 짓는다, 관저는 어떻게 짓는다고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규모만 나옵니다.

○**강승규 위원** 소위 호화 경호시설이니 호화 저택이니 이런 부분 등은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겠네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전직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고요. 경호시설입니다.

○**강승규 위원** 경호시설은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다 통틀어서 경호실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차 재판 선고일이 15일로 다가오고 또 2차 재판 선고일이 2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그야말로 탄핵 국회를 넘어서서 그저 오직 기승전 방탄 그리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호도해서 국민들에게 그저 윤석열 정부의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국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 상임위에서만 아니라 내년 예산을 논의해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되는 예결위에서까지 이렇게 정치 예산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국회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각 부처도 그렇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특활비든 특경비든 필요하다면 또 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예산에 어떤 논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한 기관의 특활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특정 기관을 완전 무력화시키려는 이런 예산 국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는 건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심히 우려스러우면서, 오늘 하루종일 논의가 될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좀 확인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의결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5분)

○위원장 박정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열다섯 분으로 하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아홉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여섯 분을 각각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추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 구성 합의를 위하여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갖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 분 간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부별심사를 마치는 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3. 202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03521)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10시27분)

○위원장 박정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문금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 문금주입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문금주 위원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찰에서 허가한 집회공간이 참가 인원 대비 턱없이 좁았고 또 실제 참가 인원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보통 경찰은 추후에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도 우선 참가자,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회공간을 열어 주는 등 협의에 나서는 게 보통인데 그날 경찰은 불법 도로 점거라는 입장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보다 강력했던 경찰 통제가 정권퇴진운동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포석 아니냐, 예전 박근혜 정권 탄핵 때처럼 국민들의 분노가 광장으로 모이는 것을 사전 봉쇄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포석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고 자의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경찰청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서슬 퍼렇던 80년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든 군부의 과잉진압 명령에든 우리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경찰입니다.

지난 주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잉진압에 대해서 경찰청장님,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이 집회장소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집회장소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할 뿐입니다. 다만 그날 집회의 주최 측인 민노총에서 승례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집회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문금주 위원 청장님, 제가 그것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리고 승례문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그리고 서울역까지 충분히……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그 진압에 의해서 다수의 국민이 다쳤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한국은행과 서울역 부분은 비워 두고 본집회 장소에만 들어간 겁니다.

○문금주 위원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본인들이 신고한 장소로 들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청장님께 제가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하실 용의가 있는지만 말씀 주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그날 불법집회로 변질이 돼서 저희들이 종결 처분을 요청을 했고……

○문금주 위원 불법집회하면 마구잡이로 패도 됩니까, 밀어젖히고?

○경찰청장 조지호 마구잡이로 팬 적이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부상자가 발생해도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그리고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산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법집회를 이어 가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킬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라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고 그것을……

○문금주 위원 결론론적으로 어찌 됐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고 또 국회의원 한 분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그저께 행안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주말에 도심 한가운데서 통행이 마비되는 사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사태에 대해서는 치안 책임자로서 강한 책임감도 느끼고 또 안타깝고 유감

스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금주 위원 청장님, 아무리 집회·시위가 순간적으로 불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법적으로 변질이 된다 할지라도 우선 보호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랄지 경찰법에 의한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경찰은……

○문금주 위원 됐습니다. 답변 됐고요.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에 관한 지휘라든가 그런 권한을 주신다면 적극 잘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장관님 밑에 지금 경찰국이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국은 치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문금주 위원 경찰청의 지휘 감독이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지휘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문금주 위원 장관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만 따지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 교육부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고요.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집단 이탈하고 또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로 의대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감축하게 해 달라고 해서 교육부가 받아들였고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은 4567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또 의대 교육과정 혁신을 통해 의학교육 질 제고, 이런 내용들 다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문금주 위원 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약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 의사를 밝히셨고 25년에는 교육부 6062억 원, 복지부 5579억 원 등 국고에서 1조 1641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장관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이 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정상적인 절차가 아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실 의대 증원하고 이런 투자계획하고 또 지금 복지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의료개혁들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 먼저 발표를 하고 의료계랄지 여러 가지 반발이 심하니까 교육부에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선후가 좀 바뀐 것 같은, 최소한 의대 증원계획이 발표가 될 때 이런 투자 방안도 같이 발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의대 증원계획을 완벽하게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총선용으로, 총선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복지부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사실 증원에 대한 논의는 과거부터 죽 해 왔고 또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워낙 시급한 어젠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발표할 때도 말씀하신 그런 큰 개혁과제들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 원이 넘는 예산편성이 문제라는 것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의 설비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는 현재 정부,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를 통해 정원 합의를 완결 짓고 그에 기반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시작이 돼서 사회적 합의의 절차가 다행히 그래도 늦게나마 시작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도 가급적 그래도, 특히 증원과 관련해서 당장 지금 입시가 증원된 인원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정부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도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이 되고 나서 계획들이, 의대 정원을 증원한달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올해 어떤 사회적 합의를 다 이루고 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달지, 아니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한달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료개혁의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니냐……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의료개혁이 역대 정부에서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개혁이었고……

○문금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준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또 사실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것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 관련 여러 가지 투자 방안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 안 들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부차관님은?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지는데요. 인력 양성이 있고 그다음에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마지막으로 의료안전망하고 R&D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특정 사업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각 개별, 개별 사업으로 나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으로 묶어서 예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금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게, 의대 정원 줄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방의료의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폭이 4000억 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23년, 24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을 보시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 원이고 작년 상반기 손실액 1612억 원보다 2515억 원 증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대병원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수입 감소로 병원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고 비상경영체제의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학병원급을 비롯해서 많은 의료기관의 대금결제 난항으로 유통, 제약으로 이어지는 자금 회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참고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고가 의약품의 결제대금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미루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 대금지급도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차관님, 현황 파악이랄지 들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복지부하고 국립대병원들 경영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안 나도록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외교부1차관입니다.

○**문금주 위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되면서 산업, 외교, 국방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는데요. 윤석열 정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바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당선자지요. 트럼프 당선자는 24시간 내에 러-우 전쟁을 끝내겠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즉각 종식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쟁도 취임식 전에 끝내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는데요. 이런 국제적인 상황 변화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이 러-우 전쟁에 북한 군인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수 국민들께서도, 82%가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도 어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기 지원 입장을 고수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는 러-우 전쟁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 그리고 취임 전에 이스라엘 전쟁도 끝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당에,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우리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은 러·북 간 군사협력 추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잘 상황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이상민 행안부장관께 여쭙보겠습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76주기 여수·순천 10·19 사건 합동추념식에 대해—올해 보성에서 열렸는데요—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금주 위원 처음으로 국회의장님과 총리께서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우리 유족들의 손을 잡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과연 여순사건위원회가 지금까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과 의무를 다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역 여론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금주 위원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처리율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처리율도 부진하고 또 결과 통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조바심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문금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또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나오는 게 지금 추진단에서 여순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법정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어떤 면면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도 많으시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기존 위원들은 국가인재 디베이스하고 관련 기관 추천 등을 통해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반에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가 될 텐데 위원들 재선임이라든지 신규 영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위원** 내년 초반 몇 월 말씀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4월입니다.

○**문금주 위원** 4월, 재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는 제발 뉴라이트 인사, 친일 인사라는 그런 평을 받는 인물들이 선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동래의 서지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일 수능일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은 초조와 긴장과 불안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수능 수험생이 제가 알기로는 한 52만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가족을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애타게 오늘과 내일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수능 1세대입니다. 저는 1차, 첫 번째 수능을 치른 세대인데 저도 학부모로서 아이가 수능 시험을 치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논술시험을 치르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논술시험을 칠 때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아주 기이한 풍경들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차량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기다리면서 오히려 복잡도 때문에 많은 경찰분들이 나와서 중간중간에 안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킥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킥서비스 오토바이들이 학생들을 실어서 다른 학교로 데려다 주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먹사니즘을 주장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이번 주말 그 수많은 수험생들이 혼잡을 이루며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집중하는 그 순간, 킥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집회와 시위로 도심을 가득 채우겠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경찰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능 수험생들의 그리고 입시생들의 논술고사장 주변에 수많은 경찰 병력이 나와서 치안과 안전을 챙기고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도심의 집회와 시위까지 또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두 의견은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수능이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 경찰이 교통관리를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회는 신고가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분명히 청장님 말씀대로 사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만 교통체증과…… 만약에 집회·시위가 도심에서 일어나는데 수험생들이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학교별로 이동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생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집회를 거두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경찰청장님께서 긴밀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집회·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수험생을 위해서 각별한 안전조치들을 취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고교 무상교육의 선전선동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허위·과장인지에 대해서 부총리님께 몇 가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주당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현수막 시안을 올렸습니다. 길거리에 걸려 있는 것도 많았지요,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 ‘교육 붕괴’,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라는 입장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님, 우리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법에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 주는 것하고 고교 무상교육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 주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서지영 위원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고 부자들 세금 깎아 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 부분은 어차피 올해로 일몰이 되고 내년에도 교육교부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지영 위원 그냥 저는 허무맹랑한, 황당무제한, 논리적 개연성, 연관성도 없는 무논리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선동선전이지요. 그렇지만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현수막이 전국 도처에 걸려 있을 때 혼란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을 염려하는 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왔습니다.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겠네요. 학부모가 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무상급식, 무상교육비 지원이 끝날 수 있겠네요’,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하고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무상교육을 포기했다고 하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신력 있는 제1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불신이 생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선전선동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기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총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선전선동,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허위 선전선동이 되고 있을 때 저는 교육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대처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국민들 또 학부모님들께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체부장관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잘못 가고 있는 여론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주시고 정부 광고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왜곡 선동되고 학부모님들이 민생의 현장에서 직접적인 불안감을 겪는 것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서 명확하게 정부 광고도 검토해 주실 것을 문체부장관님과 교육부총리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아까 기재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부분은 19년 4월 달에, 고등학교 교육을 일부 무상으로 돌리면서 시행되는 재원을 한시적으로 5년간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걸로 19년 4월 달에 합의를 했고요. 올해로 일몰이 끝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이 되는데 재원 분담의 주체가 지방교육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서지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19년 4월 법안의 일몰이 5년 뒤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정된 법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지영 위원** 그 법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재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일몰로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당시에 법안을 제출했던 분이 서영교 의원이셨습니다. 당시에 5년 일몰법을 서영교 의원안으로 우리 교육위에서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통과했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총리는 유은혜 전 부총리였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께서 당시에 이 안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부총리님 기억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모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이 처리되던 상임위에서 유은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부와 재정 당국과 또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연구팀을 꾸렸고요’ 했습니다.

부총리님, 당시에 교육부에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아마 그 사안은 연구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희가 질의했을 때는 특별한 연구팀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지영 위원 재정 당국과 함께 연구팀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당시에 이 사안에 대한 연구팀이 꾸려졌습니까? 참여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는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부와 함께 연구를 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 부분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교 무상교육에 특정된 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전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지영 위원 그렇게 당시 연구를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5년부터의 재원 방안은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합의안을 만들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합의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 합의안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따로 들은 바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저희가 양 부처의 실무자들로부터 확인하기에는 양 부처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던 특별한 연구팀은 실질적으로 없었던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 정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정부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안은 없었습니다. 일몰 법안이 5년 동안 지속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안도 노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법안에 대해서 무조건 다시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일몰을 연장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함께 이 사안에 대해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가면서 다양한 안을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법안이 이미 통과가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교육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 법안만 단독 상정되었고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전조정위를 걸었지만 안전조정위는 90일이라는 시간을 보장받

지 못하고 단 1시간 만에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안전조정위에서 처리된 이후에 본회의에 국민의힘안도 올리고 조국혁신당안도 올렸지만 불과 몇십 분 만에 그냥 원안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떠한 토론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각 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이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시켜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지방교육 당국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느냐, 아니면 부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일몰대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전담하느냐 이 논리일 뿐입니다.

마지막 PPT 띄워 주시지요.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모든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 안의 어느 구절에도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학부모 부담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란이 있다면 부총리께서, 문체부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정부광고라도 해 주셔서 이 혼동되고 있는 사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교부되고 있는지, 교육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학령인구의 상관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서 2028년까지 추이를 보면 약 88조 원, 2020년 대비 35조 원의 재정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어떻습니까? 100만 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일인당 1090만 원 정도의 비용이었다면, 교부금 수준이었다면 2028년도에는 2000만 원 상당이 됩니다. 놀라운 증가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청 재정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용하고 있는 기금과 예금 잔액 총액은 18조에 해당합니다.

여기 통일부장관님 계십니까? 차관님 계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차관 나와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통일부 1년 예산이 얼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기금을 빼고 일반회계는 1600억에서 1700억 사이 정도가 됩니다.

○**서지영 위원** 교육청들 예산 보니까 굉장히 부럽지 않으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지영 위원 여가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여가부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서지영 위원 1조 8000억 원 되는 규모를 보면……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 1조 9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에 3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에금 잔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당과 토론해 보면 교육청은 돈이 없다고 늘 주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4년간 전국 교육청이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약 30조에 해당합니다. 기금운용으로 생긴 이자 수익이 무려 1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재정 부담은 교육청이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야당과 교육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돈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감사원장님, 감사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서지영 위원 주로 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좀 방대한 자료가 돼 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계속 늘어나서 그 갭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걸 좀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이 권고했다는 것을 얘기드립니다.

○서지영 위원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3조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들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냐 물었더니 12개 교육청은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다섯 곳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575억 원을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90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333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인식, 감사원이 지적한 것과 교육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다시 한번 더……

○서지영 위원 원장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조실장님 계십니까?

○국무총리비서실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화장실 갔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서면으로 여쭙봤습니다. 국조실에서 전국 교육청을 상대로 운영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97건, 282억 원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운영비를 교직원 뮤지컬 관람비, 교직원 바리스타 자격 취득 연수비, 이런 데 썼다고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일괄적으로 내국세와 연동되는 형태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등교육 분야에 쓰여지는 것과 비교를 할 때 너무나 큰 격차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함께 공동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등교육재정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착수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소요가 상당히 다원화되고 또 AI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제 구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께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결산심사에서 제가 법무부장관님과 경찰청장님께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서지영 위원** 제가 그냥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혹시 부산에서 최근 딥페이크 사건 좀 특별한 사건 보고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있습니다.

○**서지영 위원**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기초의원분들……

○**서지영 위원** 맞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사진을 AI로 합성해서 성착취물로 만들어서 제공한 겁니다.

○**서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이 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과학기술수석님이 지금 나와 계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지난 7일에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140분간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던 국정농단의 진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 그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통령님의 담화에 대해서 수석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께서는 진솔한 사과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 종합정책질의 때 국무총리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언론들의 반응입니다. 헤드라인만 보셔도 어떤 반응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언론 보도 대응 지침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보도지침대로 기사가 잘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보도지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판은 비단 언론들만의 평가가 아닐 것입니다.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명태균 씨가 여당의 공천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잘아시겠지만 당선인 되기 전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영선 씨 그다음에 지방선거에는 김진태·박완수 씨를 후보로 밀어넣었다 이런 유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녹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일반 국민이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나 사람은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수석님, 추천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님께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존경하는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명백하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석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방금 예결위 전광판에 띄워 놓으신 PPT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를 띄워 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박지혜 위원**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어떤 문서가 보도지침 말씀이신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저희 대통령실의 포맷과 전혀 다른데 혹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박지혜 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료 탭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도지침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아니, 보도지침이라는 걸 저희가 만든 적이 없는데……

○**박지혜 위원** 보도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진위가……

○**박지혜 위원** 명백하게 지금 다른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가짜뉴스를 띄워 놓으시면 저희가……

○**박지혜 위원** 수석님이 검증해 보셨어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아니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

○박지혜 위원 기록에 어떤 게 남나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가짜뉴스를 PPT에……

○박지혜 위원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 부분은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가짜뉴스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거들을 봤을 때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이미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소상히 국민들에게 밝히신 대로……

○박지혜 위원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공천 개입은 없었고요. 가능하지도 않았 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희가 계속 들어 봐야겠네요. 대통령실에서 해명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공천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 10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처음에는 2021년에 대통령과 명태균이 두 차례 만났고 경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 통화나 문자를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선인 신분 이었던 2022년 5월 9일에 통화를 한 녹취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취임식 전날 통화한 이후에 추가 통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 고 있는데 사실 이 해명이 맞는지,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는 않을지 노심초사…… 국민들도 사실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해명만으로 저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꼬이는 이런 해명들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 해서라도 특검으로 말끔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30일에 명태균 씨가 채널A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사자도 검찰 조사 보다 특검을 하는 게 공정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 인 요구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담화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지 지율 17%,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 역시 취임 이후에 가장 높은 74% 기록 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1위를 기록한 것이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제 대통령과 정부 여 당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이 고요.

내일 본회의에서 아마도 의결이 이루어질 텐데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 통과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민들의 뜻이 어떤 칼날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돌아갈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석님, 대통령님께 꼭 특검 수용을 건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국무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연설, 총리님께서 진행하셨는데요. 자리에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여기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의료라는 단어는 열아홉 번이나 언급이 됐더라고요. 저는 사실 기후에 관심이 있는데 기후는 딱 한 번 언급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20대 핵심과제로 선정했고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해야 된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5년간 10조 원 국가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2월에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인력 확대 방안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지혜 위원 그 이후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사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확대를 진행하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의사단체 등도 반대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너무 높습니다.

지금 국무조정실장님께서서는 여러 중앙기관들의 행정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는 해법을 역시 조율해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지혜 위원 그래서 의료개혁 추진 방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오늘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관련하여 내년 예산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료개혁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고 현실 역시 잘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성급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부 예산인데요. 사립학교 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학교에 저금리로,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자금으로 의대는 아마도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의과대학 운영비를 조달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 대비 2.16배 증액되어서 218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증가된 금액의 대부분이, 지금 과목은 사립학교 환경개선 예산이잖아요. 대부분이 의대 쪽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사립 다른 비의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천억 원, 여기도 수천억 원 융자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 금액은 저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비의대를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요 대비 지급률이 비의대의 경우에는 올해 40%였는데 내년에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비의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딱 의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요. 무려 8678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립 시설을 이렇게 새로 건설하는 그런 예산 같은 경우에 얼마나 편성이 어렵습니까? 지침에 따르면 사전타당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0억 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인데 사업의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아시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정실장님께서 아시는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산출 과정을 보니까 단순하게 의대생 일인당 소요 면적, 면적당 평균 공사단가 기준으로 곱하기를 해 가지고 전체 예산을 마련한 거예요. 이것을 대학별로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곱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딸 수 있냐 다른 부처들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입될 국가 예산이 9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물량 단가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국립대 의대 시설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총사업비를 조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박지혜 위원 의대 여건 개선 사업인데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그러니까요. 국립대 의대 시설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서 한 거고, 예산이 이게 총사업비가 몇 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예산에서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개별 학교들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이 예산이 저는 이렇게 절차적인 타당성…… 사실 절차라는 것이 거쳐야 하는 의미가 당연히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편성됐다는 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과정의 어떤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함으로써 분명히 다른 부분의 예산이 줄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는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요, 어저께 들어 보니까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들이 나왔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 예산이에요. 이게 원래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외과같이 필수과목 전공의 220명에게 100만 원씩 1년간 지급했던 예산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8개 과목, 4600명으로 확대해서 전년 대비 12배 증액된 58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저께 질의에 나왔던 걸 보니까 이 8개 과목, 지금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 4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4600명, 누가 받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사한 사업이 있었어요. 국공립대 수당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피

과목 전공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요. 비슷한 설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역필수의사 지역수당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근무하는 8개 필수 진료과 의사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115억 원 편성해 났는데요. 과거에 유사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이 2019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신청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실패 경험이 있는 가운데에서 유사한 사업을 조금 막무가내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금 사회적으로 의대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년 예산을 어쨌든 좀 늘려 가지고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저는 약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산들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앞으로 잘 챙기겠고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사실은 현재 우리 의료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필수의료 부분들이 특별히 인력도 적고……

○박지혜 위원 당연하지요. 필수의료, 지역의료 당연히 지원해야 되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지혜 위원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나, 그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편성이 된 것이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필수의료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의료계와 그다음에 의료교육계와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정부가 만든 안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으면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야의정협의체도 출범했으니까 책임감 있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국무조정실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부장관님도 함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에 G7이 2030년까지 ESS, 이게 에너지 저장장치거든요. 이것을 6배 이상 확대하자 그런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들어 봤습니다.

○박지혜 위원 아, 들어 보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박지혜 위원 ESS 확대에 합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면 이 스토리지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G7 그리고 이번 주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막했잖아요. G7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에너지 저장장치 6배 확대하자는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하고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ESS가, 다음 장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2050년 경에는 전체 전력 므스의 2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세계에너지기구의 전망 이런 것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G7에서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요 아마도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이 6배 서약에 당사국들이 합의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약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현재 저희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ESS 강국이에요. 사실 몇 해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설치된 ESS 용량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었거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ESS 6배 서약에 꼭 가입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국들도 이 서약에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활동을 이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있는데 교육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기초학력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중요합니다.

○박지혜 위원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또 기본인권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박지혜 위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기초학력 사업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내년도 기초학력 예산편성된 것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기존의 지역 단위 기초학력 사업은 보통교부금 체제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박지혜 위원 맞습니다. 보통교부금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요. 1765억 원이었던 것을 특별교부금을 갑자기 이렇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나머지는 보통교부금으로 돌렸으니까요. 잘 아시겠지만—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이미 우려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기초학력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평가하기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특정교부금과 보통교부금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보통교부금으로 내렸는데 이것은 그러면 지역의 교육청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초학력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보다 더 집중해서 책임교육학년제 지원이라든가 국가 기초학력 포털이라든가 새로운 구축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정부와 지방이 좀 더 균형 있게 하는 체제로 이제 간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그렇지만 변화가 너무 급격한 것 같고 저는 기초학력 문제는 전 국민이 고르게 혜택을 봐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별교부금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후속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초학력이 중요하다는 건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심으로 하고 지방에서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의 신영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경호처에서는 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경호처차장님 나와 계시나요, 대신?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어디 계시나요?

대통령이 평상시 체력 단련은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 관리는? 운동을 좀 하시나요, 헬스 좀 하시고?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산책하십니다.

○신영대 위원 유일한 운동이 산책이에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영대 위원 그렇게 해도 건강관리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어린이정원하고 체육관 등 산책을 하고 운동도 가끔 하십니다.

○신영대 위원 경호처차장님은 골프 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칠 줄은 압니다.

○신영대 위원 얼마나 치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최근에는 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전에 얼마 쳤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그때 그때 다릅니다.

○신영대 위원 어쨌든 경호실에 계시니까, 경호처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있어서 잘 치실 것 같아요. 그러시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신영대 위원** 골프를 대통령은 잘 치십니까? 몰라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오늘 뉴스 보니까 10월 12일 날, 11월 2일 날, 11월 9일 날 태릉CC에서 대통령께서 라운딩을 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대 그래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휴일 날 이용해서 당연히 라운딩 할 수 있고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절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10월 12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한국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날이고요 북한이 성명 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물풍선 날린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1월 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최초로 17%로 최저 지지율 찍었던 날이기도 하고, 11월 9일은 이틀 전에 대국민 사과했던 날이라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골프를 치시는 건 좋은데 이 시기가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해명을 트럼프 당선자와 친분을 쌓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하셨다고 대통령이 해명했는데, 제가 차장님한테 왜 여쭙봤느냐 하면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는 게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신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골프 거의 안 친다고 그러고, 그러면 연습장 가야하지요, 꼭 그러고 싶으면. 4시간씩 굳이 필드에 나가서 시간 허비하면서 골프 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치면 어떻게 해요, 차장님? 골프 못 치는 사람은 연습장 가야지요. 뭘 필드를 나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연습장 가게 되면 거기에 또 일반 국민들이 제한도 받고……

○**신영대 위원** 태릉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요즘 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니 없니 말도 많았고요.

○**신영대 위원** 차장님, 이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실장님도 안 계시고 정무수석도 안 계셔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님과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나와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렇게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꼭 트럼프하고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 트럼프가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함께 쳐 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으시면 연습장 가서 골프 연습하시고, 잘 못 치시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 공부.

지금 국제 정세가 엄혹하고 한국이 패성되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위협해질 수 있는데 골프로 외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아끼셔서 공부 좀 많이 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예, 대통령께 저희 참모들이, 안보실과 각 정책 참모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 보면 도대체 국민들도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중언부언, 앞뒤 왔다 갔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교육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여러 차례, 결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번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핑크가 발생했고요. 2023년 56조 4000억, 2024년도는 거의 30조 결손이 났습니다. 그 결과 정부재정도 어려워졌지만 결국은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 18조 3000억 원을 작년에 미교부, 불용 처리했어요. 올해는 좀 나운데 전체적으로 9조 7000억을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3조 2000억 원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맞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시·도교육청의 현실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안이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장관님, 잘 들리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이게 결국 실상 내용을 놓고 보면 물가 인상이랄지 경비가 오른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실제 학생들을 위해서 집행될 예산들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의견들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진보·보수를 떠나서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천창수 교육감이 지난 6일 날 기자회견 열고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2년 연속 세수결손 부담을 떠안으면서 일반사업비는 일괄 15% 삭감 편성했다.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충당한 1694억 원과 인건비·경상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마이너스 예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님은 지금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난 10월 18일 세수 재추계 발표 이후에 ‘이대로 세입 감소가 계속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재정이 취약하니까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니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당겨 쓰고 있지요, 각 시·도교육청별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그냥 시·도교육청이 있는 돈 다 쓸 수는 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에 근거해서 전체 기금 적립액의 70%를 쓸 수 있다, 50%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 이상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전라북도를 한번 봤더니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최대
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규모가 3950억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지급, 불
용 처리된 교육교부금을 보면 5582억 8000만 원이 감액됐으니까 실제 불용 처리된, 전북
교육청에 내려가야 될 불용 처리된 예산 대비, 결국 기금을 다 사용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규모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저희 교육부가 각 교육청별로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하
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결국은 교육재정교부금도 줄고 그동안 적립해 온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
금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각 지방교육청의 부담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요, 내년도에 유보통합 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국가가,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에서 지원했던 예산들은 그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6월 달에 발표했고요, 그 계획에 따
라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것은 그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당연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있습니
다.

○신영대 위원 어쨌든 보면 부총리께서 11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유보통합
등 교육부 9대 교육개혁이 올해 뿌리내리고 내년에 꽃피우면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불균형이 이런 거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표현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불균형이라는 것은 교육 불균형의 경우……

○신영대 위원 교육 불균형, 전체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소득별로도 교육 기회가 불균형……

○신영대 위원 이런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실제 유보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것 말고, 아마도 보건복지부에
서 어린이집 지원해야 될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과거
에 시군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했던 예산 이런 것들을 다 교육청으로 이
관하고,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을 하더라도 이것 이외에 유보통합을 함에 따라서 새롭게
유보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추가 편성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번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5세아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하자는 제안을 계속 해 왔고 또 교육부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꼭 편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예산을 봤더니 결국은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유보통합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교육청 관련해서 예산서를 다 꼼꼼히 봤는데요. 좀 살펴봤는데 예산도 증액됐다고 하지만 그게 미미한 수준이거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을 이어서 하는 사업인 거지 새롭게 유보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된 게 거의 없습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특히 5세아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가로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교육부의 요청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동안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유치원 교육과 지자체·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육 간의 교육의 질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어쨌든 간에 균형감 있게 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건데 결국은 이런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전에 제 질의에 부총리님 답변하는 과정 보니까 이것 역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이것 역시도, 제가 먼저 얘기했던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또 이것도 추가되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상교육 말씀드려 볼게요. 같이 통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상교육 예산 90% 삭감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서울에 사시니까 길거리마다 선거 앞두고서 ‘중단 없는 고교 무상교육 국민의힘이 챙깁니다’, 현수막 엄청 보셨잖아요. 보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 법이 한시법이라 기한이 종료돼서 이제 더 이상 지원 못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국고로 하던 것을 이제 지방비로 재원을 달리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드리는 건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방의 교육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라는 말씀 드렸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의 내국세 세수가 많아져서, 매년 늘어서, 한마디로 지방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이 많아져서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늘어났으니 이걸 가지고서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방교육청이 담당해라, 유보통합 부분도 더 배정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방교육청에 재정이 다 못 내려가고 있고 세수결손이 발생해서 교부세가 애초 목표했던 만큼 못 내려가고 있

고 더 나아가서 이게 부족하니까 기금까지 혈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업만 계속 추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여력이 많아서 10조 이상 쌓아 놔다가 그걸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반 지자체보다는 교육청이 기금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한 3.4조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증가가 있습니다. 그 증가액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AIDT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유보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영대 위원 저는 결론은, 전체 각 시·도교육청 세출 구조에서 실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몇 %나 되는 줄 아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굉장히 높습니다.

○신영대 위원 70%입니다. 예산 규모는 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30% 정도밖에, 교육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아까 서지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감사원의 직원 규모와 예산 규모를 말씀하셨거든요.

부총리님, 전국에 있는 교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한 40만……

○신영대 위원 40만 명입니다.

감사원 직원 숫자 몇 명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지금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신영대 위원 1200명의 조직하고 40만 명의 교직원이 있는 조직하고 예산을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교직원만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결국은 지금 정부 재정이 부자감세 때문에 세수가 적게 걷히니까 이게 연동돼서 지역에 내려갈 교부금이 적게 내려가고 있는데 이 적게 내려가는 교부금에 추가로 사업들을 계속 붙여 나가면서 이 부담을 오롯이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교육받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까 서지영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인당 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신영대 위원 그리고 아까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지성·선심성 현금 지원.

시골 학교 혹시 가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읍내가 아니라요, 실제 마을 단위 학교들 가 보면 아이들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학습 갈 때 돈 1000원을 못 갖고 갑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돈을 주기도 하고 뭘 사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학생들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하고……

○신영대 위원 그런 학생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입장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학생들 우선으로 지원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신영대 위원 그리고 행안부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쪽에.

장관님, 지방교부세 많이 줄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영대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은 지방재정이 취약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운용을 일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0원인 지자체도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좀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 데들은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또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조례에 의해서,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부에다가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신청한 게 있지요? 관련 수요조사 하셨지요, 올해 2024년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24년도에 교부세 감소로 인한 지방채는 세종시가 유일한 곳입니다. 37억 원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양도세탈지, 지방에도 지금 재정 수요가 적은 데다가 결국은 지방에서 재정자립도 매우 취약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적게 내려오니깐 어떻게 해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올해 전체적으로는 한 8조 정도 지방채 발행이 돼 있고요.

○신영대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것은 공공자금, 금융기관 빼놓고 공공자금으로 지방채 발행한 수요가 올해가 4조 9683억으로 파악됐어요.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규모는 8조고요.

○신영대 위원 그 8조라는 부분은 아마 일반 금융기관 다 포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럴 겁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내년 수요조사 하셨지요, 지방채 발행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영대 위원 얼마 나왔던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신영대 위원 한번 받아 보시고요.

제가 받은 것은 내년에 5조 2963억 원 정도의 지방채 수요가 조사됐대요,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통해서. 올해보다 늘어났지요. 결국은 지방도 해가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거지요, 세수 감소가 있으면서. 맞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영대 위원** 그러면 기재부2차관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 예산 내년엔 얼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100억만 집행하고 이제 지자체가 재정도 어려운데 은행, 금융기관 통해서 알아서 빌려서 쓰면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하려면 어차피 저희 중앙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사 주는 게 됩니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동안 교부세가 어떤 급격한 위기로 확 줄 때는 공자기금에서 지방채 인수를 많이 해 줬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보통 100억 정도 수준이다……

○**신영대 위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 들으면 이런 겁니다. 정부는 빚질 수 없으니 일반 국민들이 빚져라, 정부는 빚질 수 없으니 지자체가 다 빚져라,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중앙정부 채무가 오천만 국민이 지는 빚입니다.

○**신영대 위원** 그렇지 않지요. 급할 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어쨌든 국민들 빚을 더 적게 만들어 주고 나중에 경기를 부양시켜서 그걸 통해서 세수 투입을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받은 만큼 세금을 더 내겠지요, 경기가 좋아지면. 이것을 선순환 구조라고 보는 건데 지금 결국은 정부의 세수결손 부담이 국민들 또는 지자체로 이양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쩌나 하면 공자기금 같은 경우들은 지자체 입장에서 어쨌든 이율이 낮은 겁니다. 공자기금 지원 안 해 주면 결국 그 지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조가 넘는 돈을, 지자체들이 결국 돈을 어디에서 빌려야 돼요? 은행에서 빌려야 되잖아요, 1% 이상 이자가 비싼 곳에서.

이것 차관님, 다시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은 예산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살려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지방재정도 어렵고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에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전가시키는 이런 재정정책들은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신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지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서지영 위원**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의 질의가 조금 왜곡돼서 이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하시면서, 감사원의 인력 규모와 교직원 전체 숫자를 물으시면서 제가 마치 지방재정교부금 전체, 17개 시도 전체의 교부금과 감사원의 어떤 재정 상황을 비교해서 질의한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통일부와 여가부의 전체 예산 규모에 비교해서 각 교육청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것입니다. 아까 여가부가 1조 7000억 정도 된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서울교육청이 1조 9000억 그다음에 경기교육청이 3조, 24년 8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가 24년 8월 기준으로 18조의 기금과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한 저의 질문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장관님한테 아까 들으니 신영대 위원님께서 5세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증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위원장 박정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9000억이 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에 의해서 지방교육청 그쪽으로 넘어가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들하고 이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먼저 고교 무상교육, 1조가 좀 안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고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담배소비세분이 2년 연장이 되면서 그 액수가 1.6조 해서 더 큼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보한 걸 설명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의 지방교부금이 한 3.4조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고교 무상교육은 좀 수용해 주십사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교육감님들이 납득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많은 교육감님이라고 얘기하면 다 동의는 안 하신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시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질의하신 5세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삼사천억 정도 액수인데 저희가 계속 재정 당국과 협의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실은 여야가 다 공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정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저희가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재정 당국의 2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세 무상보육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5세 무상보육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일부 추가, 칠팔만 원 정도를 추가로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걸 저희가 23년 1월에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방안하고 올해 7월 달에 발표했던 유보통합 추진 시행 계획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는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하여간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원 정부안에는 5세 무상보육에 대한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산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부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태종대와 자갈치시장을 품고 있는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입니다.

특활비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정치적 레토릭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경찰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차관님, 특활비가 정말 정부에서 쌈짓돈처럼 쓰는 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특활비는 저희 예산집행지침상에 수사, 정보, 외교·안보, 국가 기밀활동과 관련된 데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어제 경제부총리께서 특활비의 역사성과 관행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좀 두리뭉실한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또 지금 현직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활비는 받는 사람은 이게 특활비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조승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관들한테 월정액으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이 되지요,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물론 봉급하고는 분리해서 입금이 되겠지만.

○경찰청장 조지호 이것은 활동비입니다.

○조승환 위원 활동비로 입금이 되겠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승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정식 예산으로 돼 있는 돈인지, 특활비인지, 특정업무경비인지 모르고 받습니다.

지금 저도 놀랐습니다. 의원실에 특정업무경비가 30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 봤냐 그러니까……

인혁처장님, 과 운영비가 지금 예산 책정이 얼마 돼 있습니까? 보통 과 수당은 인혁처에서 안 하나요?

답변 좀……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과 운영비는 예산처에서……

○조승환 위원 아, 예산처에서.

과 운영비가 보통 인원수에 따라 조금 가감이 있습니까라는 한 2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조승환 위원 15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국회의원실의 실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4급 2명입니다. 4급 2명이면 한 30만 원 받아서, 사실 일반 과도 과장으로서는 운영하기 힘듭니다. 힘든데, 그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특정업무경비라는 걸 가지고서 지원해 주고 필요한 영수증을 받고 또 영수증이 받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안 받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국회사무처사무차장 박태형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어떤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사무처도 그렇고 정부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관행이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잠재돼 왔다. 또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격오지 근무자라든지 또는 일정 기간에 있어서 특수한 어떤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으로서는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것에 쓰여 왔다. 그걸 모두 없애자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예산 구조부터 시작해서 정부 조직 구조, 직무급 제도 모든 우리 정부 제반의 제도가 다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고생한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감한다고 정부 공무원들 15일 동안 거의 밤새웁니다. 그 직원들하고 다른 데 국감하고 상관없는 데 있는 직원들하고 봉급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관행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이게 그렇게 부도덕하고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관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역사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지금 통일부에 특수활동비하고 특정업무경비가 얼마쯤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에는 그런 경비가 없습니다. 정보비가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없습니까.

YS,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실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개혁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각 부처에 국정…… 그 당시에 안기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혹시 기억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국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승환 위원 아니, 옛날에 옛날에 YS 전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실제로 통일원에도 국정원에서 편성해 놓은 통일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기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정보비로 썼어요. 그것을 전부 일반예산으로 YS가 개혁을 하셨습니다. 일차적으로 예산집행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혼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뭐냐,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통제받도록 하겠다라

는 그 절차가 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면서 지금 계속 투명화, 통제,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현금지출 금지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업무경비라는 것까지 생겨 가지고서 과거 특수활동비보다는 훨씬 투명도가 높아지는 이런 투명성과 통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부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가셨는데……

지방교육재정에…… 시골학교에 돈 1000원 못 가져와 가지고서 예산으로 돈 쓰는 거, 쓰면 안 되냐? 써야 되지요, 시골학교의 불쌍한 학생들 소풍 가면 빵이나 음료수나 사 갖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선생님의 선의에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런 역할을 해 오던 게 중앙정부에서는 특활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무부장관님, 지금 특활비 집행에 대한 내부지침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 결정하고 다 하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 특활비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 그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공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이상 공개를 하면 특활비가 기밀유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되도록 돼 있는데 기밀유지라는 그 본질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맞습니다.

저는 정부의 내부통제 시스템, 내부감사 시스템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정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신뢰 부분을 어떻게 더 확충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 특활비가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내부지침에 의해서 또 위원회에 의해서 내부통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 특활비 전액 삭감은 정부기능 마비다. 앞으로 마약수사, 이뿐만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마저도 앞으로 과 단위 운영비 받아서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해라,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또 그 목적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4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유독 심하다, 그거는 속기록에도 확인이 다 된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님,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몇 개 지검과 지청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 너무나 강하고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외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승환 위원** 지금 백골단이다, 야당에서 백골단이다 뭐다 하면서 경찰관들이 진압복을 착용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진압복 착용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진압복을 착용할 건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총괄 지휘하는 서울경찰청장이 판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진압복이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저도 썼습니다마는 진압복이라는 표현도…… 진압복이라는 표현 잘못된 표현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방호복입니다.

○**조승환 위원** 방호복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승환 위원** 그렇습니다. 경찰관들이 폭력 시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복 착용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의한 방호복 착용이 이게 백골단이다 하는 80년대식 사고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지금 2024년 현 시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민노총의 폭력 시위가 있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있었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 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관들의 방호를 위해서 방호복도 입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찰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방호복은 기본적으로 공격용 수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경찰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에 불과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전 모 야당 위원님 질의에서 신고된 것 외에 경찰에서 그대로, 허가라는 표현을 쓰셨습니까마는 신고된 것 외에 경찰에서 그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서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범위를 확대시켜 주지 않았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최초에 민주노총에서 집회 신고를 할 때 송례문을 기준으로 Y자 형태로 세 군데를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한 8만 명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공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집회 신고한 대로 수리를 했습니다.

다만 실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집회 장소인 송례문에서 덕수궁 대한문 앞 노상에만 집중적으로 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거의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밀집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조승환 위원** 차선 확대 요청에 대해서 수락하신 적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최초에 진행 방향 전 차로를 협의를 했었고 신고 인원이, 실제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2개 차로를 더 허용을 했습니다. 그랬고 2개 차로를 더 확보…… 그리고 2개 차로를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교행이, 1개 차로씩 교행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나마도 좀……

○**조승환 위원** 최소한 국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면서, 시위 참여하지 않은 교통 편의를 보장하면서 시위대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서 차선 확대 등의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국회의원 부상과 관련된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의원님께서 유튜브를 대동하고 현장에 오셨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최초에 저희 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장소 뒤쪽으로 안전하게 이격을 했는데 다시 경찰의 법 집행하는 그 뒤쪽으로 오서 가지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보면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 부분도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어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권력 집행이, 현재 지금 청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공권력의 집행이 없었다, 사실상의 공권력 집행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승환 위원** 운집한 상황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일이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잠깐 정책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부분에 관해서 기재부차관님이나 행안부장관님이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으로 주로 특정인의 공물 사용과 역무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서 국민적 저항도 적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는 세수가 굉장히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21.9%가 세외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서 저는 제일 문제점이 악성 미징수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세 징수율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징수율은 80% 중반대에서 계속 그대로 담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게 지난 연도 수입이, 당해 연도에서 받지 못한 지난 연도 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혀 가지고서 징수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서는 장기 미징수액 개선을 위해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세출에 대해서는 감사원장님이 감사도 많이 하시고 다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세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세외수입 특히, 물론 지방세에 관련된 전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결국 지방세수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무관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방세수에 이렇게 연체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상 회사가 망했다든지 도저히 주심이 불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손쉽게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결손처리할 부분들은 지방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결손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세외수입 중에서 더 징수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방세에 준해서 받을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잘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행안부장관님,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저는 시간 1분 남았습니다마는 추가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잠깐만요.

오전 질의는 윤준병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허영 위원 간단하게, 지금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양측의 사실에 대한 진위 공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애초에 집회를 주최한 측의 집회신고서 그리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공문 수발신 내용 그리고 현장에 대한 채증영상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경찰청장님, 들으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특별히 가능하지 않을 범위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찰청장 조지호 채증영상은 수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저 혹시 의사진행…… 허영 간사님과 같은 발언인데……

○위원장 박정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위원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자료 요청이 가능해서 요청이 된다면 저한테도 좀, 저희들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 양당 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입니다.

법무부장관님, 법사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또 특정업무경비 이게 삭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관점도 있던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나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윤준병 위원** 또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행태들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꽤 나오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수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윤준병 위원** 있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반환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고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특활비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최소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통제를 받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최대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려고 합니다만 특활비라는 비목의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이 기밀 유지라고 하는 미명하에 실제 그 내용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돼야 되는 그 방향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들여다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저희들이 판결에서 그렇게 공개하라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예산을 심의·확정해 주는 국회 입장에서 예산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사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신 정보비, 국정원 예산 관련해서 정보위에서 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보위는 별도의 보안서약 규정도 있고 그걸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사위에서는 그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요. 특활비 부분은 그걸 하고 있고 특정업무경비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이 내용은, 저는 우리 정부의 공직자들, 저도 공직자를 해 봤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본인의 아성 속에서 본인은 떳떳하고 청렴한데 왜 외부에서 믿어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실제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범위 내에 본인이 놓여 있어서 그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 자기를 놓고 제대로 그 통제에 따르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것하고 좀 다르지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국회의 통제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 통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국회에서는 예산 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의 투명성 또 시스템적으로 받아야 되는 통제 이걸 적절히 받아야 예산심의 또 편성이 가능하단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6개 권력기관 특활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총액이 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범위가 적정하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공직자분들도 다 이해하고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내용 중에 누수되는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바로잡아서 소위 지금 예산편성에 증액하자고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민들 보호하자고 하는 내용에 최소한 그중의 절반이라도 사용하면 승수효과가 있어서 수조 원에 해당되는 지역경제에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내용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소상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원전과 관련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비경제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도 비상계획구역이라면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셨고 입법적으로도 정의가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윤준병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도 개정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해당되는 내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까지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가장 늦게 전남 8월 16일 조례 제정을 해서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15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전 때문에 사회적 비경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같은 비상계획구역이라면 같은 재정적인 수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지역, 한빛원전이라면 영광원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북의 경우에도 행안부의 교부세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원전이 소재한 4개 시도에서 조례 개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윤준병 위원 다 끝났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 배분 비율과 지원액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준해서 소외된 지역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윤준병 위원 전에 제가 결산심사 때도 장관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지금……

○윤준병 위원 그런데 그때가 9월인데, 두 달이 지났는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북의 경우에 아주 최근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윤준병 위원 경북 조례도 5월 23일 날 됐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배분 비율이…… 추경이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추경 가지고 5%…… 거기는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한 건데 아시다시피

원전을 기준으로 하니까 원전의 발전량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그다음에 20%에 해당되는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가 여러 가지 내용을 따져보고 하겠습니까 하는 내용은 나쁘게 혹평하면 시간 끌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시간 끌기 할 이유가 없고요……

○**윤준병 위원**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장관님 예전에 결산심사 때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신 만큼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신속하게 재정 지원 마련해서 조속하게 집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법 시행된 게 올해 5월에 시행돼서 9월 13일 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데 아직 사무처 구성이 안 됐고 또 직제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안 됐고 시행령도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연내에는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예결위에 올려야 되고요. 지금 조직이나 인원이거나 이런 것들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것도 행안부에서 해야 될 내용을 빨리 해 주셔야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니 만큼 그 내용이 차질없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정애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윤준병 위원** 제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다시 더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검토한 내용과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2차 동학농민혁명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학술적인 이해와 평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저는 장관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지금 헌법 전문에도 넣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기술하고 해 왔어요. 그리고 입법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제정되면서 숭고한 정신을 우리가 이어 가자 이렇게 기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당시 내용하고 2004년에 입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으로 입법적으로도 이미 위상을 정리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 항일운동이나

또는 개혁적인 의미를 받아서 참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승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역사학계의 내용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내용은 그렇다면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입증인 안 됐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계승하자고 기술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또 역사교과서에서도 이 내용을 기리고 계승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훈부가, 보훈부만 다른 세상에서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준병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님께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 제2차 동학혁명 참가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정부도 이 부분을 국권 침탈 전으로부터 1945년 8월 14일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계라든지 전문가도 같은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엄연하게 독립유공자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차원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견들을 들어 본 결과 신중해야 하며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그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에 다른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준병 위원 장관님,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데 행안부 따로 있고 문체부 따로 있고 국가보훈부가 따로 있나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고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도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이 존중해 주는 것이지 국가보훈부는 어디 일본보훈부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항일독립운동 기산점을 을미의병부터 했다고 임시정부 시절에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자주 말씀하시던데 임시정부시절에 동학농민혁명은 ‘동학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뀐 내용을 제대로 바로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역사는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임시정부 시절 얘기만 레코드처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가 일관된 인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장관이 ‘문체부장관 따로고요 행안부장관 따로고요 우리 따로예요’ 이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제대로 인식하시고 그 내용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내부적으로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의 일관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한 것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전체가 합의를 해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은 같이 가야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훈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위해서 존재하고 독립과 호국과 민주에 관련해서는 한 치의 그러한, 말씀하신 그 범주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지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게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준병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아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지적을 하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제대로 받아서 그런 내용을 수용할 준비나 해야지 무슨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변명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 국민들이 변명이라고 느끼고 있을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민적인 공감대와 전문가와 법률적인 부분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국민적인 공감대 해 봤어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는 일단은 2020년부터 했던 부분입니다.

○**윤준병 위원** 그거 몇 사람들 듣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레코드처럼? 제대로 검토하라고 얘기했으면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문체부 따로 행안부 따로, 보훈부가 섬나라 땅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그 다르다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윤준병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은 같아야지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향후에 법률적으로 다 모아진다고 하면 제가 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제대로 검토 좀 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윤준병 위원** 지금 학령인구 줄고 지방에 특히 학교 폐교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폐교된 게 한 4000여 개소 되잖아요. 그중의 한 10%는 아직도 활용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중요하고 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폐교 문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지자체에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셨고요. 특히 지자체가 사실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훨씬 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적절한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자체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또 교육청과 당연히 협의를 해서 전향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또 지자체에서 사용하려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회계 간 이전하거나 그러면 유상이관이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해서 무상이관이 가능하도록,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입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교육부도 그런 방향으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감사원장님, 감사원의 공무원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감사공무원들?

○**감사원장 최재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윤준병 위원** 감사원의 감사공무원들을 감사원장님은 얼마나 신뢰하시냐고요.

○**감사원장 최재해** 얼마나 신뢰하냐고요?

○**윤준병 위원** 예.

○**감사원장 최재해** 직접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준병 위원** 아니, 감사원장님이 신뢰를 어떻게 하는지는 본인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직원들이 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제가……

○**윤준병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원장님이 직원들을 얼마나 신뢰하냐고 여쭙본 거예요.

○**감사원장 최재해** 제가 직원들을요?

○**윤준병 위원** 예.

○**감사원장 최재해** 100% 신뢰하지요.

○**윤준병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일하는 공직사회 추구하잖아요. 감사원이 일하는 공직사회를 막는 장애요인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무래도 감사가 약간, 감사의 부작용은 항상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국가의 필수적인 작용이지만 감사로 인해서 약간 공직이 위축되고 행정작용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준병 위원** 제가 공직을 하면서 감사를 한 30여 년 받아 봤어요. 그런데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원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보다 훨씬 달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뢰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서서 감사원이 실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감사원장 최재해** 그런 면에서 당연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원장 최재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박정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광주 동·남구의회 안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저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 노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과 같이 역대급 세수결손이 생기고 또 긴축재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지요. 우리 재정 당국에서 내년도에 27조 원의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내역은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예산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또 공무원들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쓰는 업무비나 여비 같은 행정 운영경비 이 부분을 조금 절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러한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국민들에게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지방의 교부금을 줄여 가면서 하는 그런 고통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인사혁신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이 얼마가 되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지금 인상을 3.0% 저희들이……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18년부터 이렇게 보면 지난 8년간 비교해 가장 지금 높습니다. 그리고 통상 어려울 때 또 하고 있는 게 뭐니까? 정무직이나 고위공무원들 월급을 일부 반납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또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걸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대급 세수결손 그리고 역대급 긴축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지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봉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처우 개선도 필요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경비도 많이 늘려 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민간 봉급자의 실질임금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75%의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이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3% 그리고 고공단의 월급 반납과 같은 과거 어려웠을 때 했던 이러한 절감을 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년간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수인상률을 낮게 책정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에 대해서는 보수를 동결하였고 정무직에 대해서는 10% 반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고통

분담한 그런 내역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다른 어려운 시절 때에는 공무원들에게 어렵지만 그러한 고통 분담을 계속 호소해 왔다는 부분은 분명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으로는 우리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직접 쓰는 행정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제가 쭉 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특활비, 특경비, 관서 업무추진비, 여비 등입니다. 대표적인 것 4개만 지금 잡았는데 이게 내년에 금년 대비 한 3.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먼저 내역별로 보면, 특수활동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특활비를 보니까 안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한 4.4% 늘었거든요. 이제까지 특활비는 좀 줄여오는 게 관행이었지요.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지속적으로 특활비는 줄여 왔습니다. 이런 추세에 반하는 증액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부처별 내역을 보니까 딱 2개 기관, 최고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호처 두 군데만 늘었군요. 그리고 나머지 부처는 동결 또는 축소가 된 겁니다.

법무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8억 원 증액했지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봤더니요, 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보이스피싱 범죄, 가상자산 범죄, 금융범죄 명목으로 각각 이렇게 올렸거든요.

법무부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등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범죄 특활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금융범죄는 도이치 사건 한 건이 아니고 남부지검에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융범죄든 많은 분야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수사 특활비 5억 원 증액에 대해서는 그 증액 사유와 설명을 우리 상임위에서 하시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말씀 좀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마약범죄도 지금 검찰이 단순 투약범은 수사를 하지 못하지만 그 외에 마약유통사범과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도걸 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는 법무부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돈을 활용해서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잘 해서 국민들에게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하느냐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경비를 보겠습니다. 특경비는 특활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이 특경비도 보니까 지금 63억이 증액이 됐는데 경찰청·법무부·경호처 3대 기관에 늘어난 게 77억 원이에요. 다른 기관들은 준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경찰청장님, 이렇게 경찰청에서 56억의 특경비가 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내근 직원들,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지 않던 내근 직원들 약 3000명을 줄여서 현장 인력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무경비를 수령하는 부서의 인원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안도결 위원** 그렇습니다. 경찰청 고생하고 계신 건 알지만 특경비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 지속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경비는 증빙내역도 일부 공개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와 경찰은 기밀성이 다 해 가지고 이 경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관서 업무추진비 한번 이렇게 쪽 보십시오. 많은 부처를 보면 국방부, 경찰청, 경호처, 대비실, 법무부 여기가 늘었습니다. 다른 데는 더 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권력기관 위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특수활동비 또 관서운영 업추비, 특경비 등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주 깨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역 그리고 그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준비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초·중등교육 관련해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지요. 그동안에 국비에서 제공했던 고교 무상교육, 문화예술강사 예산, 스포츠강사 인건비 예산 한 1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내년부터는 그냥 지방교육재정에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국비는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국고 지원을 하면서, 당시 2019년이지요. 우선 3년 동안 국고에서 한 절반 정도를 댁니다마는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정책연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대체 재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당시에 그렇게 발표를 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관련된 정책연구 그리고 대안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또 관계부처 협의가 아주 진지하게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소득과 연계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늘어 왔고 학생 수는 또 반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만 하더라도……

○**안도결 위원** 제가 여쭙어보는 것은, 지금 교육재정 여건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정책연구와 그리고 대안에 대한 연구겠지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냐 이거지요.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 ‘좋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냐 이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협의와 연구들은 계속 쪽 있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가 충분히 양해를 드렸고 모든 교육감님들이 다 좋다고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안도결 위원** 이게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만만치 않기는 합니다.

○**안도결 위원**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견수렴, 현장에 대한 설득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법이 일몰되니까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 가지고 국회에 그냥 뜨거운 감자를 떠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안도결 위원 지금 교육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요? 법안이 소위는 통과됐습니다만 안전조정위원회에 지금 회부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안도결 위원 재정 당국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교육부의 입장이지요. 교육부는 지금 ‘세수결손 및 신규 수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애매모호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 여건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지금 교육교부금은 축소되고 있는 추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교부금 자체는 내년엔 3.4조 원……

○안도결 위원 3.4조 늘었지만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이 생기면서 10조 그리고 금년에 또 추가로 4조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세수결손은 있었습니다.

○안도결 위원 예, 세수결손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가지고 한 4조 정도 는다고 하지만 내년도 세수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약간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라든가 세수가 그렇게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 여건을 분명히 부총리께서는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지금 내년도에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떠넘기는 것, 아니면 새롭게 신규 교육사업들 소요가 어떻게 되지요? 제가 파악한 것만 봐도, 저기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만 한 6조 가까이 됩니다. 유보통합, 고교 무상교육……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내년분만 보면 저희가 추계한 것은 0.9조로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보통합, 늘봄학교, AIDT 포함한 디지털 교육혁신 다 합해서 0.9조……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풀로 이렇게 된다면 이 소요가 추정되는 거고, 이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정처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조금 저희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면 6조의 새로운 신규 소요가 발생을 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0.9조로 지금……

○안도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방교육교부금이 감당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교육교부금 여건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입이 72조 정도 되거든요. 그 내역을 보시면, 세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 학교운영비 이것은 꿈쩍 마라 아니겠습니까. 고정비용이지요. 공공요금, 지자체 보육료 보조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유일하게 재량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학교환경 개선, 전체 지출의 한 15% 정도 되네요. 이게 한 11조 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이삼십% 움직인다고 하면 이삼 조겠지요? 이삼 조 정도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우선 판단할 수 있겠지요.

다음 한번 봐 보십시오.

재정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별도의 주머니가 또 있다 이거지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기금, 별도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지출 소요에 대비한 예비 재원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세입결손이 발생한다든가……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세입결손이나 특이 소요가 발생했을 때 쓰는 아주 한시적으로 지출되는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세수결손 등으로 해 가지고 잔고가 쪽 줄어요. 20조에서 6조 정도로 내년에는 준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교부금 세출이 전체적으로 한 70조 되니까 10% 정도는 여유금으로 잡는다 하면 내년에 6조, 거의 바닥,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정 전입금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일도 손을 댈 수 없고 연년세세에 들어가는 신규 소요를 이걸로 다 충당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 되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와 제일 차이가 나는 것이 신규 정책 소요를 위원님이 6조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이게 0.9조로 충분히……

○안도걸 위원 내년에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이게 조만간 현실화될 소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것을 떠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소요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는 교육부장관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 당국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부장관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장래 가용재원 있잖아요? 자체수입이라든지 교육교부금이라든지 적립금, 장차 수입이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현재 예산사업 소요가 장래에 어떻게 될 건지, 그 격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여유 재원 아니겠습니까? 여유 재원이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소요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방이 자체적으로 감당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그것을 국가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좀 나와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논의가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저희가 그 계획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원실에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셨어야 되지요, 지금 국회에서 이거 논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 현장, 교육계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게 논박이 이루어지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해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부족했다라는 점이 문제고. 지금 그래서 교육계, 교육감협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원실에 자료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결소위에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다음에는 지역경제 관련한 예산을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지방이 지금 어렵습니다, 지방재정이. 작년에 8.2조, 금년에 또 추가적으로 2조 2000억 정도 해서 10조 4000억 정도 아마 줄어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 크게 늘지도 않습니다. 3000억 겨우 느네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또 지방채 인수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실상 완전히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2조 9000억이? 그래서 지방에 대한 국고 지원은 매우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지역은 아시다시피 세수라는 게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부동산이 죽었기 때문에 자체 세입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중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세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없어지고 또 자체 세입은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지방을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관련되는 지방채 인수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이거 대폭 이렇게 감축을 해 버리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지자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작년의 테미지가 있어서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미교부되는 교부세 규모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반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약 2.2조가 되고요.

○**안도걸 위원**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나머지 2.2조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가 문제인데요. 그것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7조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 따라 사정은 좀 다르지만 이걸 활용을 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는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에 세수결손 대책 기획재정위에서 많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지방교부세 감축분을 줄여라라고 해서 아마 우리 재정 당국이, 차관님 계십니다마는 규모를 최소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역사랑상품권이 논란은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나름대로 현장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조 넘게 융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라 그러지요,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한 266만 그리고 업종도 다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굳이 가맹점도 제한되어 있고 또 발행 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지요. 온누리상품권, 이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용성은 있겠지만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야당 대표의 대표사업이다라는 어떤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유용한 기제가 되는 예산을 그리고 사업을 활용을 못 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한번 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관련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외교부차관입니다.

○윤종오 위원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걱정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또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삭감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북미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 바도 있습니다. 북미 외교를 전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는 아니더라도 북과 다시 협상을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혹여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못하고 패싱을 당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서 결국은 오물풍선이 날아들게 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작해서 북한에 대한 정세 개입력을 스스로 차단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급기야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병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하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는 파탄 상태에 이르렀고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적대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가치외교의 실체이고 또 한반도 위기의 이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만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저희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신행정부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모든 분야의 방안들을 검토해 왔고요.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통화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들어설 신행정부와의 그런 관계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까지 그런 상태였던 북과의 적대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든다든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함께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부가 다른 부분은 부족할 수도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제발 미국과 일본에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국익에 기반한 외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안부장관님, 계시네요.

지금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윤종오 위원 국토부에는 철도 특사경이 있고 특허청 수사관이 있고 검찰에 마약수사관, 이런 특사경 제도가 있는데요. 동대문구에서 노점 단속 특사경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노점상과의 마찰 최소화 또 노점상 인권 보호 철저 이렇게 명시되어서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진도 나오는데요, 과거 용역깡패들이 막 마구잡이로 철거하고 이럴 때하고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한번 실태를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동대문구하고 달리 노원구는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상인 대표, 노점상 대표, 주민 대표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하거든요. 사실 인류가 탄생하고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노점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노점은 영원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도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구청장을 했던 경험도 있는데 어떤 주민들은 단속을 해 달라 하고 또 당사자들은 생존권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도한 단속 이런 부분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서 생존권도 보호되고 또 주민들 편의도 증진시키고 이런 부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윤종오 위원 그다음에 장관님, 행안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물론 제가 당선되기 이전에 상반기에 올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배분을 하면서, 이게 지역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집권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17억, 15억인 반면에 야당 의원님들은 그

반도 안 되게 언론에 버젓이 나다 보니까, 누가 능력 있는 국회의원인가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도 아니고 참 억수로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전에도 이런 지적들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가 긴급한 재난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집권 여당 의원님 계신 데만 재난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윤종오 위원 이런 지적 앞으로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고, 집권 여당 의원님들 다른 부분으로 챙길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창피 주듯이 해야 되겠습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특별교부세는 위원님 말씀대로 평소에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수요가 예상될 때를 위해서 남겨둔 건데요.

○윤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또 평상시에 재난과 관련된 예산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곡해돼서 이렇게 언론화되니까 아주 하여튼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어쨌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한테 불공평하게 나눠진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재임 이후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종오 위원 신경을 썼는데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근무시간과 관련해서 기재부차관님, 전에 제가 7시간 노동하는 곳이 있다, 또 6.8시간 노동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6.8시간 노동하는 곳은 주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주6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6.8시간을 하는 곳이 있다, 이런 것이 공무직 또는 1차로 받은 자회사 이런 곳에서 했는데 통계는 안 잡힌다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확인된 곳은 좀 정정해 주시지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의 환경직 노동자들 7시간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예산 확보하려니까 4억 80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확인된 곳은 기재부에서 반영을 좀 해 주시지요, 8시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 별도……

○윤종오 위원 자회사 것 말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교통공단의 본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도로교통공단이요?

○윤종오 위원 예, 소속 환경미화원입니다, 직접 소속 환경미화원.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것은 저희가 보겠습니다. 원래 도로교통공단은……

○윤종오 위원 청장님, 경찰청장님 어디 계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여기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지금 차관님도 모르시고 별 노력을 안하신 것 같네.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재정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재정 여건 늘 어렵지요. 언제 기재부가 돈 많다 한 적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요불급한 것 중에서……

○**경찰청장 조지호** 지적하신 대로 도로교통공단의 실무자들이 하루 7시간 근무하면서 다른 공단들에 비해서 조금……

○**윤종오 위원** 출근했으면 8시간 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사회적 약자라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님 7시간 근무시키고 임금 적게 주면 좋겠어요? 입장 한 번만 바꿔 놓으면 이것은 바로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결해 주시고 그와 관련돼 있는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부분도 제가 복지 3종 세트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식대 10만 원인데 14만 원, 이게 일단 기준금액이에요. 이것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고 1년 전체 예산을 다 합쳐도 80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렵다, 예산 안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분쟁이 촉발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두 가지 이번 예산 때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양희동 열사의 자살 방조했다는 명예훼손 사건 혹시 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윤종오 위원** 그 CCTV도 유출됐는데요. 청장님께서 서울청장 계실 때 직접 수사도 지시한 사건인데 기억은 나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것 지금 CCTV가 유출되고 나서 조선일보가 여하튼 방송을 했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윤종오 위원** 그 CCTV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경찰에서 유출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경찰에서 유출된 건 아닌 걸로 확인……

○**윤종오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한 거네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런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다른 수사는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사가 미진하고, 지금 경찰 아니면 검찰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제대로 수사를 하셔서 가지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수사를 통해서, 경찰·검찰로 확정하실 게 아니고 수사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오 위원** 어쨌든 간에 자살을 방조했다, 유서를 대필했다, 이건 엄청난 인권침해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이런 중대한 사건을 1년 6개월 동안 묻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지켜봐야 된다, 언제까지 지켜볼 거예요?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종오 위원 너무 오래 진행된다는 거지요, 다른 수사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잘도 하더니만.

하여튼 빨리 수사해서 가지고 이것 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때 건설노동자들 수사한 것은 건폭 몰이로 좀 무리하게 수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율도 매우 낮았고요. 경찰들한테 특진 걸어 놓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조했다, 유서 대필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빨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님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아래께 민주노총 집회가 있었고 민중총궐기가 있었는데 강경진압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서서는 경찰이 충돌을 유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충돌이 심해서 앞장서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몸싸움하는 과정에 말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찰들은 뒤에서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분들이 ‘밀어, 밀어’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집회 무대가 있는데 무대 바로 뒤편에 방송차량을 갖다 놓고 계속 불법집회라고 방송하면서 지키지 않으면 해산조치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집회신고는 도로 반 폭이 집회신고 허가 난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전체 도로를 점거해서 앞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경찰 병력이 길이가 최소한 500m 이상 되는 길이의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가 대충 세도 수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거기에……

○경찰청장 조지호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고 그런데 계속 충돌을 유도했고요. 제가 거기에…… 사람이 안 다쳤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사람이 다쳐 가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했고요. 거기에 총경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위험하다, 일단 병력을 조금만 뒤로 물리면 제가 다른 노동자들은 자리에 앉히겠다 하는데도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서울경찰청장한테 연락하라, 현장에…… 총경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 판단 능력 없어서 뭐 하려고 현장 나갑니까?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번 시위에 대처하는 것이 혹여 윤석열 정권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이것을 좀 폭력을 유발시켜서 그런 집회로 변질시키려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 오해 안 받으시려면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신고 범위 벗어났으면 나중에 신고 범위 벗어난 것에 대한 처벌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즉석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거기에서 일반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불법 상태가 1시간 반 넘게 지속이 됐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명동, 고궁……

○**윤종오 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요, 여하튼 시민들이 많이 걸어 다닌 것도 맞고요. 집회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시민들 통행 못 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강경 대처하면서 노동자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던 것이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더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문체부장관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여기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정말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또 학교 예술교육 수업의 빈 공간을 채워 주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요.

그런데 여하튼 정부 예산이 2023년도에 574억, 2024년도에 287억으로 절반으로 삭감됐고 또 내년은 80억이라는데 실제적으로 예술강사한테 가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교육청하고 좀 나누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어쨌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재정 원칙하에서 작년부터 이미 국고 예산은 좀 줄었고요.

현재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전라북도, 서울,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 예술강사를 진행하겠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의 50억 증액되어 있고요. 서울은 아직 예산편성 안 해서 아마 추경으로 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예술교육 강사도 벌써 한 250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은 이미 좀 증액을 한 지역이 있고 또 올해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혹시 좀 피해가 간다라고 생각되는 예술강사들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늘봄교육도 2학년까지 확대되고 또 사회예술교육을 굉장히 확대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나머지 예술강사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그런 쪽으로 다 배분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여하튼 간에 예술교육을 피해 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정부 예산은, 다시 지역교육청에 더 내려 줄 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미……

○**윤종오 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좋습니다. 문체부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교육부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앞에서 문체부장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과정에 관련된 예산들은 지방교육청의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지만, 워낙 지금 늘봄학교나 이런 쪽에서 가장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예체능 관련입니다. 또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지역교육청들이 담당했을 때 오히려 지역 밀착형으로 더 좋은 강사들을 확보하고 또 수요도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예산이 어디서 나오든지 상관없이 거기의 지금 교육을 받는 해당 학생 숫자는 줄지 않는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합니다.

○윤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하시는 선생님도 현재 수업하는 시수 정도는 최소한 유지한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유지시키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역마다 그 특성이 다르고 그래서 중앙에서 전 지역에 있는 예술강사를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아마 잘 정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은 두 장관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술교육 강사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고용 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잘 챙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마산합포입니다. 그냥 앞으로 경남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경찰청장님, 지난 토요일 집회로 경찰은 얼마나 다쳤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105명이 다쳤습니다.

○최형두 위원 요즘 경찰 시위 진압을 주로 진압 방식으로 해서 강경하게 공격형으로 합니까? 백골대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경찰청장 조지호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이 경찰관들이 이전처럼 전경이 아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직업경찰들이지요, 다들?

○경찰청장 조지호 직업경찰관들입니다.

○최형두 위원 한 분, 한 분 정치적 성향도 다 다르고 또 한 집안의 귀중한 자식이자 또 가장이자 또 우리 조카이자 그렇습니다.

그날 폭력 사태는 없었습니까? 시위대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폴리스라인을 밀치고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폭력시위였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쇠파이프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위원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적 시위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평화적 시위를 위해서 여경을 폴리스라인 앞에 세우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한때 그렇게 운용을 하다가……

○최형두 위원 그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리고 또 여경의 고유한 업무도 있을 수 있지만 여경을 그렇게 위험한 시위 현장의 전선에 내세워서 한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평화로운 시위, 지금 집회·시위를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 출동의 목적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건 당연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불상사가 없도록 관리하셔야 되는데 다만 경찰관들이,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많이 다치는 사태는 없어야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전 경고 또 사전 계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고, 경고하고 계고한다고 해서 시위대를 진압할 방법이 없습니까……

요즘 최루탄 쏘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최루탄 쓰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이전에 80년대 시위 현장에 있을 때는 참 대단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철 지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이야말로 우리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주간이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경찰관들 주취폭력에, 시위폭력에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법치라는 것은 정말 제로 톨러런스(zero tolerance)라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시위 벌이면 바로 수갑 채웁니다. 그런 장면 보셨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외신을 통해서 봤습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나라였으면 의원에게 수갑 채우면 큰일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위대 역시도 반드시 질서를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의사표시……

○경찰청장 조지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찰이 물리력 충돌을 조장했다 이런 것은 저

는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물리력 충돌을 가장 싫어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관들 옛날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경찰관들도 있고 또 투표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집안의 귀중한 가장이자 자녀이자 조카라는 사실을 시위자, 시위하시는 국민들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오셨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1차관입니다.

○최형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ODA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의 지적도 그렇고 또 많은 야당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걸 좀 째자, 감액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어보겠습니다.

6조 3000억이나 이례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가가 되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수원국가로, 이제 수혜국가에서 수원국가로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인식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국가지요? 2010년에 가입했는데, ODA를 확대해 왔지만 절대적 규모는 어느 수준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OECD DAC 국가 중에서 밑의 수준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지요. 후순위지요. 그래서 글로벌 톱10인 우리 수준에는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되기 전에 기재부 출입했을 때 그때도 이미 우리 국가에서 우리가 큰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높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ODA 금액의 국민총소득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 ODA 금액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비율?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1.7% 정도……

○최형두 위원 0.17%입니다.

DAC 회원국 평균은?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0.3%……

○최형두 위원 0.36%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줄라매고 있습니다만 만일 ODA 예산 6조 7000억을 국회가 승인해 준다면 우리나라 ODA의 GNI 대비 비율은 0.29%가 됩니다. 그래서 OECD 권고인 0.3%에 근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 수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은 비단 윤석열 정부나 우리 여당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북방국가 ODA, 마침 이번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ODA 예산에?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당시에도 북방국가 ODA를 2배 이상 늘리자 그랬습니다, 보건의료·디지털. 그런데 여러 가지 ODA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힘든데 ODA만 많이 늘려서 어렵다는 것도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건설적인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보면 수원국가의 사정이…… 수원국가인가요, 수혜국가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수원국가입니다.

○최형두 위원 수원국가의 사정이 아직까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예산을 맞추어도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집행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는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그 예산은 삭감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ODA 감액을 요청하는 하나의 사유가 되는데.

저는 이 ODA 예산을 우리 대한민국도 좋고 또 수원국가에게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바라는 수준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도움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리 놓아 주고 또 우리 글로벌 펀드에 넣어서……

그리고 또 하나 변화는 그동안 우리 외교부가 주로 양자 외교의 한 방식으로 양자 지원 방식을 많이 택했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게이트스 재단하고 오픈 필란트로피, 글로벌 펀드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걸 그렇게 한 국가별로 주지 마시고 한국도 글로벌 펀드에 같이 돈을 주시면 보다 규모 있게 아프리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절끔 500만 달러 주고 저기에 700만 달러 주고 한다면 이 글로벌 펀드랑 겹쳐지기도 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지난번에 이미 했지요? 그게 유명한 바이든-날리면 사태의 단초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글로벌 펀드의 사무차장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결단으로 글로벌 펀드가 아프리카의 질병과 또 그로 인한 사망, 빈곤을 퇴치하는 데, 질병 퇴치에 큰 도움을 줬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만 명의 사람을 구했다고 아주 크게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 있겠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국내 예산은 좀 쪼들립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차관님 들어 보셨습니까, 미네소타 프로젝트?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최형두 위원 저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50년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공적 원조를 해 주는 방식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험프리 부통령이 마침 미네소타 출신이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적 원조를 미네소타 대학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의학 또 농학 또 공학, 서울공대, 서울의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이게 사실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1950년대 말에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랬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최형두 위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주는 ODA 중에서 많은 경우, 세계 각국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도 하는 다리 놓아 주고 철도 놔 주고 이런 것 정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이 해 주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들을 해

주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교육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미네소타 대학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장차 우리 공학의 기초가 되는 큰 분들을 가르쳤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또 우리나라의 대학원에서, 안 그래도 우리가 이공계 인력이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공계 인력이 자꾸 외국으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공계 인력을, 오히려 최우수 이공계 인력을 외국에서 ODA 방식으로, ODA 지원을 통해서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육을 시켜 주자.

지금 예컨대 우리가 ODA 예산을 아세안 국가 한 국가에 줘서 의료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ICT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환경이 아주 고급 기술을 배워 주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가르친다면 정말 최고급 인력을 기르게 되겠지요. 그분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ODA 확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공계 인력이 부족해서 내후년까지는 3만 명 정도의, 많게는 6만 명 정도의 AI 디지털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이스트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R&D의 남방한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판교입니다, 판교. 판교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울산, 존경하는 윤종오 위원도 울산이지만 울산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눈물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나 하니까 현대중공업이 R&D 인력 부족으로 R&D 본부를 판교로 옮겼습니다. 현대를 통해서 울산이 컸는데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인력이…… 왜 그랬느냐? R&D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LG전자, 정말 글로벌 제조 기업들, 기가팩토리급의 제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회사 회장을 만 나서 ‘우리 창원이나 마산에 R&D센터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분 말씀이 R&D 센터는 고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판교 이남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남방한계선이 그렇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지금 아세안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간혹 지방대학 석박사 논문 중에 영어 논문으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세안 국가, 특히 베트남 같은 학생들이 쓴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방대학에도 많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들을 우리가 ODA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예컨대 외교부의 ODA 자금 중에 한-아세안 협력기금 같은 게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한 50억, 첫 연도는 한 100억 하면 예컨대 학생 일인당 한 5000만 원씩,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100명을 하면 50억이지요. 50억을 떼내서 카이스트가 가르치고—영어로 가르칩니다—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오션, 이 같은 큰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그런 핵심 인력들을 OJT로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나중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스칼라십을 주고 그리고 그 대학 캠퍼스는 경남에서, 예컨대 경남대학이 내놓을 의사를 실제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ODA 예산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아시아 내의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혹시 차관님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동안 개발도상국들과 얘기를 해 보면 ODA 원하는 가장 많은 분야가 교육이나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서 현재 한 4만 여명의 아세안 인재들을 교육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 분야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런 석박사 과정의 아세안 학생들을 한국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잡을 주고 또 그 이후에 그분들이 원하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한-아세안 간에 엄청난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공학도 그렇고요. 이 부분 지금 카이스트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경남도지사와 또 경남대학교가 캠퍼스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지, 한화오션 이런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인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능통한. 그 부분 당장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한-아세안 기금을 즉각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아세안과 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한-아세안 연대구상에 따라서 이미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모범적으로 성공한다면 우리 지역 대학들에 특화된 외국 유학생 인재 유치 계획, 그래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50년대의 미네소타 대학이 되어서 한국의 대학들을 또 한국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총리님, 교육부총리님과 이 정부가 지금 우리 교육 혁명을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아이들이 게임하는데 태블릿을 주면 맨날 게임만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들이 많지요.

제가 그래서 학부모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 봤더니 어느 학부모 이야기가, 초등학교 학부모인데, 실습 교실에 가 봤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체험 교실. 가 보니까 정말 신세계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면 학부모도 새로운 역할이 있고 선생님들은 보조 교사를 두게 되는 거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과 달리 개인 교사를 두게 되는 거더라. 이건 엄청난 거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상임위를 해 봐도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이어서 지금 그런 부정적 여론 때문에 도입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워낙 이게 혁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체험을 해 보면 바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고 정책 담당자들도 그렇고 또 교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인정 절차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홍보가 실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이렇게 다 설득하고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 국회에서도 이견이 많습니 다. 지금 국회 예결위 보고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것을 수도권과 지역의 엄청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번 실험적으로 먼저 써 보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 말 요지는 뭐냐 하면 전남이나 경남 또는 경북이나 전북 같은 곳에 이걸 학부모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교육 격차가, 저는 81년에 대학을 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마어마합니다. 81년에 대학 올 때는 마산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데 본인만 열심히 하면 갈 수가 있었습니 다. 지금은 무슨 큰 장벽이 있어서 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공교육도 지방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교육이 완전히 지금 힘들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갈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혁신적인 체험을 지방에서, 공교육 격차로 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역에서도 해 보자. 예컨대 저희 같은 경우는 경남교육청과 창원시와 함께 지금 마산에 큰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자. 경남의 18 개 시군에서 부모와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번 체험을 해서 경남이 한번 이 AI 디지털교과서로 교육 혁명을 먼저 선도해 보자. 그래서 전국에 이게 좋다는 걸 알려 줘 보자. 또 전남도 한 군데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디지털교과서 이번에 상당 부분 감액도 아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감액 요청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 의원들과 한번 좀 상의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걸 부르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부총리님도 잘 아시는데—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MIT 대학원생 이 사람 이 칸입니다. 이 사람이 인도에 있는 조카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원 과정 중에 온라인 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안 맞아서 그냥 비디오로 녹화해서 가르쳤 습니다. 이게 인도에 알려져서 그 유명한 칸 아카데미가 탄생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최형두 위원 모든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교육 성과를 가집니다. 우리나라 교실의 문제, 우리나라 근대 교실의 문제는 19세기에 만들어진 교실은 한 교실에 있습니 다. 20명 정도의 학생이 있으면 그중에 진도 따라가는 학생은 5명 정도, 한 5명 앞서 있 고 10명 정도는 뒤쳐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일일이 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래서 이 칸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이 칸 아카데미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이 AI 디지털 교과서지요.

우리 부총리님이 AI 디지털교과서에 착목한 것도 사실 칸 아카데미 같은 에듀테크의 성공을 보고 그러신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최형두 위원 자, 이제 기적의 현장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빈초등학교라고 대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산골학교여서 폐교 위기에 있었습니 다. 여기에 스물…… 막 졸업한, 군대를 제대한 선생님이 옵니다. 가 보니까 기초학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실험적으로 자기가 우연히 알게 된 칸 아카데 미 실험을 합니다. 했더니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향상됩니다. 이 덕분에 이 학생들이, 보십시오. 수포자, 예컨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했다가 수학을 다시 시작하고……

이 핵심은 맞춤형 수업에 있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AI 디지털교과서는 이런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저런 케이스가 정말 한두 개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선도교사 지금 1만 명을 양성했고, 그 1만 명의 선도교사들이 강사요원으로 투입돼서 나머지 40만 교사들을 지금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일단 이걸 한번 연수를 받으면 교사분들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AI 디지털교과서가 단순히 그냥 코스웨어를, 소프트웨어를 학교 현장에 가지고 오는 것뿐만 아니고 학교 교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격차의 해소입니다.

그래서 당장 영어, 수학, 코딩, 세 과목이기 때문에 수포자, 영포자를 정말 없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 격차도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굉장히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형두 위원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혁명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 박정 서지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발언하세요.

○서지영 위원 방금 최형두 위원님께서 AIDT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예결 위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까 했는데, 저도 예결위의 AIDT 부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요약본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신 것도 들었고 그 원본도 봤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거는 주로 국회미래연구원이나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을 하였고,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셨던 것은 교육위 야당 위원의 토론회 내용 그다음에 AIDT에 반대하는 청원인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검토보고 그리고 뉴스 기사를 근거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박정** 자료 요구만 하시고요.

○**서지영 위원** 국회사무총장님께서, 예결위의 검토보고서의 긍정기술 부분에 대한 자료와 부정기술에 대한 자료의 근거가 굉장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요구에, 그 평가 내용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입법차장 진선희** 입법차장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의사진행발언이 질의 내용하고 중복되면 안 됩니다.

○**주철현 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라가서 할까요?

○**위원장 박정** 예, 지금 위원석에만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위원장님께 법무부가 검찰 소관 예산 자료제출 하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법무부는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월요일에 위원장님께 거듭 동일한 요청을 드렸음에도 법무부는 예결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면서 묵묵부답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의정자료전 자유통시스템을 통해서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와 검찰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법사위가 전액 감액을 의결한 특활비나 특경비와 관련된 자료도 아닙니다. 수사인력 현황과 인건비의 연도별 비교 자료, 검찰의 사건처리 평균 기간, 검찰 단계에서의 장기 미제사건 현황 등 법무부와 검찰에 편성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일체의 자료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이에 대한 설명 한마디 없다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 심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비록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내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오늘이라도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가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의 정당한 요구에 제출을 거부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해서 의결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법무부장관님, 지금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자료제출에 대한 것을 의결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은 국무위원님들이 각 부처에 대한 또 관계기관에서의 성실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은 법무부에서의 예산편성권, 검찰과의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년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법사위에서도 특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불투명하게 쓰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예결위에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국가기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에 대한 자료를 성심껏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부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여전히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할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께서도 실력 있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관련법을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고를 어떻게 하시든 간에 장관님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정식 의뢰해서 결과보고서를 바로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간 관계상 결론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문리적·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둘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이 예결산 업무를 포함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2조제2항에 위배된다.

참고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게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게 만들어졌거나 위임법

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이고 이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법무부장관이 편성한 검찰청 예산도 위헌·위법한 것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국회예산정책처도, 전임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한목소리로 법무부장관의 검찰 예산편성 행위가 국가재정법과 검찰청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기재부장관, 감사원장이 이런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궤변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와 방조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역행하고 장관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임명권자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장관님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해야 한다고, 문제없다고 계속 고집 피우실 겁니까? 어찌실 겁니까? 박 장관님, 계속……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진다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실……

제가 와서 보고를 쪽 받아 보니까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편성되어 온 과정이나 각종 규정이나 이걸로 봐서 현재 있는 법률 규정으로는 법무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걸 바꾸려면, 편성 주체를 바꾸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 법률 개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현직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정부안 제출하십시오. 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꿈수 위법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5%까지 추락하면서 세계 25개국 정상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데는 이런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장관님 같은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들의 무사안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검찰 예산이 얼마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4조 5000억 정도가 법무부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검찰 예산 말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찰만으로 구분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법상 검찰청은 명백한 중앙관서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21조 2항에 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 소관별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가사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관행이니까 법무부장관께서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다고 그런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21조 2항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대검찰청이 중앙관서 아닙니까? 관서 맞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찰 부분만 따로 골라 내서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만 예산편성을 함께 해 놓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딱 골라서 얼마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사실이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구분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대신 편성하는 자체가 위법행위지만 아까 관행을 핑계 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이 조항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혼재한 검찰 예산편성은 국가재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 예산안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 검찰청법을 어기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법 읽어 보면 다 아실 수 있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공약사항, 100대 국정과제 하지 말랍디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가재정법 만들 때 거기에 규정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검찰청을, 대검찰청을 빼놨지 않습니까? 그걸 왜 빼놨는지……

○**주철현 위원** 장관님, 그게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소위의 법 관련 소위에서 당시 검찰 국장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주고받은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국회에서 18년·19년에 본회의 의결로 분리 편성하라고 요구까지 했잖아요. 두 번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국회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헌법이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놔는데 국민의 대표기관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잖아요. 도대체 뭘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21년·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2개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수사 사건하고 2021년 수사 사건, 실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직접 개시 조문은 그 부분은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가 됐지만 전체적인 사건 양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철현 위원** 장관님, 그런 보고 믿으십니까, 거짓 보고를?

제가 하도 자료를 안 내놓아서 찾아봤더니 검찰연감이 있더라고요. 검찰연감이 있고 검찰연감은 22년 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도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 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의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안 줄었잖아요.

저희들이 법무부의 비협조로 검찰청 전체 예산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법무부 예산 중에서 검찰활동 예산란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따져 봤어요. 거의 검찰활동 예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3207억 원이던 예산,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도 3330억 원으로 무려 93억 원 늘어났습니다.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다음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인력과 예산 변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인력은 2020년 2만 2478명에서 21년에 3만 342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경찰의 범죄수사활동비도 20년 2068억 원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는 4010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판국이니까 아마 국가 전체 수사 업무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인력 예산이 이처럼 크게 늘었다면 당연히 그만큼 검찰 수사 업무는 줄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인력 예산 감소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검찰 예산을 한번 따로 뽑아 보라고 했는데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니까 1조 2260억이 검찰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사건 한 사건 처리하는 데 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공판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기록 송부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보여 주신 저 통계, 사건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검찰에 기록이 왔다 간 전체 관련자 인원하고 꼭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주철현 위원** 물론 저도 장관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 업무의 치찰심% 이상이 수사 업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많은, 검사보다 많은 수사관들 대부분 수사 업무에 투입돼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수사 업무가 줄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줄어야 되고 인력은 당장 못 줄이더라도 검찰활동 예산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히려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료제출하라 하면 자료를 안 내놔요. 그래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설득하려고,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니까 검찰이 도태되는 것이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예요. 도대체 그런 분위기 도 파악 못 하고, 제가 검찰 출신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국회에 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인데 자료도 안 내놓고 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가면 검찰이 소멸하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검찰도 법무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마는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없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없으면 제가 보기에 검찰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여기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황근 전 농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건 보고받으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주철현 위원**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장관이 농식품부장관 시절에 농정원이라는 산하기관의 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농식품부 출신을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수처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작년 12월 15일 자로 경찰에 이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담당자인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이 가서 1월 17일에 고발인 대리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10개월 지나도록 아무 것도 진전이 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1월 17일 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월 달부터 농정원 관계자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양일간 피고발인 조사를 하면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걸로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피고발인께서 지난 총선에 출마하고 어찌고 해서 좀 지연된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딱 떨어지는 명백한 사건을 자꾸 이렇게 집권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편의를 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사를 깔아뭉개면 이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범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이걸 이렇게 경찰청장께 물어보는 것도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께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으시잖아요.

○**경찰청장 조지호**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은 없지만 경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직사회는 선출직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받거나 임명직들은 국민의 대표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과 해경의 수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들이 관여를 못 하게 돼 있고 본부장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 견제도 안 받고. 민주국가에서 이런 업무 처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주철현 위원** 공수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사건, 전직 장관에 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경찰로 떠넘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떠넘긴 사건이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어요. 환수해서 직접 수사하시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외압이나 또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앞으로 저희들 이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주철현 위원** 사회부총리께 제가 관련 있는 것은 전남대 여수대학교밖에 없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주철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속했던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 용역을 교육부 예산에 직접 담는 것을 요구했더니 교육부는 그런 예산 항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주철현 위원** 그래서 저희로서는 내년 교육부 예산안 부대의견에 이것을 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년 전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막바지에 조금 들어졌었는데, 전남대학교가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전남대의 2025년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 예산 부대의견으로 담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남대병원에 대한 입장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그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협의하지 마시고요.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남대학교가 용역을 안 했어요. 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줬는데도 안 했거든요. 이것을 강제하려면 우리가 예산안에 부대의견으로 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들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해법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해법은 있어요. 부총리께서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상의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5월 21일 시행됐고 또 지난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주철현 위원**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주철현 위원** 특조위 활동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예산 미반영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면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만 쌓여 갑니다. 그런 상황은 아마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특조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정부 제출기간 이후에 특조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말 안에 예산을 특조위에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여기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상백도의 제한적 입도 문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관련 직원들이 여수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공무원들과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상륙시설하고 접안시설하고 접근로를 보수하고 정비하는 문제는 여수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돼서 더 많은 분들이 백도에 상륙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내년 실시 예정으로 타당성조사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수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한 세 분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태원참사특위의 예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국회 증액 과정에서 답아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연말에 답했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답으실 생각인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마 이번 달 말 안에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정** 국회 증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 28일 이전이기 때문에 소위 활동을 하기 이전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 휴식과 환기를 위해 김성원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김성원입니다.

우선은 내일이 수능 날이기 때문에 수능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점검과 또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이요, 올해 응시자가 한 52만 명 정도 되는데 지난 자료 보니까 8일 날 행안부 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수능 때 가장 문제되는 교통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 문제, 그다음에 그 당시 비상 상황에 대한 문제, 지진을 비롯한든지 아니면 무슨 공습경보라든지, 특히 어학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면밀한 점검 다시 잘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예, 잠깐 이석했습니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먼저 국방부장관님, 매년 수능일에 전투기나 사격훈련 이런 것은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맞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난번에 2017년인가요, 포항 지진 때 그때 기억으로는 수능 때문에 휴가 간, 그러니까 출타한 장병들 휴가 연장해 주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배려들을 장관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제가 살피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결국은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주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래 가지고 비상대응체제 내일 하루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두 가지 당부…… 아니,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수능 날이기 때문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불출석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분들께서 잘 협의를 해 주셔서 가지고 내일 수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장관님 불출석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사항은, 토요일 날이 논술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주요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하고 있는데 집회를 한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민주당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충언을 하셔서 가지고 집회를 연기하는 것을 꼭 건의해 가지고 관철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어디 멀리 가셨어요?

○경찰청기획조정관 도준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금방 돌아올 겁니다. 화장실 갔습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유숙박업소 관련해 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는데 청장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것부터 할까요.

행안부장관님, 지자체 공공배달앱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경제 분야에서도 얘기했지만 배달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의 원성도 높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자체 공공앱 성과 측정을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보니까 2020년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있었을 때 그때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면서 경기도만의 ‘배달특급’ 이것을 만들었던 말입니다. 보니까 2020년도에 20억, 21년도에 128억, 22년도에 80억, 23년도에 72억, 거의 300억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떤가 보니까 월간 활성 이용자로 평가를 하거든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거의 26만 명, 그러니까 시작할 때 60만 명이었는데 26만 명밖에 안 되고 월평균 거래액도 지금 거의 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신규 입점 업체도 지금

4분의 1토막 나고 5분의 1토막 나요.

당시 이것 만들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이것 허풍 친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그래 가지고 저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만든 공공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2년도…… 이번 총선 때도 정치권에 서도 공공배달앱 하겠다고 총선 공약으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더 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결론을 빨리 지으셔서 가지고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저희 방에서 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문화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여기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거든요. e스포츠 산업, 얼마 전에 우리가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작년에도 우승했고요 올해도 우승했고요.

○김성원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 이것을 제출했다고 하고 이것을 자기네 기준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고 많은 우리 게이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런 표준화 작업 제출하는 건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은 중국이 낸 제안서에 다시, 수정 제안서를 10월 달에 이미 저희들도 냈고요. 몇 번의 국제대회가 아마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 제안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종주국도 종주국이지만 사실상 시장 규모도 생각보다 상당히 큼니다. 거의 한 2조 5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랬을 때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현재로는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국내외 이런 대회도 개최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상설경기장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인력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역 리그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하여간 지금 계속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게 많은 게이머들이 원하더라고요. 지역연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WHO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등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문체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계속, 이 질병코드 등재하는 것 자체는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아마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물론 그렇게 결정을 내서 아마 권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대 의견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코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제2의 섯다운처럼 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청장님, 잘 다녀오셨으니까……

내일 수능에도 경찰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저희들이 잘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번에 질문드릴 건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불법 공유숙박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문체부장관에게도 제가 질문드리고요. 청장님한테도 드리고 또 국세청장에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체부장관님, 불법 공유숙박시설이 정말 우후죽순, 특히 서울 부산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우선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숙박업에 대해서 지금 문체부가 담당 부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불법 공유숙박의 실제적인 진실을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요. 대개 업체나 관계자들의 추산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한 5만 개 정도의 불법 공유숙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김성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5만 개 정도인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고, 두세 배 정도 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에어비앤비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정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그런 불법적인 건 본인들이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는데 현재 숙박업을 하시는 다른 분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으로 하는 게 이미 너무 만연해 있고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권으로 분명하게 해서 허가를 받는 게 오히려 기존 숙박업체하고도 관계 정립이 확실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원 위원** 기존 숙박업체에서의 반대가 많을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계속 협의 중이라고……

○김성원 위원 어쨌든 양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밝은 곳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냥 뒤도 결국은 불법으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 공유숙박업 같은 경우가 문다혜 씨의 예를 들자고 하면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신부님께서 3분의 1 가격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그 숙박이. 그런데 여기가 되게 경관이 좋아 가지고 후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은 별개로 치고, 청장님께서 왜 이 불법 공유숙박업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정책적인 것은 제가 대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현재 제주권은 제주자치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지금 문다혜 씨 수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수사받았다고 아까 속보 나오더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법 공유숙박업,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이게 미성년자들이 숙박을 해요. 그다음에 마약하고, 불법 촬영하고, 성범죄에 이용되는 것이 이쪽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초창기에 잡지 않으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것을 막을 수 없어 갖고 양지로 끌어와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양지로 끌어올렸을 때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말고 청소년들 그냥 숙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불법도 하고 그다음에 촬영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찰에서 빨리 알고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나 하면 그쪽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경찰관 대처 요령 이래 가지고 경찰을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다혜 씨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장 조지호 이걸 불법 여부를 떠나서 마약이라든지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명백하게 근절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의 어떤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계속 얘기한 김에 자율방범대법 얘기하면, 결국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전국에 한 9만 2000만 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법은 국회에서 이렇게 합의해 갖고 통과시켰는데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원 편성됐는데 이걸 거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고 나머지는 다 교육 비용입니다. 이것 너무 경찰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신 것 아니에요?

○경찰청장 조지호 자율방범대의 기본 사무가 국가사무라기보다는 지방자치사무에 가

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자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사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고 또 청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 갖고 청 차원에서도 해야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2차관님, 조달청장 하실 때랑 2차관 하실 때랑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자율방범대원들한테는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에 동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예산실장님!

○**기획재정부예산실장 김동일** 예.

○**김성원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께, 지금 전국에 군 유희부지 있지 않습니까? 군 유희부지가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군 유희부지를 부대 재편을 하면서 규모화를 시켜야지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군 유희부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군 유희부지를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나름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것 있지 않습니까? 군 체계 개편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저희 방에 한번 오서 갖고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미군 반환 공여지 있지 않습니까, 장기 미반환 공여지.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김성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가가 그렇게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저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교부도 외교부 나름대로 하지만 우리 국방부도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적극 수용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허영 간사님께서 못 들으신 것 같아 가지고 당부 말씀,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수능일뿐만이 아니라 주요 대학의 논술일까지도 우리 정치권에서 수능 학생들을 배려하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실수도 없는 또 후회도 없는,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이 아주 멋지게 잘 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계속 응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에게 요청하신 부분,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 내일 수능 관련해서

불출석을 요구하셨는데 간사와의 상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교육부장관이시기도 하지 만 사회부총리시고 비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장이시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한 질의를 국민을 대표해서 하신다, 그래서 내일 수능에 대한 부분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상사태로 차관님이 계속적으로 여기 안 오시더라도 대기를 하시고 그래서 불출석을 저희가 허락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김성원 위원께서 미사용 군부대에 대한 전반적인, 국방부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법안 중에…… 그전에는 군부대가 비교적 도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교외 지역에 있지만 도시가 커짐에 따라서 바로 도시 안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장이 국방부와 상의를 하는데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시는데 일정 기간 상의해 보다가 논의에 진전이 없을 때는 국무총리실에서 좀 관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한 법안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하고 국무조정실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초단체에서는,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군부대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다음은 경기 부천갑의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천시갑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복지부장관께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내일이 수능일이고 지금 의료대란도 의료대란이지만 의학교육이 붕괴된 지도 한 9개월째 되고 있잖아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며칠 전에 여야의정협의체가 발족이 되면서 크리스마스 전에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정시모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에는 의미 있는 정수 조정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지 부총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마 2025년 정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 번 교육부가 강조했지만, 정말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험생들은 기존에 1509명 증원된 그 숫자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서 수능시험도 치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2026학년도 정원은 지금 상당히 열린 자세로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수표다 이런 거네요, 결국은? 공수표다 이런 뜻이네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공수표가 아니고 워낙부터 정부는 2025학년도는……

○서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6일 날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내놔줬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영석 위원 그래서 2024년도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5년도 시작에 맞춰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승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2.8%에서 한 3.4%, 그 대책을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지금 수시로 집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미미한 숫자입니다. 5%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복귀할 것으로는 확신을 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내년 복귀는 현장 분위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의대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기 단위별로 구분되기보다는 학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학년을 통으로 쉬거나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기만을 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서영석 위원 하여튼 부총리께서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의대생들이 커리어 타격 때문에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는 커리어 때문이 아니고 의료교육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귀할 수 있도록?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37개 의대에서 지금 1059명이 군대 입대를 위해서 휴학을 한 상태고요. 전년 대비 한 6.5배 정도 되는데 이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하면, 지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7500명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는 인식을 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학교마다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학생뿐만이 아니고 교수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대학이 수요조사 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교수 수가 한 692명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는 지금 국립의대에 1000명 증원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대학의 의견은 한 2363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1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절하게 추산이 된 겁니까? 이게 과학적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법정 기준은 아시다시피 교원 일인당 학생 수 1.5명인데요. 현재도 사실은 법정 기준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그 숫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영석 위원 하여튼 교육이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면 1000명을 증원 했는데, 교수를 그렇게 충원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지금 정부 계획대로 1만 명을 배출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5년 후에는 배출을 안 하게 되면 교육생들이 확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감축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의대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병원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금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도 의대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용상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수로 정원이 확보가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교수와 병원에서의 진료를 겸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고 병원의 기능도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1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36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부총리님 말씀처럼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게 계획인 것으로 보여지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임상교수라든지……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임상교수나 기금교수를 다시 또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영석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원의들한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질적으로 교수 역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연구 실적 아니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연구논문이나 이런 실적이 없는데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을지,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러운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근에 워낙 의료 분야도 바이오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융합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현장에서의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는 논문도 중요하지만 또 현장의 경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서영석 위원 이래저래 하여튼 얘기하시는데 의학교육의 질이 잘 담보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그것은……

○서영석 위원 뿐만 아니고 최근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방대학교 교수들이 사직을 많이들 하고 계셔서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영석 위원 이것도 지방의 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사직을 이렇게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기초의학 교수뿐만 아니고 교수 확보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기는 합니다.

국방부장관님, 올해 의사 국가실기시험에 266명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그다음 해 정도는 군의관이 거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럴 때, 군의관은 군 전력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력 감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지금 의무사관으로 지정된 군의관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충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당분간 말고 의대생들이 지금 배출이 안 되면 다음에 군의관이 없게 되잖아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군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학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평원과 관련된……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아닙니다. 의평원이 중요한 질 관리기관이고요.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사한 거로는 주요 변화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동안은 보고를 했던 것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도 좀 절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그런 최소한의, 정부가 질 관리를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은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여기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부천 출신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1998년도에 우리가 부천만화정보센터를 만들었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협업모델 중에 아주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116억에서 2024년 70억으로 줄어들더니 내년도 29억으로 이렇게 대폭 75%나 삭감이 되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제가 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총 3985억입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것만 해도 1463억인데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애써서 키워 오고 정말로 우리 웹툰산업과 만화산업을 위해서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왔는데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자르면 이것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예년 것은 제가 없었을 때니까 잘 모르겠고요. 제가 와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저희 콘텐츠산업 전체가 이제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어서, 특히 만화·웹툰·웹소설 이쪽은 대표상품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문체부 조직 자체도 해외문화홍보원도 본부 조직으로 들어와서 국제실로 다 개편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정부가 좀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약간의 구조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진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하고 잘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잘 협의해서, 지역에 지금 다 그런 센터나 진흥원을 갖고 있어서요 고루 고루 잘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모여서 저희들이 중심 해서 대표상품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000억 가깝게 예산을 투자해서 25년 넘게 성장 발전을 해 온 그런 조직과 기관을 무시하고 기껏 콘진원에 있는 팀이라고 구성하는 9명이 전부인 그런 국가기관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의 많은 우려는 그 시기가, 기억하시겠습니까마는 윤석열차 파동 이후에 꽤 씬 죄가 적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이것이 문화계의 어떤 블랙리스트나 또는 문화예술계 길들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그런 행태가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좀 장관께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부천 경우에는 그동안에 해 온 나름대로의 공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콘진원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요 문체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올해 어워드도 굉장히 크게 만 들어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만진원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어워드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올해는 시범이었기 때문ですよ……

○서영석 위원 어찌 됐든 국가와 또 지방정부가 애써서 키워 온 기관들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부총리께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서영석 위원 지금 오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는데 중복되는 지적은 좀 제외하고요. 어쨌든 국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47.5%를 부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럽고 왜 이렇게 됐나 고민스러웠던 게 24년도에 일몰이 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별도로 크게 논의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고 그리고 교육 당국 자체 내에서도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안 보이고 그런데 마치 24년 말 일몰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거는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 이르기까지 사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계속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당연히 일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일몰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지금 늘봄학교도 하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도 만들겠다, 고교 학점제도 하겠다, 유보 통합도 하겠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수요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지금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조가 내년에 증가하는데 새로운 수요들, 말씀하신 몇 가지

주요 사업이 지금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0.4조 이번에 4.3조, 내년에 그러면 세수가 3.4조 늘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처리를 안 하겠다 이런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불용처리라는 거야 워낙 예측 못 한 상황에서 되는 거니까요 일단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3.4조가 증가하고 새로운 사업 수요가 한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고교 무상교육이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총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불용되는 예산도 보니까 내진 설계랄지 또 석면 제거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들이고 정말로 교육 현장에서는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이는데 그런 것들 불용되는 거를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민 장관님,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제가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소비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보니까 1995년 통계 작성 이래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꺾이기 시작해서 제일 긴 기간 동안 지금 감소하고 있고, 폐업신고를 한 경우도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91만 명이 폐업을 했고, 대출자도 보니까 335만 명 그렇게 늘어났고, 대출 규모도 1112조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중채무 개인사업자도 51%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가계대출도 1767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KDI가 2024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0.3% 정도 낮춘 2.2%로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 이유가 내수 부진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지표가 이렇게 민생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수 진작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다 살 수 있도록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화폐가 그중의 하나다 이렇게 그동안 얘기해 왔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조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행안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취지의 예산 반영을 한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화성의 경우가 우리 지방정부 중에서도 지역총생산과 출생률도 전국 1위고 고용률이 1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지방정부 중에서는 잘사는 그런 화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5000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역 현장에서는 이것을 절실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역화폐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자체를 반대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것에 국비를 지원할 거냐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자체는 지역사무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만 초기 단계, 정착 단계 그리고 코로나 위기 단계에서 국비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야 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마치 이게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재정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한 푼도 반영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겠는데, 지금 보훈가족들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지방행정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통합시스템 중에 새울행정시스템하고 행복e음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또 지방보훈청의 시스템에 접근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이걸 지방정부가 계속 요구하고 실제로 권익위가 그런 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저희가 더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들여다보시고 권익위의 요구대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유성율의 황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율 황정아 위원입니다.

먼저 박성재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황정아 위원** 사용 목적도 사용 기록도 하지 않은 검은 돈이 권력자들의 개인 용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사용은 원래의 목적과 사업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부적절하지요. 국민들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활비를 사실상 폐지 수준까지 감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2억 7000만 원의 특활비를 2019년 9억 8000만 원으로 84.4% 감액했고 현재까지도 동일한 예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황정아 위원** 공직자들은 국민의 요구를 잘 이행하는 것이 본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물론입니다.

○**황정아 위원**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는 게 더 발전적인 방향이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국정원,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들이 2025년 특활비로 120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활비가 올해보다 1.8%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제2 특활비인 안보비, 정보보안비 예산을 각각 4.4%, 11.1% 증액하는 꼼수를 통해서 사실상 예산을 늘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에 대한 재량지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권력이 싹짓돈처럼 사용하는 특활비 등의 예산을 증액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특활비는 전혀 검증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예산심의권이 명시되어 있는 국회조차 특활비 내역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최종 승소 부분은 그 내용이 지금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다 공개하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내용은 좀 이따 들여다보시고요.

이에 따라 검찰이 특정 기간 동안에 사용한 특활비 내역 일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기관이 할 것이 맞는지 정말 치졸할 정도로 영수증의 중요 정보들을 먹지로 가림 처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다면 특활비를 달라고 외치고 정작 뒤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마저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치졸하게 가리려고 했던 그 정보가 결국은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활비로 무엇을 샀느냐면 공기청정기 렌탈 비용,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뜨 케이크 구입, 회식비, 농협상품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등 누가 보더라도 특활비라고 할 수 없는 특활비 오남용 사례들이 대거 발견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공기청정기로 수사합니까? 폐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피의자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 그 오남용 사례는 작년이나 재작년…….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이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다 시정을 했고 그 이후로 법무부의 특활비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집행계획도 세우고 심의위원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난해까지는 그랬고 내년, 다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검찰……

○**법무부장관 박성재** 옛날에 있었던 일만 갖고 자꾸 반복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전혀 말씀 안 해 주시는 거라서 좀 답답합니다.

○**황정아 위원** 노력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의 인터뷰에서는 특활비는 예뻐하는 검사, 원하는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게 주는 당근이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분은? 예외라는 얘기입니까?

온갖 사안에 구속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검찰이 자신들의 비위에는 참 관대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기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기에 직무정지 기간에도 3200만 원의 특활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했고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특활비 2억 5000만 원이 설 연휴, 추석 연휴 떡값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또 특활비 1억 5000만 원을 A4 한 장짜리 영수증으로 전액 현금화한 사례도 밝혀졌습니다.

장관님,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냐라고 말할 시간에 현금 1억 5000을 어디에 썼냐, 공기청정기로 어떻게 수사를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법원이 견제받고 검증받으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또 지속적으로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거부하지 않았습니니다.

○**황정아 위원** 내어놓은 것을 보면 검찰이 영수증에서 결제 시간, 구매 내역, 상호 등은 먹지로 가림 처리한 것은 약과이고 이제는 다른 특활비 사안들 그것조차 주지 않겠다고 또다시 소송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구린내가 풍기길래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합니까? 사법 정의를 지킨다는 검찰이 할 행태가 맞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지켜야……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하였습니다.

○**황정아 위원** 법원의 판결을 지켜야 한다는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명제까지 검찰이 썩다 만 껌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의 판결대로 공개 자료를 제출……

○**황정아 위원** 공개하실 예정입니까, 전부 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그게 미흡하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황정아 위원** 그게 미흡한 거지요. 지금 제출하신 게 먹지로 가림 처리된 것이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가림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판결에서 이야기하

는 집행 내역이나 수령인 정보 같은 것은 안 해도 된다인데 그 부분도 공개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황정아 위원** 내용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까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주에 요구한 특활비 상세내역 자료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핸드폰까지 뺏겨 가며 황제 알현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을 향해서 목소리만 높이는 검찰이 언제까지 법을 농락할 수 있는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유사한 질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떳떳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빙하지 못한다면 검은 돈, 검찰의 특활비 전액 삭감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자료제출 아니면 전액 삭감,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최근 3년 치 영수증 포함한 특활비 증빙내역 일체 의원실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게도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황정아 위원** 세금의 투명성은 그 어떤 예산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황정아 위원** 세금을 지침에 맞지 않게 증빙도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집행 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맞겠지요.

○**황정아 위원** 공기청정기가 수사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것은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답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이를 감사하겠다는 감사원의 요구를 혹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이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통해서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목입니다. 비목 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국회에서 편성을 해 주실 때 기밀성이 요구되는, 이런 비밀 요구 정도에 대해서는……

○**황정아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금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데 기밀성을 요구하고 덮어놓고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검은 쌈짓돈입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이게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인정하고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집행……

○**황정아 위원** 인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러니까 이게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황정아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왜 감사원은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합니까? 법사위에서 자료제출하신다고 하셨었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 저희들이……

○**황정아 위원** 법사위에 자료제출한다고 해서 놓고 왜 지난주에 요구한 특활비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내부 통제를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법사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사위원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지난 2017년에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이 정부기관의 특활비 실태 점검하신 적 있으시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황정아 위원** 당시 감사원은 특활비 집행 내역과 증빙 실태 등을 비교·분석해서 문제 사례를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 당시에 아마…… 저는 그 당시에 없을 때인데요. 하여간 여기 국회 예결위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점검도 사실 내부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행 하나하나의 상세 내역까지 저희들이 전부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통제를 갖추고 이 특활비를 사용하는지 그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결산서에다가……

○**황정아 위원**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침에 따라서 실태 점검을 잘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계산 증명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그런데 거기에도 약간 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가져갔을 때는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놔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목의 성격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부분에서 일일이 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쓸 수 있는 돈을, 그 규모는 국회에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 것인지는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황정아 위원** 립을 둔다는 것이 참 너무 애매한데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검찰 특활비 감사 진행했지만 지출 내역과 증빙서류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국민의 혈세를 쌔짓돈처럼 쓴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감사원이 혹시 봐주기 감사, 맹탕 감사한 것이 아니냐? 왜 감사원이 그렇게 했나?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감사원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감사원도 똑같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활비 자료제출하라고 했더니 모두 검찰과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하셨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법원의 확정 판결 내용 보셨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황정아 위원** 법원은 검찰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 제출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것 법원에서 논파된 논리입니다.

감사원 직원들이 지난 한 해 택시비로만 총 5억 6700만 원을 썼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000만 원 더 사용하셨지요? 아십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예.

○**황정아 위원** 감사원은 택시비 인상과 직원들 야근이 늘었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업소·식당·카페에서 부른 기록까지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 최재해** 그 앞에서 댔다는 얘기지 거기서 나와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동 사무실에 일부, 저희 건물 리모델링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퇴근하면서, 야근하고서 나왔을 때 택시를…… 티맵으로 잡으면……

○**황정아 위원** 그 앞에서 나왔다, 골프연습장 앞에서 우연히……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잡힌 거지 그것은 저희들이……

○**황정아 위원** 필라테스 연습센터 앞에서 우연히 택시를 댔다?

○**감사원장 최재해** 아니요, ‘우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 설명드렸습니다. 담당 법사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는데도, 하여간 그렇게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니까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그래서 설명을 다 드렸단니까요.

○**황정아 위원** 내역에는 ‘국회 인근’이라고 쓰셨어요, 게다가. 국회 인근이라고 기재해서 본인들의 사적인 사용을 감춘 게 아닌가. 이게 감사원……

○**감사원장 최재해** 그게 여기 예결위 끝나고서 12시 넘어서 직원들 퇴근할 때 그때 택시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가 가지고서 인근에 가서, 마포 가서 밤늦게 식사할 때도 있지요, 하여간 그것도 인근에서. 그러면서 집에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쓰라고 택시비를 저희들이 썼고요.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 나중에 차곡차곡 살펴보면, 철저히 검토해 보면 알 일이고.

감사원장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고 기관을 감사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게 감사원이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고 국민 혈세를 본인들 주머니 찔뚫돈처럼 쓰고 검찰은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에 무혐의 처분을 하고 감사원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에서 면죄부를 주고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더니 혹시 서로서로 동지애가 생기신 건지 찔짜미로 봐주는 건지, 암묵적 협약이라도 하셨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위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감사원이 뭐 했습니까? 현직에 있는 문재인 전 정부 인사 다 찍어 내려고 코레일 리스트 받아서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는 표적감사 벌이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정아 위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무시해 가면서 먼지털이식으로 억지 감사, 위법 감사, 민간인 사찰을 벌이더니 민간인 사찰을 벌인 범죄자에게 징계조치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뭐만 하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불가침의 성역입니까? 전 정부 때리는 것 절반만이라도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감사했다라면 정권이 이렇게까지 무너졌겠습니까? 법원의 판결마저 농락하며 김건희 여사를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기관들이 검은 돈까지 국민의 혈세로 휘두르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특활비를 지침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범죄행위임을 윤석열 정권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황정아 위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헌법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삼권분립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합니다.

○**황정아 위원**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검찰, 감사원 모두 법 논리를 창조해 내며 정말 미꾸라지처럼 법원의 확정판결마저 농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년 4월의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기억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황정아 위원** 그런데 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자문서를 편집해서 공개하면 며칠이면 끝났을 것을 굳이 종이 사본을 고집하며 그마저도 백지 영수증을 냈고 증빙서류를 다 먹칠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먹칠을 해서 제출한 이유입니다. 지침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행태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수사에 준하는 집행만 가능한 특활비가 국감 우수직원 포상이라며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한우암소구이 전문점 그리고 염소고기 전문점, 커피 전문점까지 쌈짓돈처럼 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집행한 업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 한우집 49만원, 48만 원 쪼개기 결제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 고깃집에서 열다섯 차례 67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지침에 어긋난 집행, 그게 사익을 위한 행태였다면 횡령과 직권남용의 범죄행위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 사법부가 해야 될 말은 그 판결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판결의 존중을 통해서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판결은 존중하신다는 얘기지요. 게다가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한다면 더

심각한 행태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30개 부서가 만든 특활비 기록은 공개를 거부했어요. 대법원이 이미 공개하라고 한 정보와 성격, 정보 모두 똑같은데 또다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은 타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황정아 위원** 특활비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자료를 고의로 은폐하면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건마다 다 맥락이 있을 테니까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법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판례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각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포섭하고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여러 가지 기록을 다 봐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건건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리 없다는 당연한 명제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꼴이 아닙니까. 그것도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사정기관에서 법 왜곡과 위반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이래서야 삼권분립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호위 무사로 전락한 권력기관들이 삼권분립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검찰과 똑같이 지연 전략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원장 최재해** 용도가, 그렇게 용도에 맞게 저희도 집행하고 있고요.

○**황정아 위원** 용도에 맞게 쓰셨다, 그냥 믿어 달라는 얘기시군요?

○**감사원장 최재해** 예, 계속……

○**황정아 위원** 정보공개청구……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 감사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황정아 위원** 알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개별 건건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하면 도대체 법원의 판결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법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닙니까? 부적절하다는 것을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단호히 저지해 주셔야 합니다. 강력한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 혹시 구시대적 색깔론 매카시즘이 21세기에 또다시 부활했는데, 이거 들려 드리면 아마 불쾌하실 수도 있는데 ‘법조계 좌경화 뿌리는 오래되고 깊다. 김일성의 비밀 교시가 법조계 적화를 도모했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좌경화 시도와 체제전복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사법부·언론은 사실상 접수됐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아 위원** 만약 이거를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부적절하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는.

○**황정아 위원** 최근 법원에서 방통위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민의 혈세로 1억 4000만 원의 녹을 받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 SNS에 직접 공유한 글이예요. ‘방문진 재판부는 좌편향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진숙 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국민들께서 삼권분립마저 혼드는 고위공직자 행태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사법이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조차 없습니다.

처장님, ‘판사가 좌파라서 우리가 법원에서 졌다’, 여기 어디에 법리가 있고 합리성이 존재합니까?

처장님, 사법부가 단호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그 발언 내용에는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정아 위원**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단호하게 막아서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법치가 복원되어야 할 중차대한 시기이니만치 사법부가 적극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울주의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서범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원장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반론할 시간적 여유도 안 주시던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감사원장 최재해** 저희 감사원은 어떤 정권에 상관없이 헌법과 법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잣대는 지난 정부에서 더 하고 이번 정부에서 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일한 잣대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라는 위원회 의결 조직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공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서범수 위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02년도 월드컵 응원전 할 때 약 20만 정도,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다 메워서 60만인데 저 사진 정도가 한 2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다음 왼쪽 게 지난 11월 2일 날, 민주당에서는 30만이라고 추산을 하고 경찰은 1만 7000명, 저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지난 11월 9일 날 경찰 추산은 1만 5000명, 민주당 추산은 20만입니다.

저게 부풀려도 너무 부풀린 것 아닙니까? 경찰에서 저 인원을 추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산을 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소위 페르미 방식이라고 3.3㎡당 앉아서 하는 경우에는 5~6명, 서서 하는 경우에는 9~10명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 대충 맞지요? 거의 저는 맞다고 보는데.

○경찰청장 조지호 거의 맞습니다. 실제 이것이 논란이 됐을 때 저희들이 찍은 사진하고, 사진을 일일이 카운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추산한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같은 사진을 보면서 왜 저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9일 날 집회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때 집회 허가를 내줄 때 어떤 식으로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또 조건을 달고 내줬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최초에 승례문을 기준으로 덕수궁 대한문까지 신고를 할 때는 2개 차로를 제외한 전 차로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오후고 도심의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방향 전 차로를 사용하도록 제한 통보를 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저거는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자기네들이 경찰에서 제한조건을 달았을 때 적법하게 진행을 한, 그러니까 한쪽 편도 전 차로를 다 뺐을 때, 오른쪽은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다음, 이 사진은 가다가 시위꾼들이 경찰 폴리스라인을 밀어붙이는 모습이지요, 저거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 폴리스라인을 완전히 밀어젖히는 장면, 여기서부터 불법행위가 자행됩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음, 이게 전 차로를 점거한 사진입니다, 전 차로를. 분명히 경찰에서는 편도 전 차로, 양방향 전 차로가 아니고 편도 전 차로로 집회·시위를 하세요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밀어젖혀서 전 차로를 점거한 겁니다. 명백하게 불법이지요, 지금?

○경찰청장 조지호 예, 불법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일단 시정요구를 합니다. 시정요구를

해도 계속해서 안 들을 때는 종결처분 요청을 하게 되고 종결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산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나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도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법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노총이나 야당에서는 당일 경찰이 강경 진압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주최 측 참가자 부상자가 나왔다는데 몇 명이나 나왔는가요?

○경찰청장 조지호 주최 측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서만 확인……

○서범수 위원 우리 경찰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은 105명이 부상당하고 장비 107점이 망실 또는 분실되었습니다.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서범수 위원 명백하게 제가 보기에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밀리면 밀릴수록 법질서가 확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행자도 11명이나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다음에 영장……

○경찰청장 조지호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기각 사유가 뭐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돼 있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하고, 하나는 사회적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구속의 상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80년대 백골단 운운하면서 경찰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장님, 백골단 세대입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 아주 초임 때는 그런 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80년대 백골단의 경찰을 소환할 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저 동원된 경력들 중에 사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진압부대가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서범수 위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골단이라 하면 과거 80년대 사복을 입고……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검거하러 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민주당에서 또 계엄령 의혹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서범수 위원 실제 그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아직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도 야당은 계속 파병이라고 하고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용현 참관단은 파병이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가만있어 보면 한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기분이다, 2024년에 사는 게 아니고. 계엄령 이야기를 하지요, 파병 이야기를 하지요, 그다음에 백 콜단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옛날 80년대에 사시는 분이 아니냐, 2024년도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자꾸 80년대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경찰을, 특히 저런 집회·시위에 있어서 경찰을 물고 늘어집니다. 경찰이 먼저 강경 진압을 하니까 집회·시위자들도 폭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저 날도 분명히 제가 상황대책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플라자호텔 앞을 지나던 시위대들이 앞에 있는 우리 경찰들을 물리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했고 그 방어한 이후에 본격적인 충돌……

○서범수 위원 경찰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반하장인 거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위 예산심사에서는 그런 빌미를 삼아서 지금 예산을 깎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상정이 안 됐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서범수 위원 특활비라든지 경비국 예산도 좀 깎으려는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위촉되지 마시고요. 정당한 범집행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책임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직원들을 지휘를 해 주십사 그리고 연행된 시위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배후 세력까지도 수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물론 경찰 출신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요. 그런 경찰은 정부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경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제도적인 게 갖춰져야 되고요.

특히 기재부차관님, 경찰 예산 많이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행안부장관님도 경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의 사기가 살아야 우리 범질서가 지켜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공감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국회사무총장님 계십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기초실장 대신 나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회경비대가 있지요?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알기로 한 123명쯤 되는데.

법원행정처장님, 대법원에 지금 경찰 경비대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보안관리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아닙니다, 보안관리대.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자체 방호원이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서범수 위원 그리고 행안부장관님, 정부청사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청원경찰이 나와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정부청사도 경찰관이 없지요? 다 빠졌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유독 지금 국회만 남아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예, 아직 경찰이 지금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의경 없어지면서 국회경비대도 철수하고 방호원으로 자체 증원을 시켜서 충당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릴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예.

○서범수 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사실 경찰의 가장 기본은 민생치안입니다. 민생치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세가 시설 경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찰이 빠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경비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경찰이 국회에 있어서는 소중한 단체고 그룹에도 불구하고 국회경비대라는 게 경찰청 입장에서는 파견돼 나가 있고 국회의 입장에서, 국회사무처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 직원 아니고, 중간에 봉 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공수처장님, 사진 한번 보시지요.

공수처 설치가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열의를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많은 논의 끝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만든 공수처를 놔 놓고 지금 어떤 사안만 벌어지면 특검으로 가 잡니다. 어떻습니까, 공수처장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공수처장님 생각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특검에 관한 국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우리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을 위해서 이왕 설립된 그리고 지금 순항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국회에서도……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자꾸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지금 나름대로 성과도 조금씩 내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공수처는 제치고 자꾸 특검 가자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자식을 낳은 뒤 버려 놓고 가는 부모하고 비슷하다. 자식은 낳아 났는데 가만 보니까 재가 싹이 노랗다, 재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다,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어쨌든 국회의 논의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저희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을 하시는 게 아직도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1년이 넘도록 수사 결과를 못 냅니까?

또 물어볼까요,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에 주면 얼마나, 몇 개월이면 돼요?

○경찰청장 조지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수처 예산이 올해 252억인가, 지금 정부안에 편성이 돼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희한하게도 수사지원하고 수사일반 세목은 오히려 감액되었습시다.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수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이번에 디지털 포렌식 라이선스 비용으로 들어가는 4억 원이 지금 반영이 안 됐습시다.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돼서 아쉽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 외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직접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비용보다는 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결국 수사를 잘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프라만 갖춰져 있다고 수사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수사를 완결시킬 것이냐 그런 의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들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자꾸 성실히 수행한다고는 하시나 결과물을 내 주셔야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 놓고는 또 상임위에서는 해외연수, 삭감되었던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0만 원을 부활시킵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저나 ‘공수처가 뭐 하는 집단이지?’, ‘도대체 어떤 수사 결과물을 내놨지?’, ‘공수처가 있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존재 이유가 없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국외여비 6000만 원을 또 올려 놓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걸 어떻게 보시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위원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부장검사 출신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우리 공수처에서 기소도 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지난 결산 때 공수처 수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간다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처장님께서도 공보준칙에 대해서 감찰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 나왔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저희들 보안 각서를 다 징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더 보안에 철저히 기관장으로서 임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저희 의원실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예, 잘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문체부장관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공교육에 예술인 강사들을 넣어서 애들한테 문화예술을 가르쳐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서범수 위원 내년에는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거의 감축을 하고 대신 지방교육재정으로 넘기자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 외에는 국고가 감액된 만큼 지방교육재정이 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강사들이 시수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차피 이것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 이 돼서 이미 작년부터 계속 감액이 되어 왔고요.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전라북도는 재정·고용 완전 이관 의사를 표해서 25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고 현재 약 50억 규모, 전라북도 내의 예술강사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경남·울산·강원·충북은 현재, 경남은 60억 정도 증액돼서 현재 82억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서범수 위원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님께서 지자체 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협의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예, 좀 해 주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서범수 위원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숫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서범수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교육부총리님, 요즘 대학교 안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학교 안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마 대학이 여러 가지 산비탈, 산을 등지고 산에 만들어졌든지 또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꾸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대학교, 특히 국립대학교 같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예산을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특히 부산대학교나 저런 데는 보면 자기네들이……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복도로를 끼고 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캠퍼스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 아마 자체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잘 관리하셔서 우리 대학생들도 안전 확보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행안부장관님, 제가 요즘 대구·경북의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경북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특히 북부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도로 곳곳마다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혹시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번 행정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아닐까 싶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 표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리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10월 21일 날, 자료 화면 보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장관님하고 지방시대위원장 그다음에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이렇게 네 분이 작성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행안부의 역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 이렇게 역할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임미애 위원** 제가 현재 추진 중인 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화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치거나 나누거나 새로 만들거나 소위 말하는 폐치분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에 근거한다면 대구와 경북을 합치는 것은 두 번째 사례가 될 텐데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은 저희가 몇 번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대체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일곱 번째 조항에 보면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행안부의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 의결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직접투표는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한 규정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합쳐질 때 그렇게 해서 의회 의결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나요? 제 기억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어쨌든 법상으로는……

○**임미애 위원**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딱 한 사례가 그랬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다 찾아봤는데 대체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러니까 그건 그때마다 할 수 있는데 법상으로는 어쨌든 자치단체 의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의회 의결이 필요치 않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문제는 두 자치단체의 통합에 불과한 그 둘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 부산과 경남에서도 이런 통합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

구·경북에서 어떤 선례를 만들어 내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장관께서는 이 문제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는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합치, 분합의 당사자인 지자체와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규범을 행안부가 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서둘러서 합친다고 해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도—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자료화면 보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난 9월 1일 날 회의를 하셨어요. 논의과제 종합토의 하시면서 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여기서 혹시 어떤 얘기가 진행됐는지 아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고요. 올해 연말쯤 아마 의견을 대충 모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번이 처음이지요.

○**임미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특정한 정당이 모든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가, 반영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저는 대구와 경북의 통합 과정에서 행안부가 하나의 규범을 만들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과정에서도 어떻게 선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폐치분합의 경우에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다 그러면 의회 의결이 훨씬 수월합니다.

○**임미애 위원** 주민 대부분이 동의한다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임미애 위원** 저는 그렇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생각에는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임미애 위원** 장관님,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안 풀린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을 예외로 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의회 의결이 더 적합하다고 하면 그 의견을 저희는 존중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고 폐치분합 할 때는 이 절차만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제가 이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법에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원칙이 의회 의결이고 예외가 주민 의사 묻는 건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하나로만……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자치법 5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걸 제가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가 읽어 드릴까요? 법을 읽어 드릴까요?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할 때는 관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한다’가 아니고 ‘들어야 한다’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5조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지요.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들어야 하는 것과 결정권을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지방자치법 5조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 이것을 지방의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언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방의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의사를 대표할 뿐이고 결정권은 이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의결의 권한을 가지고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것은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이 용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시간을 서두른다고 해서 주민들이 화합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내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문제이니 충분한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이 문제를 쉽게 다루지 말아 달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지방의회가 결정하면 이게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야 한대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위원님께서 그건 제 말씀을 오해하신 거고요. 의견수렴 과정이 의회를 거칠 수도 있고 주민투표를 거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기초단위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마창진 통합 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산·창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건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지난 10월 23일 날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만나셔서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공공자금 융자지원을 건의하셨어요. 그러면서 10월 22일 날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공적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채무계상 면제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적극 수용을 약속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혹시 채무계상 면제 약속하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기억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임미애 위원** 채무계상 면제를 한 적이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한 적이 없고, 채무계상 면제라는 행위가 이루어진 적이 있냐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저 대구공항 관련해서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요, 그 전의 선례에 비해서. 홍 시장께서 얘기하기에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지를 않았어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미애 위원** 없습니다. 채무계상 면제라는 용어가 행정에서 쓰여진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평창올림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한도를 조금 조정해 준 적은 있지만 그것 역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루어졌던 행위이고 실제로 당시에 발행했던 지방채가 170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계상 면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장관님 약속하신 적이 없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재임 중에는 평창이라든지 이런 거 제가 한 기억이 없고요. 제 부임 전에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다. 그건 없고, 제가 지금 묻는 건 그러면 홍 시장과의 대화에서 채무계상 면제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입장을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구시가 그래야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썄, 저 보도 경위가 어떻게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공공 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17조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6년도부터 해마다 2조~3조 원을 공자금통을 통해서 이것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왔거나 의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글썄요, 아직 저까지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요.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실무진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저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임미애 위원 없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방식이 가능성이 없는가보다는 판단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입장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공적자금 사용 자체는 기재부 소관이고 저희 행안부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기재부차관님, 지난번에도 잠깐 이거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시가 공적 개발을 위해서 군 공항 건설을 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이니까 건설해서 정부에,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그동안 쓰던 군 공항을 인수해서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는데 공자금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기재부는 그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거나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스킴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임미애 위원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매우 정보의 혼선이 생기기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을 차관님 알고 계신가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잘 모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처음 들어 봅니다.

○임미애 위원 이게 농림부 산하기관인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재부차관님께 말씀드리는데 이유는요, 자료 한번 보세요.

저게 2007년도에 농림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원래 1999년도에 돼지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기관인데요, 저 기관이 2007년도에 저렇게 정부기관, 기타 기관으로 되면서……

여기가 단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면 겨울에 구제역이든 아니면 돼지와 관련된, 각종 가축 질환과 관련된 것들을 방역하고 집단 폐사시켜야 될 때 이거 처리하고 축산물 검역도 하고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 대한 문제가,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19대 때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전체 128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95.7%가 무기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은 55명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본부장은 비상근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이고 일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업무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구제역 발생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 다 현장에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저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 이 기관의 본부장을 상근직으로 돌리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앞장서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재부차관님, 이 문제 기타 공공기관인데요. 처우 개선에 좀 힘을 보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공공기관 중에 기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동종의 업계보다 만약에 인건비가 낮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상의 급여 인상률보다 더 높은 인상을 적용을 해 주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복지 3종 세트라고 하는 명절휴가비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반영하라는 게 저희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관련된 부처에다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이 답변을 기다리는 가축방역지원본부의 직원들이,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차관님의 그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위상과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사실 내용은……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서 공공기관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요,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더 새기고 살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리고 이런 사례가 사실은 가축위생방역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가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도 처우의 문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가부차관님, 제가 지난번에 국감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일단 저희 소관의 3000여 개 사업 시설 중에 한 1000여 개가 말씀하신 대로 그 가이드, 사회복지법상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처우 여건이 좀 유리한 여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그렇게 편입되지 않은 소관 시설에 대해서는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노력 중인데, 현장 수렴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처우 개선에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 현장에서 거부감을 갖는다는 건 어떤 얘기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이라든가 법상에 이렇게 관리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관으로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는 합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바라기센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해바라기센터는 아시겠지만 상근……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런 것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하여튼 의견수렴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자근**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오후 회의는 오기형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의 오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저는 오늘 기재부, 감사원 그다음에 행안부, 법무부, 문체부, 가능하면 문체부장관님께까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오늘 논의하는 과정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감사원장님이나 기재부에.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와의 심의 과정에서 일방주의가 있고 이걸 좀 가급적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견들과 자료 공유 또는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고민들과 우리 국회에서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주의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저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기금 돌려막기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었고요. 그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이야기가 됐는데 어제, 그제 경제분야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오늘 또다시 반복되는 것 저도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공개 예산 관련된 겁니다.

앞서 허영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시면서 내년 특활비성 예산이 약 2조 1232억 원 정도 된다고 추계를 하면서 이게 계속 증가되고 또 이 규모가 적절하나, 어떻게 이걸 심사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논의의 초점은 국정원이든 또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대통령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든 또는 국가보안과 관련된 어떤 보안 비용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고 또 불가피하고 상당히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유연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총액을 승인을 받았으면 그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차후에 검증과 토론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검증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소명과 해명 내지는 설득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뢰가 서로 깨진 거지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 건 감액해야 된다 또는 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불가피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 중에 이 흐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회가 과도하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저희들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정부의 설득과 소명이 부족하다면 이 삭감 과정들이 정당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정부가 제대로 소명하고 같이 설득하고 했는가 그거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주로 많은 부분들이 절차적인 문제 내지는 사생활 보호 또는 기밀 이런데 실제 개인정보 보호, 알권리 차원에서 법원에 일반 국민이 문제 제기하고 공개되는 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마저도 국회에도 공개를 안 하는 또는 능장 공개를 하는 이런 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은 국가기밀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정보위에서 다루듯이 예결소위에서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도 같이 제도의 진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로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해야 그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좀 저도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무부 특활비 명목으로 나오는 것 중에 특활비와 정보보안비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특활비만 183억 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정보보안비가 42억 원, 내년 예산에는 116억 원, 특활비는 80억, 오히려 법무부에서 갑자기 국정원 일을 대신하는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조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특활비 감액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미리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제 국회랑 계속 논쟁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문제 제기 하나 제가 드립니다.

국방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또 정보보안비 명목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개별적 항목, 항목 따져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보보안비 형태로 바뀌면 정보위원회에서 이후에 처리하면 된다 이러면서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거 적절하지 않다. 서로가 신뢰를 갖고 설득을 하고 해명을 하고 그리고 합리적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대화를 하거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삭감밖에 의회가 선택할 선택지가 없다.

오늘 기재위 예결소위에서 예비비 반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 속에서 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실제 어떤 식으로든 사전에 해명이 충분히 되면 이 국회의 결정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걸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해명이 안 되면 그것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한 2주간의 예결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충분한 해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가 이후에 건전한 예산안의 내용들을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일반 국민들,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횡령 사건, 전 국정원장 세 분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들 그다음에 검찰의 특활비 떡값 사건들 이게 다 그냥 일상적인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하면 일단 저 특활비가 국가를 위해서 잘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저 특활비 누가 논문 돈처럼 쓰느냐 이런 의혹까지, 이미 단어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벗어나려면 용어를 그냥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해명과 설득과 또는 충분히 신뢰받을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안부장관님께 한 가지 간단한 건데요. 제가 결산 때도 했던 것 자료를 아직도 안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요.

새마을금고, 부동산 관련해서 PF가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잘 공개가 안 되고 저희가 국감 과정에서도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또는 정무위 쪽을 통해서도 이런 걸 점검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계속 행안부가 이에 대해서 자료를 잘 안 주시는데, 언제까지 주실 생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는데요. 잘 알다시피 새마을금고 경우에 영업실적은 타 상호금고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1대 때 행안위원들에게 제공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법무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밸류업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몇 가지 문제의식 중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계속 위축돼 있어서 자본시장이 위축된 것을 푸는 방법은 길게 보면 경쟁력이 강화돼야만 시장의 본질 가치가 성장한다 이 점에는 서로 이견이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도개선의 지점이 금투세 폐지한 게 도움이 됐냐? 실제 주식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폐지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 미치는 지배구조도 좀 개선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공정 거래행위, 주가조작 등 이 행위에 대해서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과연 그러고 있느냐? 공공연하게 이익을 빼 가는 횡령, 배임 등의 사태에 대한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의 대응 문제가 하나 있고 또는 주가조작,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서……

오늘 또 이상한 기사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명태균 이야기하면서 두산에너지빌리티 나오고, 계속 의혹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아진다. 그래서 주가조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화면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화면은 그전에 기재부장관께도 계속 질의했던 주제입니다. 엘리엇·메이슨이 ISDS를 국가에게 제기를 했고 대한민국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400억, 2342억,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합병 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잘못된 개입, 국정농단, 그로 인해서 나온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삼성물산의 승계 과정에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해는 사회화됐습니다. 국민이 손실을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개미 투자자가 손해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계속 제기했지만 ISDS, 지금 구상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기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대한민국은 이걸 할 준비가 돼 있는가 계속 질의하는데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내에 삼성팬이 있는지, 대한민국 권력이 오염돼 있는지, 왜 이걸 안 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오기형 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대정부질문 때도 그렇고 계속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은 소멸시효 아니겠습니까, 구상권의 소멸시효? 이런 것은 다 검토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오기형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기형 위원** 확정이 안 되면, 이게 확정이 죽 되든 안 되든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고 하고 실제 민사 절차 속에서 이게 구상권이……

만약에 확정되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검토해 보셨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은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 봤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 그게 맞냐?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검토가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를 할 때까지 검토됐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 밸류업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밸류업은 일본 걸 제도적으로 많이 수용을 하면서 한 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 밸류업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올해 1월 달에, 2월 달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의 주요 과제.

주된 내용은 지배구조 개선이고 또 하나는 경영의 관행을 투자자 입장에서 바꾸도록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세법 개정만 딱 나와 있어서 문제인데, 저 안의 내용의 기업 부분에 제3항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그중에 주주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 실효적인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다각도로 연구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11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저게 나온 겁니다. 저게 나왔으면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있을 거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작년에 상법 관련 특위를 따로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말만 구조개혁, 말만 지배구조 개선이지 실제로 밸류업 할 마음이 없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지금 저희들 법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오기형 위원** 그게 언제나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행동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시장 관련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들 중 하나가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통상 심리기간 약 2년 정도 걸린답니다, 자본시장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일반 경찰 사건은 두 달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라고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통상 한 10년씩 되는 것 같은데 한 30년씩 해서 형량도 높이고, 지금 발의된 것은 공소시효만 연장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막상 사건 할 때 보면 심리 등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검찰에 올 때까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수사를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니요, 답을……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은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자본시장 거래법만에 대해서 공소시효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기형 위원** 관심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밸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도이치모터스 같이 포괄일죄에 관해서 공소시효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 다. 실제 이런 사태들을 묻어 버리느냐 아니면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면 서로 당당하게 해명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부 입장이 참 유감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한 2500억 손해를 봤습니다, 10%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에 일반주주들도 전부 다 주당 저 정도, 1만 3500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일반주주들한테 비용을 떠넘기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 이걸 왜 책임을 물을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상법상 충실의무 조항이 저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 결정을 했던 삼성물산 이사들은 책임을 지느냐? 합병을 하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 아니니까 주주 대표소송 안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려아연 요즘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고려아연 사례에 대해서, M&A를 하는 과정에서 M&A는 시장의 플레이어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공개매수한다고 하는 이 과정에 회사에서 경영진이 공개매수를 하고 공개매수 가격이 89만 원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면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67만 원인가요 이렇게 한답니다.

그 과정에 공시가 제대로 됐느냐 또는 기망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다행히 금융감독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더 이상 악화는 멈춰졌지만 저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반복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고려아연한테만 들은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듣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에 공개매수 과정에서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주식 샀다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한국시장 못 믿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다음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2020년도에 분할하기 전에 시가총액이 48.5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가가 21.6조입니다. 이 회사가 물적 분할하면서 에너지솔루션은 약 100조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81.84%의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100조 가까이 되는 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가 지주회사의 주식까지 반영이 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이게 물적 분할, 자회사·모회사 동시상장의 마법입니다. 그로 인해서 LG화학 첫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 20조, 30조가 날아가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주주들이 보고 개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보면 황당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걸 못 막냐.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두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그룹 에너지빌리티와 관련해서 두산밥캣이 이슈인데 에너지빌리티 자회사 두산밥캣이 로보틱스랑 연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두산밥캣은 캐시카우, 꽤 좋은 회사고 두산로보틱스는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두 회사를 엮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상장회사인데 이 상장회사는 갑자기 알짜 캐시카우가 사라져 버리니까 주가가 좌충우돌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주들이—제가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하고 이랬는데—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과 간담회 했습니다. 이런 사태 반복되면 투자 못 한다.

두산이 원전 원자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지배주주가 저런 식으로 콧감 빼먹듯이 다 마음대로 하더라. 회사 오너, 총수 입장에서는 저런 게 합리적일지 몰라도 개별 주주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법령, 정관 위반이 없다면 또는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주주대표소송 할 수 있느냐? 이것 주주대표소송 안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되게 소극적이었고 법무부에서도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지금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투자자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해법이 없다. 그래서 이사회 주주에 대한 이什么的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특히 조직 채편 과정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상법 관련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지금 이 의견들이 회신이 온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는데요? 이 논의 과정 전혀 모르시는데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법원하고 민주당하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올해 1월 달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소액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서 상법 개정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말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하겠다는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과가 안 나오면. 저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작년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 당시의 속기록 보면 상법상 특별위원회, 어떤 팀 꾸려서 열심히 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뭐 합니까? 황당하다 이런 거고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관되게 최근 8월 달까지도 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실의무에 대한 이야기. 실제 전문가들 토론회에 가서도 메시지가 일관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적어도 현 정부의 투자자에 대한 신뢰는 이복현 원장 저 발언 때문에 유지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과로 나갈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나 합병과 물적 분할 시에 회사의 주식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오기형 위원** 평가도 해야 되고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단지 이사회 충실의무라는 것을 상법에 입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다른 규정과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기형 위원** 장관이 바뀌니까 입장도 바뀐 건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기형 위원**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인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오기형 위원 대통령이 상법 개정하자는 게 충실의무였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오기형 위원 지금은 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밸류업 이야기 해 놓고 실제 알맹이 빠고 안 하겠다 이러면 이 말의 신뢰성, 정부의 신뢰성 다 무너지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분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고……

○오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조항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22대 국회 때 나온 것에 대해서 법원에 질의해 갖고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온 겁니다. 그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법원의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정부 법안을 제안하는 기관은 아닌 것 같고 그 법원의 의견이 민주당에 왜 저런 의견을 냈는지는 저희들이 이해는 하기 어렵지만 충실의무 내지는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직접의무를 바로 규정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대법원의 문구에 대해서 직접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법원…… 여기에 나오는 논의되는 그 문구 자체, 제안했던 문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는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

○법무부장관 박성재 내부적으로는 저 형태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저희들 내부에서 검토한 거하고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후에 보충질의 때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마지막 질의를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울의 한기호 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응답에 아마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 이제 내일까지만 하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제일 큰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실질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를 했고 북한과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없습니다. 또 김정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참 신통한 일입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는지.

그런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될 부분이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핵무기에 대한 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오늘 외교부장관님 안 오셨지요? 차관님 계시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예, 1차관이 여기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차관님은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책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북한과 관련된……

○한기호 위원 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그런 원칙은 확고히 지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저희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잘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한기호 위원** 교과서 같습니다.

오늘 모든 언론들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파병한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참전을 해서 병력이 투입됐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한과 러시아는 핵동맹으로까지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여기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밀착되어 가고 이 밀착된 것이 핵동맹까지 간다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핵에 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핵무기 정책은 우리도 핵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분명히 헌법에 명시했지만 사실은 그러면 전쟁 안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동당 규약에 그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를 중국적으로 청산하고’, 미군 철수에 대한 것이 그래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한다’.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통일은 공산화 통일입니다.

통일부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갈 방향을 일단 핵무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중간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과 안보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데 중요한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한 걸 잠깐 보시면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는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한다 하는 게 무려 71.4%입니다. 또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70.9%입니다. 통일의식 조사를 통일연구원에서 한 건 66%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북한 핵에 의한 상당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국가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다, 중간 목표는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님은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한기호 위원** 장관님께서 한 마디로 ‘예’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은 지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곳이, 지금도 제가 포럼 세미나를 하다가 왔습니다. 지금 실제로 2022년도 12월 달에 국조실에서 군 급식에 대한 문제를 수의계약을 올해까지 70%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70%를 유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급이 금년도에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군인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취사장에서 밥을 해서, 모든 원재료로 반찬을 해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반가공되거나 반조리됐거나 아니면 조리된 것이 지금 군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원재료를 납품하던 시대가 이제 지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접경지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어서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먹거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을 먹고 싶다, 그런데 요즘 사과가 나온다, 사과를 하나 갖다 주면 병사들이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과일이 섞인 걸 달라고 합니다. 배도 한 쪽 들어 있고 사과도 들어 있고 귤도 들어 있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지요. 컵과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컵과일을 누가 만듭니까? 결국은 지역에서 컵과일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먹거리센터를 만듭시다.

그런데 국방부는 아직까지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우리 법에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장관님이 확실하게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먹거리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한기호 위원 다음은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한 대책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국방부도 동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실제로 군부대를 해체를 시켰습니다. 화천군의 1개 사단, 양구군의 1개 사단, 각 1개 사단씩 군에서 해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체되다 보니까 실제로 군인들에게 많은 경제를 의탁하고 있던 지역의 상권이나 주민들이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고 생활 자체가 이제는 아주 낙후된 상태로 망가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군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하의 물품은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혹시 오해받을까 봐 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또 2억 2000만 원 미만 물품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한정된 지역경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한다는 거지요. 또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9000만 원까지 지역에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 단위로 할 수 있으면 군단으로 묶어서 공개입찰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까지 생기느냐, 순찰로를 깔기 위해서 야자매트를 들여와야 되는데 이 야자매트를 제작사, 그러니까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전부 책임지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사단 단위로 하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납품하는데 이렇게 입찰하니까 어디서 들어오냐, 저 경상북도 구미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군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군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냥 말로가 아니라 지침을 좀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통선 문제입니다.

지금 민간인 통제선…… 여기에 있는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차관님, 청장님, 전방의 민통선 안에 몇 번이나 들어가 보셨습니까? 거의 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올해 연말에 위문 가지거든 꼭 전방 제일 험한 철책까지 한번 가 보십시오.

들어가는 과정에 보시면 민간인 통제선이 있습니다. 심한 데는 휴전선으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데서 그 이후까지도 뒤에, 후방에 민통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한 것만이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 저 청색 선이 지금 현재 민통선입니다. 심한 데는 한 15km까지 지금 민통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철책 선으로부터. 노란 선은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라도 좀 풀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굶는다면, 한 5km 정도까지 일반 선을 굶는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 재산권 행사도 가능해지고 또 영농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단장 시절에 실제로 민통선을 해제해 봤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못 한다는 겁니까, 왜? 군인들이 민간인을 통제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들을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22대 와서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장관님,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연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운영기관 그러면 일반 사회의 민간 기업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민간 공기업에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봐도 문제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을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시설의 장으로 모신다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은 맞지 않아요. 군에서 이 책임운영기관을 언제 했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군대도 적용하라. 군에서—저도 그 당시에 현역으로 있었는데—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군의 지휘관이 있는 자리를, 대령이나 준장이 있는 자리를 뺏아서 민간인한테 주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아주 거세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여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전시가 되면 이 시설에 대한 장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은 어떻습니까? 총도 안 가지고 있지요, 군복도 안 입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는 부대가 있고 군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휘해야 됩니다.

저기 한번 보시면 저기에 보급창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지역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 안 합니까? 게릴라 침투를 해서 공격 안 합니까? 당연히 하지요. 그러면 게릴라가 들어오면 함께 지휘를 하는 사람이 군인을 동원해서 방어를 하고 격퇴를 하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휘관이 민간인인 거예요. 지휘관이 군인에게 충

을 쏘라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걸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된다, 군인이 지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겠지요. 돈 들어가는 것 얘기하시지만 저기에 돼 있는 2급·3급 그리고 고급 공무원, 봉급을 주는 걸로 치면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대등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에 대답을 좀 하세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인건비 때문에 저희가 반대한다는 건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이의 없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아닙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은 예산 운영과 인사상의 어떤 자율성을 주는 부분이라 저것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임기제 공무원 2급, 3급과 그다음에 현역 군인들과의 인건비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군 시설이고 밑에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휘하는 군인이 더 잘 알지 어떻게 민간인이 더 잘 압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 부분은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취지부터 근본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건 민간인들한테, 공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군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 밑에 전부 군의관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아닌 일반인 의사가 들어와서 병원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대령 자리 있는 것을 뺏아서 민간인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군의관들이 지금 군대 장기복무 안 해요. 왜? 진급할 자리도 없어요. 명예라도 줘야 됩니다, 돈을 못 주면. 그 명예의 자리도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생활하는데 내가 5급이다 그러면…… 6급 승진하고 싶고 6급이 되면 그다음에 5급을 가고 싶고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군인들한테 진급하는 길을 막아놓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 열심히 해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 건의드리어서 다시 이것은 환원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해외 파병부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파병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국회에서 동의해서 해외 파병 나간 게 몇 개 부대가 나가 있는지 아십니까? 4개 부대가 국회 동의하에 나가 있고 인원이 94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외 파병부대에, 우리 국회의 전체회의에서 동의하는 것을 300명이 표결을 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나가 있는 부대들이 전부 다 오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지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잘 가려고 안 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부대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다? 거기 동명부대는 13년도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두 번밖에 간 적이 없습니다. 남수단도 두 번밖에 간 적이 없어요. 가는 교통편도 항공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야 되고 가서도 이동하는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험지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지요.

그래서 저는 군 출신으로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정감사 끝나고 국방위원들은 의무적으로 가라. 그래서 국방위원들 네 팀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으로 갔다 와라, 이래야지 사실은 우리 국회가 전체 동의해 주면서 가 볼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걸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1년 전부터 나갔는데 이 부대의 현장에 우리 국회가 딱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 반영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정 예.

○한기호 위원 위원장님이 반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없는데, 강원도 특별자치법 3차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있고 국제회의산업이 하나 있고 또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을 이전해 달라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지금 제주도에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제주도에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하면 안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영리법인이 설립하도록 돼 있고 또 내국인 입학에 대한 규제가 없는 학교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강원특별법에 담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누구는 떡 주고 누구는 무시 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외국교육기관도 사실 지금 인천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은 법을 내면 교육부에서 반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국제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를 하는데 국제회의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국제회의를 아무 시도나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도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도 명시된 시도에서만 해요. 다른 데서는 못 해요. 강원도도 좀 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깐,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특별자치도도 하는데 강원도는 왜 안 된다는 거냐, 강원도도 넣어 달라.

문체부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근본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이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또는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희 부

처가 지정해서 고시할 수는 있지만 관계된 여러 기관과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 김영호 위원님, 제가 아까 핵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 입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북한 핵 위협 우려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의 핵우산, 핵과 관련된 합의를 통해서 미국의 확장억제를 통해서 북한 핵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그리고 정부는 NPT,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님 말씀은 기존 정부의 입장에 계속 변함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알겠습니다.

만찬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오후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 연수율의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정일영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을 위한 대통령, 총리, 장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어디에도 경제 살리는, 양극화 해소하는 정책도 예산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예산은 건전예산,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건전예산도 아니고 너무나 불건전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외국 자금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PPT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채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늘어납니다.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국제발행도 증가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많이 쓰겠다고 어제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정지출을

쓰기에는 재정지출 증가율이 0.8%밖에 안 됩니다. 제한된 고강도의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재정정책을 쓸 수 있습니까? 재정지출 0.8%는 전략적 투자, 경제 살리는 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재정지출 너무나 우려됩니다.

거기다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60조, 30조, 거의 90조에 달하는 세수결손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없이 2025년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소득세 1조 8000억, 상속·증여세 1조 1000억, 법인세 4000억, 부가가치세 2000억의 결손이 추정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외 모든 기관이 우리나라 실질성장률의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요 기관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좋다고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전망, 거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정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지난 정부 때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많이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오면서 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나 걱정입니다.

이렇게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예비비를 4조 8000억이나 제출했습니다. 예비비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14%나 증액된 막대한 예비비를, 사용처도 불분명하게 원칙에도 안 맞게 사용하는 예비비를 또 다시 엄청나게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50% 삭감해야 됩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은 예비비 심사를 오늘 기획재정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 예비비를 꼼꼼하게 보았습니다. 예비비 삭감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삭감을 시작하면서 정부는 모든 합의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하는 데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미 합의한 증액, 감액, 모든 내용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중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획재정부 관계자, 차관 참석도 안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상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이러한 행태,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 기획재정부를 규탄합니다.

각 부처의 금년도 예비비 실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3년도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예비비 원칙에 맞게 예기치 않은 사태에 정말 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일반 현황은 말씀드렸고요.

대통령경호처 누가 나오셨습니까?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장님, 경호처에서 이렇게 도서국 정상회의, 경호시스템 강화, 예기치 않은 긴급한 상황에 쓰는 예비비 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짧게 대답하십시오. 맞나요, 안 맞나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원칙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적절하지 않지요?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예.

○**정일영 위원** 됐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1차관입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출장 가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출장이요?

여기에 보면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정상회의 참가, 국민 영접, 이런 게 맞습니까, 예비비 원칙에?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결정한 시기가 올해 예산 확정된 이후라서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그렇게 정상회의를 갑자기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수차례 실무자 회의도 거치고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지 갑자기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나서 갑자기 가는 게 그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위원님, 지난해 올해 정상회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많은 것도 안 맞고요. 계획대로 하십시오, 계획대로, 국익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차관입니다.

○정일영 위원 장관 어디 가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장관님 공석이셔서 제가 대행 나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세계잼버리 지원, 세계잼버리 지원, 2개 있지요? 이게 예비비 맞습니까? 짧게 대답하세요. 시간 많이 갑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그 당시에 이상기후라든가 그런 부분……

○정일영 위원 안 맞습니다. 잼버리, 정부에서 잘못해 놓고 국민혈세 갖다 여기다 예비비로 쓴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나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문체부도 보면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해 가지고 16억 6000만 원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불용도 꽤 많고. 이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맞냐고요, 예비비 원칙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제가 없을 때라서, 그건……

○정일영 위원 없을 때라도 장관님이, 그건 전임자라도 현재 장관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정일영 위원 안 맞지요?

국무조정실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때는 국가적인 긴급재난 상태와 같은 거라서 그렇게……

○정일영 위원 그건 아니지요. 케이팝 하는 게 무슨 그겁니까? 잼버리 잘못해서 갑자기 급조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잼버리가 그래도 그나마 그걸로 체면치레했지요.

○정일영 위원 국무조정실…… 누가 나오셨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미디어·콘텐츠 산업위 운영, 이게 예비비 쓰는 항목은 아니지요. 일반예산으로 써야지요.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본예산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안 맞고요.

국가보훈처, 이것도 보훈부 승격에 따른 운영 예산, 이게 다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예비비를 이렇게 원칙에 안 맞게 흥청망청 쓰는데 6000억을 증액해 가지고 4조 8000억을 2025년도 예산에 낸 거예요.

자, 양극화 보겠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재정정책을 쓰시겠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양극화 심해 집니다. 시장기능에 이 나라 경제를 100% 맡길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시장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때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양극화 줄여야 됩니다’, 그때 들은 체도 안 하더니 갑자기 지금 양극화 해소 얘기를,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세수결손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내년 예산 지금 다 제출돼 심의 중인데 대통령은 내년에 무슨 돈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겁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데, PPT에 보시는 것처럼 양극화 해소와는 거꾸로 가는 예산이고, 대통령은 말로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양극화 보십시오, 가처분소득 1분위·5분위, 가계 흑자 1분위·5분위, 정말 어려운 분들, 서민들하고 초부자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의식주 지출도 계속 커지는 겁니다, 계속 양극화가.

우리 국민의 가장 많은 재산이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 자기 집에 있잖아요. 강남 집은 계속 올라가고 다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거나 조금 움직임만 있으면 정부에서 때려잡는다고 그래 가지고 또다시 못 올라가게 만들고, 집값의 양극화 이게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재정정책을 써 가지고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을 한번 제가 봤어요, 대통령 말이 맞나 틀리나.

교육부장관님, 지금 특수교육 내실화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졸 취업 활성화 이게 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 예산들 아닙니까? 이걸 다 줄여 버렸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줄인 게 아니고요. 지방비로 이전이 돼서 지출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지방비, 지금 세수결손 때문에 지방에 주는 교부세, 교육교부금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방비가 3.4조 늘면서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는 추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계수조정 때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행안부장관님, 거기도 지역경제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이것 다 양극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왜 다 줄이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늘었는데요.

○정일영 위원 아니, 줄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아니지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도 13억이 늘었고요. 취약계층 발굴 지원사업도 4억이 늘었고요.

○정일영 위원 아니요. 장관님, 장관님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저 PPT를 보세요.

지역경제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것만 보면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적인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줄어든 부분도 있고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자료 한번 쭉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정일영 위원 국방부장관님, 급식비, 피복비, 군의무 이것 다 줄이셨어요. 왜 이렇게 줄이셨습니까? 이것 장병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국방위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일영 위원 하여튼 군인의 양극화라는 건 안 맞지만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특히 사병들 말이지요, 장교들보다도 사병들.

여가·통일·문체부 장관님.

여가부차관님, 여기도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가족정책, 아동·여성.

통일부도…… 통일부장관님 나오셨나요?

○통일부장관 김영호 예.

○정일영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이런 것도 줄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문체부장관님, 이게 더 액수가 큰데 기초예술 역량 강화 이것도 양극화 차원에서는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어느 항목에서는 좀 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술 전반적으로는 예산 다 늘렸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쭉 보십시오, 제가 본 것하고는 영 다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일영 위원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반대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의대 증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올해 가장 잘못된 게 의대 증원 문제예요. 거기에 부총리, 교육부장관님이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신 것도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R&D 예산 재작년에 그냥 싹둑 잘라 놓고 왜 잘라야 되는지, 어떤 걸 잘라야 되는지 그건 깊이 분석도 안 해 놓고 뭉텅 잘라 가지고 우리 첨단과학 분야를 그냥 망쳐 놓더니 의대 증원도 그래요. 갑자기 2000명 증원한다고 해 가지고 온 세상에 난리를 쳐 놓고 국민들 의료서비스 제대로 못 받게 하고 사망자 생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의대 증원은……

○정일영 위원 좀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말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 드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일단 보건복지부장관님하고 얘기했고.

장관님은 이게 내년에 되겠느냐고요. 그 많은 학생, 휴학한 학생 또 신입학생 해 가지고 이 학생들 교육이 교수, 실험실, 강의실 다 부족한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시다만 워낙 의료개혁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역대 정부가 다 하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하지 못하면 정말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정일영 위원 그런데 장관님, 장관님 소관은 아니지만 좀 답답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제가 그……

○정일영 위원 아니, 들으세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면 그걸 채우겠다든지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데 의사가 안 간다면 그걸 하겠다든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득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정해 놓고 의사를 거기에 맞춰 늘려야지 갑자기 2000명 해 놓고 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 그러니까……

○정일영 위원 교육부장관님,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워낙 의료개혁의 목표가……

○정일영 위원 그 목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교육부장관님 소관 아니예요. 답답해서 드리는데, 교육부장관님은 의대 교육만 잘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도 그대로고 5조 확보도 안 됐는데 확보됐다고 그러고 교수들 1000명, 지금 자원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의사들 채우려면 지방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지방에 이번에 의대 증원 많이 시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료개혁을 하려면 자원을 투입해야지요. 그래서 의대 교육에 대해서도 질을 걱정하시면서……

○정일영 위원 그 의사, 교수님들 어떻게 해 가지고 모집하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모집이 됩니다. 지금 1000명이……

○정일영 위원 되기는요, 지금 자원 자체가 없는데.

장관님, 의사 배출하는 의대의 정원이 국립대가 몇 %입니까, 사립대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반반 정도 됩니다.

○정일영 위원 반반이 아니지요. 제가 본 자료는 국립대가 961명 31.4%, 사립대가 2097

명 68.6%. 사립대가 훨씬 많아요. 2배 가까이 돼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지금 늘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부 국립대학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교수 모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두 배 이상 의사를 배출해 내는 사립대학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국립대학은 직접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사립대학은 용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를 실컷 만들어 놓고 사립대학은 용자해서 빚내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문제를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증원을……

○정일영 위원 문제를 만들었지요. 가만히 있는 사립대학……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증원 규모도 대학 총장님들한테 50~100% 정원 내에서 결정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볼 때는, 교육부장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관님이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교육부가.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 휴학 가지고도 그렇고 6년을 5년으로 단축하니 5.5년으로 단축하니 계속……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6년을 5년으로 단축한 적이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토하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언론이 줌……

○정일영 위원 그게 혼란을 가져와요, 혼란을.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워낙 불신의 벽이 높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딱 자르지는 않으셨잖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니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계속 학교 자율로 맡길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복학 같은 것도 교육, 의대생 집단 휴학계 제출 절대 승인 불가, 감사해서 바로잡겠다, 내년 3월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한다, 조건 없는 휴학 승인 건의하니까 승인하겠다, 동맹 휴학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집행돼야 되지만 학생들이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소통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저희들이 양보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렵게 가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는 어떻든……

○정일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대를 선진화시키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요, 의료개혁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전체 얘기하는데 그분도 사퇴하셔야 되고.

장관님, 그것은 그런데 의대생을 교육시키면 이 의대생들이 나와서 또 몇십 년간 의사를 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수준이 학생들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수업이 안 되면 그 의사들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몇십 년……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계속 배출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본과 1·2학년 때 해부용 시신,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의대생들을 잘 교육하는 것은 교육부의 정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 교육부로서는 피부에 정말 와닿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현실적으로 수능 시험이 내일이 지 않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일영 위원 지금 와서 줄이기도 어렵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버리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이제 합격하고 곧 시작할 것 아니에요, 3월 달부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게 해부 시신 6~8명 실습하던 걸 20~30명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참관밖에 더 되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문제는 워낙 초기에 제기가 돼서 다양한 극복 방안들을 저희들이 복지부랑……

○정일영 위원 다양한…… 몇 달 남았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복지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실습실, 강의실 등등 그게 예산 확보한다고 지금 당장 지어지나고요, 그 건축물 짓는 데 몇 년 걸리지. 학생들, 교수 뽑는 것도 그렇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7500명은 1학년과 신입생이 중복되기 때문인데요. 그 학생들은, 당장 해부라든가 그런 수업은 2·3학년 때 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1~2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지난번에 판결할 때도 근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정일영 위원 장관님, 저도 압니다. 예과 1·2학년 때는 의학, 물리학, 기초생명 그런데 그게 온라인으로 배워야 될 과목이 아니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있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본과 1학년 들어가면 실습하고 해부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지요.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죽 따라다니면서 진짜 교수님한테 배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러니까 저희가 본과 1년을 기준으로 하면 한 2년 여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장관님, 이렇게 의대생들 많이 뽑아 가지고 대

한민국 최고의 의료서비스 국가가 너무나 후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큼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후퇴……

○정일영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정일영 위원 법무부장관님,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검사들이 기소를 해요. 수사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 꽤 많은 건수가 나중에 무죄가 돼요. 그렇지요? 무죄가 되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변호사 해야지 몇 년 동안 고생하지 마음고생하지 어떤 사람은 가정도 문제가 되지 돈 들어가지 건강 잃지…… 너무 문제가 크잖아요.

장관님, 그런데 이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5년간 무죄 사건 3만 6000건 중에 검사 과오로 인정된 건수가 3730건 맞지요, 검사 과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제가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일영 위원 건수는 모르시겠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정일영 위원 문제는 이렇게 검사들이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정일영 위원 책임집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과오가 비위행위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단정되기는 어렵지만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나름대로 사건평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정일영 위원 그 평정위원회에서 제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래도 나름 엄정하게……

○정일영 위원 제 식구 감싸기로 하시고.

검사 과오도 보면 수사 미진이 50%, 법리 오해가 39%나 돼요.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지요.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든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보상금 420억 편성돼 있고 또 저거 가지고 이·전용도 많이 하시던데 그 보상을 잘 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정일영 위원 문체부장관님, 용산 어린이정원 사업은 저는 문제가 꽤 많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해 가지고 256억 예산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거는 너무나 갑자기 졸속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훈부장관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거는 너무나 이분법적인 구분, 정쟁 도구화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하여튼 계수조정위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위원장님, 저 답변 하나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 예,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도와주신다고 하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해서 의미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저도 30초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차관입니다.

○위원장 박정 기재부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계층과 약자,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몇 개 사업을 예시로 주셨는데 대표적인 지역 발전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저희가 13.9조 원에서 14.7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고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93.6조 원에서 97조 원 이상으로 저희가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또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집행은 법이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요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5년도 예비비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다고 피 일반회계의 한 1% 규모로 맞춰 놓고,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다 반박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취약계층 예산은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별도 자료 주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질의가 있으니까 재정 당국을 비롯해서 각 부처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시고 또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삭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도록 설명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주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 공백 현장에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 수당으로 지난 6개월간 예비비 200억 이상이 지출된 내역 보고받으신 바 있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주영 위원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예산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그리고 러·우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언제 고조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쟁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 의료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군 의료 그리고 나아가 양질의 보훈의료야말로 군인을 더욱 용감하게 만들고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복무 후의 삶도 윤택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군 병력을 가장 위협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는 국방부에서 제출하신 현재 진료과목별 군의관 현황입니다. 외상 치료가 중요한 군 의료의 특성을 생각할 때 흉부외과의의 경우 17명으로 타 과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국방부의 문제라기보다 흉부외과의 전문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동의합니다.

○이주영 위원 적정 수 그리고 적정 분포의 의사 양성은 국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오늘 오후에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께서 의무사관으로 지정된 군의관들이 아직 충분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장이 없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금 의정갈등 길어지면서 군 휴학 의대생 그리고 사직 전공의 입영 대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올해 군의관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총 몇 명입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한 1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1052명이구요. 지난해 대비는 4배,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는 이번 의정갈등 때문만은 아니고 이미 이번 사태 이전부터 증가하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주영 위원 또 전공의 사직자를 포함해서 내년 3월 기준으로 입영 대상자는 현재까지

4300명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년보다 4배 많은 수입입니다.

즉 향후 4년간은 공보의나 군의관 입영 대상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대생 중의 많은 수가 일반병 입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이후에는 군 의료인력 부족이 즉시 문제가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현시점부터 약 4년간의 입영 대상자—지금 많다고 제가 말씀드린—그들 중 대부분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 일반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군의관 중에도 중위로 복무하는 일반의 자격의 군의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평시에 군 의료의 수준이나 특히 전시에 역량을 결정하는 데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대위 군의관들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올해를 기점으로 수급 균형에 즉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전문의 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 응시 대상자 보겠습니다. 남녀를 포함하여 576명 지원했습니다. 그중 여학생이 절반 정도 되고요. 특히 주요 과는 내과가 91명, 정형외과 61명, 응급의학과 33명 정도입니다. 이 외에는 모두 일반의 자격으로 군의관 복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도 전공의 복귀 희망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방 분야에서는 적어도 그러시면 안 되겠지요.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전문의 군의관 공급에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합당한 조건을 제시하고 채용 과정을 거쳐서라도 군 의료의 안정성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측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어서 추후 수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방 전문의료인력 수급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우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문의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전문의 부족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보직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부족분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민간 의사로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직업군인을 많이 양성시키는 그런 문제……

○이주영 위원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이주영 위원 예산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책정된 바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용역을 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번 의료개혁 과정에서 보면 다른 공공의료나 지역의료 문제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듯이 앞으로 군 의료의 유지는 급여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지역 정주나 업무 선호도의 문제까지 아마 예산으로서 다 상쇄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 그리고 집행 계획상의 철저한 대비, 그리고 이것은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되 어떤 국민의 자유도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이주영 위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계획 이행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도 의미는 있겠지만 정규분포상 전체 인구의 13.6% 정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것은 IQ를 정규분포로 나타냈을 때 그런 것이고 이 외에도 여러 수준의 지적·정서적 장애나 치매와 같은 각종 노인성·퇴행성 질환 등의 유병률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 경계선 지능의 영역에 있는 국민의 수는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주제의 단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개별 복지적 성격으로 진행될 일이라기보다는 인구의 상당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특징으로 이해하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이번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 죽 간과되어 왔던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저희들이 다 공감했습니다, 사회 분야 장관분들께서.

그래서 이번에 처음 방안이 나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점점 더 확대돼야 되고 또 보다 더 근본적인 그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주영 위원 말씀해 주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7월에 발표된 지원방안의 과제별 소관기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육부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교육이나 직업 프로그램 제공 등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대개는 학생 대상으로 되어 있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이주영 위원 경계선지능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조례를 도입한 곳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게 영유아기에 일찍 발견이 되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대책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성인으로 성장한 상태의 경계선지능인들이 많고 또 후천적인 이유로 앞으로 지적 능력이 감퇴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보다는 실생활에 밀착된 정책들이 먼저 나와야 현재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볼 수가 있고 그래야 앞으로 진행할 정책에 있어서도 양질의 피드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를 지금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교육 분야도 정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고요.

특히 영유아 시기에 조기 개입을 통해서 특히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침 또 저희가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의 중요한 꼭지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경찰청에서 제작하신 ‘업무 관련 읽기 쉬운 자료’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입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이주영 위원** 이런 부분에 한발 앞서서 관심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감사합니다.

○**이주영 위원** 부총리님,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경향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여러 가지 취약성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조기에 인성이나 지능에 관련된 자극을 잘 유도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은……

○**이주영 위원** 효과는 있는데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아, 현재 지금……

○**이주영 위원** 예.

지금 있는 모든 연령대의 경계선지능인의 경우에 피해자가 되기는 당연히 쉽지요. 그러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변호나 상황 설명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조사나 법적 절차의 과정에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조력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검찰청의 경우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군복무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부요원으로 복무할 때 국방의 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지적 특성을 반영한 매뉴얼 등의 지원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도 존경하는 허영·권칠승 의원님 발의하신 형사사법 절차상에서의 권리보장 그리고 김희정 의원님 발의하신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 지원법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부가 경계선지능인의 생활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교육 이상의 기본적인 사회 체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좋은 지적 공감하고요, 특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법무부장관님, 마약사범 치료명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6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서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법원과 협의해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명령 부과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마약사범 치료명령 부과에 대한 법무부의 방향은 확대가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법원이나 이쪽으로 다 연락이 되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이주영 위원 해당 관에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은 보호관찰소에서 전국에 250개 협력병원을 지정해서 치료명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부과명령으로 치료명령을 해 줘야 가능한 것이라서 법원에 적극적인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은 후속조치는 잘하려고,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이런 안으로 그리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온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와는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자료와 비교를 해 보면 마약사범 증가와 비교할 때 아직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는 수준입니다. 법원의 치료명령 부과율이 저조한 이유를 법무부 쪽에서 파악하시거나 혹은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어떻게 좀 더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방법 아니면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사업 대상자 22명 그리고 보호관찰소 누적 관리 인원 124명 중에 재범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지요. 특히 마약 재범이 대개 첫 6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에 개입을 해서 치료에 돌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금 이 시범사업의 결과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법원 쪽에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인권과 재산권에 대한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법무부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사범은 범죄자인 동시에 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식이 부족한 마약 질환자들의 특징을 고려하면 인권과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치료받을 권리라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 파급의 시급성 그리고 파괴성을 생각할 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일부 기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마약 중독이나 재활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올해 마약사범 재활 관련 예산 현황을 보니 중독 재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5400만 원이 책정된 것 외에는 저희가 찾을 수 없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종 수용시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치료명령과 관련된 자체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법무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법무병원의 의사 충원도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수용기관에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전업으로 고용돼 있는 상주 의사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거를 제가 장관이 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장 의사 충원은 쉽지 않은 입장이라서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라도 상담 내지는 이런 중독 심리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을 좀 많이 따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용자들을 좀 잘 보살피면 좋겠다 해서 그 교육받는 비용이 5400만 원 예산 청구돼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충분한 예산입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턱도 없습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저것도 어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어디 학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과정을 이수하고 민간에서 주는 자격증 따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주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간 자격증들이 사실 크게 공신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마약중독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영향과 반드시 맞물리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의사뿐 아니라 중독 재활에 전문화된 간호사라든가 교육을 담당할 만한 사회복지사 등도 필요한 영역이어서……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마약의 경우에는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 번 문이 열리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초기에 과격적인 재정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력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시킬 만한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자체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제가 하나 더 여쭙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나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규모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게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아니면 우리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다양한 가치를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이번에 예결위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곳에 참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모두를 운영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때로는 난처한 일인가 공감도 많이 했습니다. 어제는 저부터도 여러 요청을 드리면서 참 곤란하시겠다 싶어서 송구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혹시 이 예산 결정 과정에 각 부처나 기관과의 어떠한 관계나 감정 등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감정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 경우는 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당연합니다.

○이주영 위원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 부처의 어떤 사업인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에게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 혹은 증액을 매우 열정적으로, 심지어 직접 요청하신 이후에 저희 의원실에서 현황 파악이나 자료 요구에 들어가면 해당 부처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기재부 쪽에 잘못 보이면 예산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내년도 예산 책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질의를 하거나 이슈를 만들지는 말아 달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각 부처 기관장님들, 특히 실무진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각 부처가 기재부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 모든 산하기관도 그 주무부처의 눈치를 똑같이 보고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는 식의 고충을 여러 번 토로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행정의 어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기재부나 기타 유관부처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사람들 간의 소통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종류의 오해나 혹은 문화가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재부를 비롯해서 모든 장관님들 그리고 기관장님들께서 실무진들의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정확하게 상호 납득 가능한 자료와 그리고 방식으로 예산편성에 신뢰를 좀 더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기관들과 치열한 협의와 논쟁을 거쳐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된다는 것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안이 최종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는 모든 부처가 다 합의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합의한 예산이 이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이게 정부에서 합의한 예산안을 깨는 거기 때문에 일부 실무자들은 그런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대부분 다 오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주영 위원 이게 유관기관과 실무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유관기관에서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무 입장에서는 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저도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여러 번 겪은 바가 있습니다. 실무진들의 고충에 대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이라 모두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공통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초동 법원에 가면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도인터내셔널이라고 있더라고요.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을 미끼로 해서 약 3만 6000명 모집한 뒤에 한 4400억 정도 유사수신 범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중의 상당수가 50대·60대 이상의 고령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서민범죄의 특성상 1인의 피해 금액이 5억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서 특경법 적용도 어렵습니다.

이 해당 재판부에는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1556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한 부장판사는 ‘다단계 사기는 대표적인 서민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는 피해를 안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법원에서 형이 선고가 됐냐면, 형이 선고가 됐는데 추징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하기도 바빠서 배상 명령신청 각하나 추징 기각이 관례화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단계 조직 사기는 피해 액수를 특정하기가 참 까다롭고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입출금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따져 봐야 되는데 법원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역량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지금 사실 추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징이 기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기쳐도 남는 장사라는 이런 얘기인데 피해금을 산정할 전문 조사관을 배치할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징도 하고 그래서 엄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법원에서도 추징 금액의 산정이라든지 또 요건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보다도 공판검사 측에서도 추징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하면 아마 추징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보면 법원에서 워낙 피해자가 많고 입출금 내역을 다 따져 줘야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예.

○조배숙 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렇게 가상자산, 코인 이런 걸 활용한 대규모 다단계 사기 또 유사수신행위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이스피싱은 상당히 예방을 홍보도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지만 범죄 예방이나 이런 조치를 정부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다음에 난민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과 법무부가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보면 10건 중 4건은 난민소송입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난민소송의 천국입니다. 그 절차를 보니까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 사람들이 국내 체류자격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난민 신청 심사 여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 하고 또 행정소송 하고 하면 총 3년 4개월 내지 5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때는 안전하게 체류자격을 인정하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주요 악용사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 주도로 난민 브로커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변호사·사무장 공생 난민 브로커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법 제도의 허점을 알고 이렇게 난민 브로커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재판이 폭주하고 있는데 10건 중에 4건, 행정소송 10건 중에 4건이 난민소송이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소송을, 이런 부분은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1심에서 이렇게 난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좀 빨리 진행하는 걸로 해서 행정력의 낭비를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 문제의식이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저희들도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해 보면 대표적인 남상고 유형이 바로 난민소송이라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난민소송은 1심에서 판단하고 나면 그다음에 2심, 3심에서는 대체로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인 지연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인 권리보장은 저희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입법적인 보완조치가 없는 이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난민법 개정안이 제안이 됐더라고요, 정부안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있나 봤더니 이 부분은 없어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문제도 좀 얹혀 있어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외국의 제도, 입법례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난민과 관련된 국제협약이나 이런 데서 소송을 진행 중이면 강제로 출국시키거나 그러지를 못하고 임시적 지위를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거기다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계속…… 우리나라는 어찌면 난민들의 천국인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기체류 자격으로 난민 신청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난민들한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6개월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을 제시했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 상황이, 그렇게 형편이 어렵지 않은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생계비까지 지급을 하는 거는,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할 때는 하겠지만 뭔가 우리 행정력을 속여 가지고 생계비를 받는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이고 국제사회에서 뭔가 발언권도 있고 국제사회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법무부가 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난민이 이슬람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 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에게 이렇게 좀 선언을…… 아니,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난민은 가장 가까운 동일 언어권·종교권·문화권 국가에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 때문에 동일한 언어·종교·문화권 국가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엔에서 해당 국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시리아나 예멘의 난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용하고 또 중국 및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대한민국이 수용하고. 이 난민들이 전혀 다른 언어·종교·문화권 국가에 들어와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이 사회가 불안해지고 난민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무슬림이나 테러리스트의 의도적인 유입행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슬람권에서 발생하는데 이슬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번에…… 성지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하는데 그 성지순례용 텐트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방·난방, 주방시설, 샤워시설이 완비돼 있대요. 그런데 정작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권 난민 수용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 알왈라 왈바라(Al Wala Wal Bara)라는 샤리아(Sharia)법이 있는데 무슬림끼리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는 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원칙을 유엔에다가 좀 제안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예.

그리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반이민·반난민 정책의 기조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여파로 혹시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하는 비율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예측을 좀 해 보

셨나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구체적으로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님,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 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이전에는 이 인터넷 서신 제도가 있어 가지고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형자의 가족이나 친지나 변호사들이 서신을 써서 등록을 하면 그다음 날 교정시설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10월 달에 폐지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조배숙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e-그린우편으로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신 제도는 무료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고 또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변호인의 경우에 또 피고인의 경우에 신속한 접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변호인 조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접경교통권도 그런데요. 좀 이것을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이 제도가 아마 나쁜 쪽으로 악용이 돼서 여러 가지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계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그 외에 e-그린우편 제도를 도입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 전에는 전날 바로 신청하면 접견이 좀 어려웠었는데 당일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접견 호실도 확대하고 접견 예약 마감 시간도 늘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를 취해서 변호사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변호사하고 만나는 시간은 충분히 아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장관님, 저희들도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의 경우만이라도 허용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음란성·사회성 유해 서신이나 건수가 너무 많다,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게 발각이 되면 징계조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도 변호사협회에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변호사협회에 통지도 해 주고 그쪽에서도 저희들 한 조치에 대해서 많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만이라도 풀어 주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변호사가 징계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위법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변호사의 경우에는 등록된 변호사의 숫자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변호사들이 기고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니,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서신에 하면 전날 0시까지만 하면 그다음 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e-우편을 이용하면 한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님하고 교육부총리, 제가 어저께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학교급식조리원 등 공공기관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 중심의 근로자를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일인당 연간 24시간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한 것을 보니까 지금 1년에 24시간을 하는데요 휴일에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이 산업안전교육이어야 하는데 산업안전교육과 무관하거나 굉장히 부실한 그리고 또 무슨 관계없는 일반 교양강좌 해 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초중고에 나가는 예산이 350억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 안전교육을 휴일에 한답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위탁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테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조배숙 위원** 그런데 또 기초자치단체는 산림감시원이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출퇴근 시간에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주지 않고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다음에 교육부총리님, 지금 보니까 어저께 제가 지적한 것은 초중고가 1년에 350억 정도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는데 거기 말고 또 교육부 직속기관인 과학고·외국어고·대학을 포함하면 이런 현업업무종사자 교육 비용은 400억을 크게 넘을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산재 현황을 보니까 현업업무종사자 교육을 했을 경우에 산재가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가지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배숙 위원** 11월 16일에도 시민사회단체인가요, 윤 정부를 탄핵한다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16일 날…… 내일이 수능시험 아닙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16일 날은 논술시험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조배숙 위원** 논술시험인데 그쪽,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통이 굉장히 혼

잡할 텐데요. 보니까 논술시험을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고 그날 오전에는 여기를 보고 오후에는 저기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그럴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집회 장소를 중심으로 교통 정체가 일반적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여튼 교통 소통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저는 경찰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리도 낯선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학생들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심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걱정과 짜증을 유발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재부차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해서 부하 직원을 잘 모른다고 했다고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억을 되살려 안 본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열두 번 정도 계속 반복했는데도 이것은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위증교사를 했다고 또 검찰이 3년 구형을 했습니다.

또 김용에 대해서는 시간, 장소, 타임라인, 알리바이 물증,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했는데도 물증도 없는 피의자 유동규의 말만으로 중형을 구형하고 계속 엉터리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이 영수증도 없는 특활비를 떡값으로 막 사용하고 마치 조폭·범죄집단이 자기 조직 관리하듯이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이들에 대해서 국회의 심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 될 증빙서류라든가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본격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76년 전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을 약 7500명 정도 했는데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1800명만 확정하고 그중에서도 1000명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인원은 800명, 약 10%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의 2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고,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대책과 언제까지 이 확정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특수성이 있는 게 진상규명과 희생자 구제 이 절차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을 판별하는 직원들의 수가 좀 모자란 것 같아 가지고 그 인원도 이번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신 10%보다는 훨씬 많은 한 25% 정도가 신청 대비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사자들도 늘렸고 했기 때문에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지금 76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족들도 70세·80세·90세 돼서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자들도 너무 억울하고 또 선조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려고 하는 유족들도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조사위원회도 충원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김문수 위원** 이번에 76주년 전남 행사에 국회의장님과 총리님까지도 오셨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실무적으로 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김문수 위원**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세수입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해서 지방교육청들의 예산을 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 교부금 미교부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이고 약 2500억 전체 예산 중에 0.6%입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고 그 전과 그 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교부금을 정상적으로 다 내려보냈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 했는데 다시 2023년·2024년 특히 23년에는 10조, 약 13% 정도를 교부하지 않았고 올해도 약 4.3조, 6.2% 정도를 교부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유독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랬고 규모가 작았는데 윤석열 정부 돼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이 다 근무하실 때예요, 보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2013년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교체될 해라서요.

○**김문수 위원** 어쨌든 책임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김문수 위원** 우연인지 이렇게 그때하고 그리고 제가 차관님은 잘 못 살펴봤는데 기재부장관님이 보니까 그때 당시 2013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이 그때 배운 기술을 가지고 이번에 다시 들어오셔 갖고 또 써먹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침 두 분이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실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2013년도에는 좀 양심껏 어쩔 수 없다, 작은 규모로. 그런데 아예 2023년·24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대놓고 ‘저때 저렇게 해 보니까 할 만하더라’,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정말 너무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이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2013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라서 그 책임 소재는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묘하게 아무튼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런 수치들도 그렇게 좀 뭐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아무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화면 보실까요.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교육청 재정은 거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80%, 76%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수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전수입을 예측대로 지급을 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살림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바로 지방교육청 상황들이라서 법대로, 규정대로, 예측 가능한 대로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당연한 원칙입니다.

○김문수 위원 그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당연히 대한민국헌법 제54조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서 행정부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보조적인 수단을 쓰라고 해 놔는데 이상하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불가피할 때만 사용하라는 그런 법 조항을 더 그냥 대놓고 써먹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에도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교부금법에도 원래 지급하기로 한, 이전하기로 한 돈들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2년 뒤까지 정산을 해서 다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교부금법의 중요한 규정을, 우선시되는 이 법 조항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국가재정법에 있는 예산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라든가 국고금 관리법에 돼 있는 세부자금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극히 예외적이고 편법적인, 예외적인 데만 사용해야 되는 이런 법률 조항을 악용해서 오히려 헌법이나 지방자치법보다 앞세워서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법을…… 검사를 하고 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이런 일을 맡겨 놓으면 정말 법대로, 순서대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많이 알고 될 많이 알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법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편법이……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제가……

○김문수 위원 아직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예, 나중에 드릴게요.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보수 정권이 전반적으로 쪽 그래 왔다, 법을 가급적 감옥에 안 갈 정도로 편법을 쓰는 게 우리의 기술이라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그 부분은 너무 정말 계속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데요.

○김문수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세수결손이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재부차관께서 담당하시니까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아까 보면 유독 이 정권이 규모도 크고 또 그전에 다른 정권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권 때만 그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부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 주장을 하시려면 정말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하셔야지 단순히 사람 몇 명이 겹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정말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재부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교육부장관이…… 아무튼 제가 이따 할게요.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같은 경우도 10조를 쉽게 말해서 미교부, 돈을 안 내려보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들에서 기금을, 안정화기금에서 1조 9000, 시설기금에서 약 6000억 그리고 기금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 5조 정도 저축을 또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설비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에 교육청에서 약 3조 정도 사업을 못 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안 내려보내다 보니까요.

기금은 원래의 목적대로 당연히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썩짓돈, 주머니 돈 갖다 쓰듯이 막 쓰라고 한 게 기금이 아닐 겁니다.

차관님께 한번 여쭙볼게요.

만약에, 교육청에 있는 안정화기금의 적정 규모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각 지방교육청별로 다를 거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쌓였던 게 21년, 22년 예상보다 엄청난 초과세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60조가 더 들어오게 되면 일반 지자체, 교육 지자체 합쳐서 24조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21년, 22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에 그런 여유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23년 그리고 올해 같은 세수 부족 사태가 있을 경우에 그 일부를 활용하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의 어떤 취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적정 규모가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를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거기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문수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재정안정화기금은 시·도교육청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축적을 하는 거고요.

○김문수 위원 아니, 그래도……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얼마를 하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 톨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일정한 규모가…… 있으면 예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 92조의 8%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급준비율 금융에 보면.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구체적인 어떤 재원 조성이나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안정화기금의 적정 유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많다, 또 씹짓돈 쓰듯이 급하다고 하고 그냥 쓰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화기금 또 시설기금 관련해서는 적정 규모 기준이 뭔지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도 없다 보니까 이게 막연히 많다 그랬다, 많으니까 갖다 쓰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이게 10조 사용 중에, 기금이 약 5조가 줄어들거든요. 전체 18조 중에서 5조가 줄어서 13조, 18조 중에 13조 남아요. 이런 식으로 한 해에 5조씩 그냥 그동안에 잘 유지되던 것을 막 갖다 쓰면 이것 1, 2, 3년 사이에 그냥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기금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게 제가 보기에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다 제가 질문하니까 24년 말에는 다시 11조로 올라갔다가 25년 초에는 다시 6조 원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보고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막연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무 기준도 대책도 없이 그냥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볼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 안에서도 교육위원회, 저는 깜짝 놀란 게 국회 안에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야 없이 당연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 예산 부족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 예산은 충분하니까 그냥 깎아버리고 없애 버리고 안 줘도 됩니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하시길래 참 답답한 분들이다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교육적이지 않고 교육을 챙기지 않는구나.

요하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보수정권만 들어오면 교육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빨리 갖다 쓰자 이렇게 하거든요. 교육 쪽으로 비중을 높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수정권이.

왜 그러냐면 제가 박근혜정부 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을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을 해 놓고는 국비를 별도로 내려보내 주지 않고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는 그걸 집행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도 보면 어쨌든 공약은 자신이 해 놓고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갖다 쓰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일이 그때도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일들이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 지금 교육 예산은 제가 지금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계속 상당히 많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요. 제가 MB 정부 때 일할 때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정부가 교육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좀 얘기해 주시면……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번 볼게요. 우선은 들어오는 예산, 나가는 예산 그것……

내년도에 보면 교부금이 3.4조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3.4조 원 늘어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은 최소 추가되는 예산이 당연히 인건비 같은 게 물가상승률만 해도 자연 증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2.1조 원이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또 늘봄학교 등 신규사업 하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약 1조 원 가까이 되고 해서 이것을……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 1조까지도 교육청에 떠넘기겠다 이러다 보니까 교부금 증가하는 것 대비 자연 증가분 포함해서 신규 사업들, 꼭 교육부에서 하기로 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합산하면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그것 말고도 아까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제거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2.9조 정도가 되고 또 기금에 계속 저축을 해 줘야 되는데 저축을 안 해 버렸잖아요. 그것도 5조입니다. 이것만 해도 한 8조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교육부에서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장관님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와 데이터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신규 정책 수요를 보면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를 통해서 한 1.2조 정도가 더 소요되지만 디지털교육 혁신은 워낙 작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작년 비교해서 오히려 0.3조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신규 정책 수요로 보면 0.9조 원이라 1조 원에 못 미치는데요. 이제 3.4조 원이 내년에 늘기 때문에 사실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으로 이전을 해도 충분하다는……

○**김문수 위원** 장관님이 주신 자료를 그대로 제가 더하기 빼기 했더니 0.6조 원 부족 나오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요, 잠깐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교육감님들 열일곱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3년 연

장 법안 민주당이 내놔는데 이거 찬성하느냐. 보수·진보 무관하게 전체 교육감님들이 고교 무상 국가 부담 계속 3년…… 좀 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처음에 워낙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특히 담배소비세가 일몰되는 거였는데 이번에 2년 연장을 하면서 사실 그 양해를 드러서 교육감님들이 좀 설득이 됐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열일곱 분 다 고교 무상교육 다시 국가 부담으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게 아마……

○김문수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최근에는 조금……

○김문수 위원 의대 사태가 해결돼야 된다는 전제고 저희 전남 같은 경우는 의대가 없고, 그러니까 의대 문제가 과잉되게 의사가 많은 지역은 너무 많고 또 저희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예 없는 데는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의대 문제,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을 통해서라도 의대를 꼭 유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만 달라는 데에 계속 더 증원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처럼 아예 없는 데는 주지도 않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통합 전이라도 통합 합의를 통해서 신입생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의평원 예비 인증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 좀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간의 통합은 정말 중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이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만 통합이 완전히 절차가 다 통과가 돼야 그게 또 통합대학으로서 의대 정원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세세한 것들은 의원실에 가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저 한 30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정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께서 저희가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방교육교부금을 배정 유보한 것에 대해서 감옥을 안 갈 정도의 기술을 썼다고 하는데 저희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든 내국세에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국세의 변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도교육청에서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들어가는 돈, 나가는 돈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차이 때문에 내년도에 77조 원의 재정적자가 있고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도 국채 순증 발행 80조 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국채 발행 규모가 200조 원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거제 서일준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9년 4월 15일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발의한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입니다. 이때 총 오십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했는데요. 의안 원문에 2024년 12월 31일이라는 일몰규정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교부금법입니다. 부칙 제2조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몰규정이 된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혹시 내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의 99.4%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상교육은 변함없이 추진됩니다.

○서일준 위원 삭감은 사전적 의미로 깎아서 줄인다, 고의로 줄였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99.4%를 삭감했다는 민주당의 주장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일준 위원 이 일몰규정 언제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일몰규정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기재부2차관님, 이 일몰규정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 없었던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이 일몰규정이 민주당 정부 때 만들었던 겁니다. 자료에 보면 그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몰규정을 없애자고 수정안 발의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100% 가짜뉴스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부자세금 깎느라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총리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결코 사실과 다르고요. 고교 무상교육은 시작될 때부터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 후안무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에 보면 무상교육, 윤석열 정부에서 포기했다 이렇게 호도하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민주당에서 일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마치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것처럼…… 아무리 정치지만 교육 분야까지 이렇게 정쟁에 끌어들이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은 고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21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을 비교한 현황 자료입니다. 21년과 내년도 정부안을 비교했을 때 약 12조 원,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 기금 보유액도 약 1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일몰법상 증액 교부금, 즉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9400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앞의 화면에 보시면 교부금은 12조 늘었습니다, 2021년에 비교해서요.

또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학생 수는 130만 4000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동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지금 야당에서 일몰 3년 연장법안을 강행 중인데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어서 증액 교부가 연장이 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 예산은 규모상으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교육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의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담배소비세 일몰규정 연장을 해서 또 시·도교육청에 그 재원이 갈 수 있도록 마련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1.6조를 더 마련해 드렸기 때문에……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9400억 국고 지원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많이 1조 6000억을 더 지원한다는 것은 이걸 정말 애들 가르치는 데 정쟁 소지로, 말도 안 되는 정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이번에 저희가 교육 예산은 최대한,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최대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예정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지 부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들께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정부가 책임지고 무상교육을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으로 늘봄학교를 드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주변 우리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도 확인을 해 보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90%가 넘고요. 평균 잡아도 80%가 다 넘습니다.

○서일준 위원 저희 지역은 90% 넘는 것 같은데, 한 80% 이상은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역대 어떤 정책도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님들께서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힘이 늘봄학교라는 제도를 통해서 잘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올해부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 하셨는데, 현재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참여율도 한 82.7%, 초1 같은 경우에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초1에서 초2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1, 초2까지 할 경우에도 80%대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하는 거고?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후년인 2026년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맞습니다.

○서일준 위원 2026년이 되면 전체 학생으로 확대를 하는데요. 고학년으로 확대가 되면 사교육하고 좀 경쟁이 되니까,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고학년 참여율이 어떻게 됩니까? 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 부분은 저희가 빌드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고,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고요. 그 성공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특히 대학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회기관들도 참여하고 있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정말 사교육을 대체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면 사교육 감소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고학년들 참여율은 프로그램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부총리께서 말씀처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늘봄학교는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야당 위원 측에서는 예산 감액을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늘봄은 지방교부금에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국가가 좀 많이 제공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도 지원하고 또 지금 교육부뿐만 아니고 타 부처들도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보건부의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 좋은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꼭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계속 증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일준 위원 부총리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가 많습니다.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교육과정이 5년으로 단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의 질과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신 국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사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가운데 일정 부분 와전이 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 확실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워낙 의정 간에 불신의 벽이 높다 보니까 정책을 발표해도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왜곡돼서 많이 전파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의대 5년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고 6년제 틀 내에서 학생들이 1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아무래도 빠르게 공부를 해서 졸업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들의 질이 절대 저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때 그것을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6년제를 5년제로 바꿔서 제도를 도입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와전돼서, 이렇게 확대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 7500명 의대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 대책은 마련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사실 7500명 하니까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만 개별 학교로 가면 50명 가르치다가 150명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50명이라는 숫자도 워낙 계속 증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한 100명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시설 여유가 있는데 50명이 정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150명으로 더 가르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또 좀 무리가 가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개별 학교별로 문제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대형 강의실을 활용한다든가 다학기제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가 일대일로 40개 의대를 가진 대학들과 협의를 잘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재원과 또 교수요원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수 채용은 지장이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1000명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한 330명 규모로 채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시설확충 예산을 1조 929억 편성하셨던데 이것 문제없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시설도 대학의 수요를 다 받아서 워낙 저희가……

○서일준 위원 이게 예타 대상입니까? 아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타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오랫동안 시설투자가 없이 좀 누적됐던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가 좀 현장 확인을 죽 해 보고 예타 없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일준 위원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놓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사항인 만큼 재정 지원과 여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방사청장님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방사청장입니다.

○서일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야당이 원전에 이어서 방산수출까지 판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이다, 쪽박이다, 이면계약이라고 하면서 훼방을 놓는 야당이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장님, 전 세계에 방산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없지요?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예.

○서일준 위원 저는 K-방산이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기술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좋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납기가 빠른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장점으로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 방산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2022년 4개국에 불과하던 수출국도 지난해 열두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품목도 보면 전투기, 함정, 잠수함, 자주포, 탱크, 대공미사일, 지대지미사일,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현재 무기 수출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부의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외교관계 그다음에 국익 그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출은 적시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업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영업비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 크게 제한이 없고요. 또 현재의 시스템으로 해도 현재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정말 이걸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법안심사할 때 철저하게 디펜스를 해서 정말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위사업청장 석종건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기재부2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위원님.

○서일준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 관련해 가지고 좀 증액을 하자 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예산으로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자율방범대 예산 혹시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서일준 위원 2000만 원대였습니다. 사실 올해 지자체 예산으로, 자율방범대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291억 원이 지원되었지만 제가 이것 증액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요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게 어떤 지역은 한 88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데 반해서 또 어떤 지역은 1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자율방범대원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앙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원이 전체 한 9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 편성한 2000만 원이면 일인당 217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일선 현장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지만 자율방범중앙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청 아니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경찰청 예산을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서일준 위원 이것 기재부에 예산 요청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사실 본 위원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 한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정말 열심히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안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추가 확보에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알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행안부장관님, 경찰국 예산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서일준 위원 경찰국 설치하는 데 법상 문제 있는 것 없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전혀 없습니다.

○서일준 위원 전혀 없는데 이 경찰국 예산 야당에서 전액 삭감하겠다는데 이 주장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좀 수궁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렇지요? 전혀 법상 문제가 없으면 이 조직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렇습니다.

○서일준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서일준 위원 2차관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서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임호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총리님, 제가 지난번 결산 때 그때 8월에 말씀드렸던 사안이거든요. 유보통합 인포그래픽 그때 띄웠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 보면은 24년 11월부터 유보통합 신청 사이트 일원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돼 있지요, 아직?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했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포털로 해서 일원화했습니다.

○임호선 위원 유치원 상시입학제 도입, 내년 3월에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유치원……

○임호선 위원 상시입학제 도입이라고 돼 있던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좀 계획이 변경돼서……

○임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 문제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유보통합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재정계획,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 대국민 담화에서 4대 개혁 강조하시면서 유보통합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 우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여기 인포그래픽에 명시된 대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하는 데 1.5조 원, 그리고 단계적 무상교육인데 5세가 내년 목표잖아요. 거기 예산 추계가 8162억 이렇게 나왔거든요. 반영 안 됐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금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5세아, 유치원 또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임호선 위원 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많게는 11만 원, 적게는 7만 원인데요. 그걸 무상으로 해주는 예산, 다시 보니까 280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국고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 맞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안 됐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책 따로, 예산 따로가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내년에 어떤 일을 정부에서 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거지요. 숫자로 치환된 정책이다 이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위낙은 지방비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호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지방비보다는 국고로……

○임호선 위원 그런데 영유아 유보통합을 지방비에 기대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왜냐하면 예산 소요액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로드맵 자체에 0~1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로드맵에, 여기 지금 인포그래픽에도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업데이트를 시켜서 최근 걸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면 예산 소요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7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압니다.

○임호선 위원 아마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다 넘어와서……

○임호선 위원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취원율이 39%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인 재산의 국가 귀속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적용이 되는 문제하고, 지금 영유아 관련돼 가지고는 교육부에서 관장해야 되는 문제하고 이원화돼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임호선 위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국공립 이런 데보다도 이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사실은 치매 어르신들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 관심 가져서 퇴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이제는 장관님의 몫이다 하는 말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9월 달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고요.

○임호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만 답변 듣겠습니다.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면서 여기서 말씀드렸었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계 재산에 대해서,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치안센터, 이거하고 조금 통계는 다른데 한 213곳 정도가 폐지가 됐나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 정도 됩니다. 200개 좀 넘습니다.

○임호선 위원 됐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자치경찰 또 방법대원 말씀하셨는데 오늘 자치경찰 토론회가 있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있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가면서 자치경찰제는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임호선 위원 저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로 인계를 하는 게 맞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91년도 경찰청이 개청이 되면서 그때…… 제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90년도까지 제 신분증을 충북도지사가 발급해 주셨어요. 경찰국장은 기관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조기관이었습니다, 도지사의.

그래서 경찰청으로 외청이 개청이 되면서 경찰 재산이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 했어요. 빠뜨린 거지요. 그래 가지고 모든 지구대, 그때는 파출소지요. 파출소 또 지서라고 그랬지요. 그게 전부 다 시군이나 도에 있었어요. 그걸 91년도부터 작업을 해서 경찰청 자산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토지·건물 일람표를 보면 224군데, 개소수가 아니라 토지, 건물 합쳐서요.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제천의 경찰수련원 가 보셨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니다.

○임호선 위원 가 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경찰관과 그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 쓰지 않는 자산을 제천시에 넘기면서 그걸 임야하고 바꿔서 그 연수원 부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갈 게 아니라 자치경찰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요, 이게 특히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감당해야 될 몫이 무척 중요하고 커졌습니다. 또 농촌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는 자율방범대, 앞서 존경하는 서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에 몇십만 원 수당 주고 안 주고, 매식비를 주네 안 주네가 아니라 이렇게 쓰지 않는 치안센터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제공한다면 어마어마한 치안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문화축제 전부 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경찰관 눈에 잘 안 띵니다. 방법대원들이 전부 교통 통제해요. 중앙선 들어가 가지고 정말 목숨 내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12시, 그분들 가정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헌신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 그것도 경찰에서 돌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그분들 드려야 돼요. 이걸 왜 캠프에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만든 자산인데.

○경찰청장 조지호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하여튼 청장님, 제가 청장님한테 짜증내는 게 아니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 특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하에서는 국유재산……

○임호선 위원 물론 특례를 만들어서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자치경찰하고 맥이 닿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자율방범대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는 데 말고요 컨테이너 이런 데 파출소 전기·수도 끌어 쓰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 끊기면 그분들 당장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야지. 국민들 치안이라고 하는 게 꼭 경찰만의 몫이 아니다,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총리님, AI 교과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강조 말씀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받으셨을 겁니다. AI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립학교 33곳의 교과서 예산만 내년에 39억 원 담았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임호선 위원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맡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부금으로 하게 됩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9개 시·도교육청에서 신중검토 의견 낸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문제는 교과서 예산이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AI 디지털교과서를 하려면 구독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임호선 위원 구독료 비용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계낸 거 시나리오별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봤습니다. 그보다는 조금 낮은 액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일 낮게 추산한 게 2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훨씬 낮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가 감당할 것인지 시·도교육청에서 감당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면 이걸 가르칠 선생님들의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수박 겉핥기식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지적 많이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가 작년에 법이 통과되면서 올해 대규모의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중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면 과목별로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담임이 맡게 되는, 3월 달부터 하면 보통 1·2월 달에 담임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저희가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정말 집중적으로 그 관련 과목들, 지금 영어 수학 정보, 세 과목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학년에 실시가 될 겁니다.

○임호선 위원 물론 아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그래서 그 교사들에게는 정말 집중적으로 연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제가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거 예산 문제 시·도교육감님들과 몇 차례라도 만나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 진짜 수차례 얘기를 드렸고……

○임호선 위원 말씀하셔야 되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또 교육감님들이 요구하신 사안 저희들이 대폭 수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금요일 날……

○임호선 위원 제가 왜 걱정하시는지만 말씀드릴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말씀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국고로 할지 지방교부세로 할지 국회가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국감에서 지적 받으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여러 번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셨지요. 이게 2021년도에 541억, 22년도에 574억, 23년도에 똑같이 574억, 그런데 금년에 287억으로 줄었는데 내년엔 80억으로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니깐 이것 역시 지방이양이 되면서 매칭 비율이 줄고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줄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강사료 89억은 완전히 0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호선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지방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방예산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국비가 287억이 감액이 됐는데 지방교육재정 쪽 다 살펴보니깐 23억이 증액됐어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국고 감액 비율에 따라서 매칭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렇게 돈이 부족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하면 학교예술강사 교육시간을 153만 시간에서 104만 시간으로 50만 시간을 줄인 겁니다. 50만 시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제가 따져 봤어요. 50만 시간이면, 그러니까 예술강사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마 장관님이 제일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분들이 한 5000명 근무하시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런데 200명이 이탈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 준 만큼 일인당 400만 원이 준 거예요, 시수가 50만 시수가 줄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강의하시던 분들도 일인당 1200만 원 정도, 그래 봐야 한 달에 100만 원인데 여기서 400만 원이 준 거예요. 그래서 800만 원, 고루 시간을 맡을 때 1년에 800만 원, 1200만 원 가지고 교육하시던 강사님들이 800만 원으로 수입이 주니까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시·도교육청하고도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예술강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이거는 교육재정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늘봄강사나 아니면 또 사회·예술 쪽의 예술교육을 굉장히 확대할 거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 장관님, 저는 이게 강사들의 호구지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의…… 국악, 연극, 무용, 8개 분야 예술강사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정말 조기 교육을 받는, 특히 시골일수록 접할 수가 없어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면 시골에서는요 이 교육을 접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과외를 보낼래도 보낼 데가 없어요.

제가 충북 증평·진천·음성이잖아요. 혁신도시에 몇 군데 무용학원이 있고요 나머지 읍소재지에도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골 위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꼭 유지하고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 ‘아파트’ 같은 노래도 만들어 내고 안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너무 걱정이 안 되시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어쨌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간 내년도 시행을 해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임호선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 예산에 지금 국고를 이만큼 국가에서 예산을 줄였으니 장관님이 노력해서 가지고 이거 국회에서 살려낼 수 있으면 살려 내시고 못 할 것 같으면 시·도교육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지고 제대로 편성을 하계끔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임호선 위원 회복시켜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저희들보다는 국회에서, 증액 논의는 국회에서 해주셔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임호선 위원 제가 그런 관심 없으면 이런 질의를 뭐 하러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도로 예술강사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여가부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위험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기청소년들의 자살 위험성 상당히 높아진 거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임호선 위원 자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시도별로 보면 백다섯분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고위험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 인력 배치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니깐요, 105명이…… 서울, 대구, 경기 이런 데는 같거나 늘었어요. 그런데 충북, 충남…… 충남은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어요. 경북 5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이게 있잖아요, 보통 1개 시군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명이 준 게 아니에요. 1개 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자살 관련된 클리닉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이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예,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전담 인력 배치는 지역의 채용 현황이라든가 수요조사라든가 청소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충북 음성 같은 곳은 배치가 됐어도 아마 모집이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경북도 마찬가지로요. 경북도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올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넓은 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서 다들 문제가 아니라 인력을 늘려야지요. 그래서 배치되지 않는 상담센터가 없도록 확충시켜 나가야 될 문제지 이거 가지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직무대행 신영숙 배치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우리 문체부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몇 %나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1.0…… 한 6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정 1.0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 박정 한 1.34에서 계속 줄고 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런데 누가 뭐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K-컬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교육에 맡겼던 부분들을 이런 문화예술강사들이 첫째로는 접하기 어려운 지역, 지방에서 인구소멸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소의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서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할 기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사교육이 가능한 데들은 그렇게 사교육을 접하게 하면서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기회조차도 안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거의 1200만 원이고 거기에다 4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800만 원 밖에 못 받으신다 그러면 거의 재능기부나 마찬가지로인, 봉사를 하라 이런 상황인데 그 생태계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다 넘겨서 해야 된다는 원칙은 이해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 원칙이 적용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국회 증액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2차관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열어 놓고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어떤 시수나 금액의 문제보다도 예술강사가 시작된 지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해 오면서 현장과 실제 학교와 또 약간 서로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의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채울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오히려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자기들 학교의 예술교육은 스스로가 자기들에 맞게 하고 싶다 이래서 스스로가 예산을 다 채운 그런 지자체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 국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채워지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하고 싶다는 지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위원장 박정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아무래도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지만 그런 재정적 여유조차 없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편차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고 또 지자체하고 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체 예산의 1.06밖에 안 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또 줄어든다는 거는 정말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좀 모순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정 자료제출 요구 위성곤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서 문화예술강사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해 달라고 요구한 지자체가 어느 지자체인지 목록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이렇게 해서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오늘 보충질의를 신청하신 분이 일곱 분 계신데요. 내일도 우리가 비경제 부분 2일 차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식 없이 바로 진행해서 좀 일찍 귀가하시고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 첫 번째는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갑의 박지혜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입니다.

늦게까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님, 장관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 의정부가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원래 제 고향이 연천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땅의 항구적인 평화를 바라는 그런 접경지역 주민의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에 노출된 메시지가 있었지요. 당시에 국가안보실장께서 과병 내지 연락관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연락관이라고 했었는데요, 요새는 참관단이라는 명칭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할 수 있을까요?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 대통령께서 지난 7일에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는 북한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에 따라서는 차등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할 텐데 방어무기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기 지원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도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박지혜 위원 사실 저희도 많이 걱정이 돼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계속 인력이나 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화되고 있는데 현재의 우리 입장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 부분을 여쭙본 것이라기보다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미국이 어떻게 이 우크라이나전에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것은 아직……

○박지혜 위원 당연히 단계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상황 인식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지금 실행정부의 스탠스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측을 할 뿐입니다. 현재는 바이든 정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박지혜 위원 그런데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국내외 언론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무기 지원도 줄이고 현재 전선을 경계선 삼아서 종전 내지 휴전하겠다 이런 유의 말씀을 여러 번 당선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북한이 이미 러시아 쪽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파병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이나 물자를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는 것은 우리 땅에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북한과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 정부가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 유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끝나서 2026년 것도 결정이 되어 있고 2030년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결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을 때 다시 방위비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국방부장관 김용현 그럴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일단 바이든 정부와 협상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비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우리가 비준을 받아서 서로 한미 간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협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혜 위원 우리가 어쨌든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 아들과 그리고 우리가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깐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협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기재위에서 좀 파행이 일어났지요. 예산소위에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예비비 적정 규모를 가지고, 조정 규모를 가지고 정부 측에서 야당안을 수용하지 않아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내년도 예비비 4조 80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적정한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책정된 예비비가 남느냐, 부족하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작년에 예비비 4조 6000억 했는데 집행이 1조 3000억, 미집행이 72%가 되는 3조 3000억이었지요. 금년에 4조 2000억 책정됐는데 집행되지 않은 게, 물론 10월까지입니다마는 3조 6000,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내년에 아마 야당 측에서 제시한 금액 정도는 정부에서 받아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체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4개가 개관돼서 운영되고 있고 대전관, 진주관, 대구 해서 3개관이 건설이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런데 여기서 빠진 데가 호남권하고 또 강원권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안도걸 위원 지금 광주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지를 다 시비로 마련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 구상도 완료했고 또 장관님과 아마 관련해서 긴히 협의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 9월 5일 날 광주에 오셔서 가지고 광주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광주에 문화 인프라를 좀 확충하시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문체부에서는 호남권과 강원권 쪽에 새로운 분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좀 넣겠다 이렇게 생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 상임위의 민형배 의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이 분야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재부에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1단계 사업, 지금 성공적으로 금년까지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AI 전문기업이 270개 정도가 생겼고 특히 한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이전

하거나 신설이 됐거든요. 요즘에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 역류를 했지 않습니까? 아주 반가운 그리고 아주 귀한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2단계 준비를 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9월 5일 날 민생토론회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아마 기재부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기정통부에서는 한 9000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그리고 내년도 적정 소요 반영에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다른 3개 기술원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유일하게 내년도에 삭감이 좀 돼 있네요. 그리고 부지도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IBS 연구단을 새로 유치하면서 연구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연구원을 시급히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LH로부터 가계약을 한 부지가 있습니다. 아니, 계약을 한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했는데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매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산이자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입을 서둘러야지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나로우주센터 있지요, 고흥에. 그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26년이 되면 이제 민간 발사체를 우리가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완공은 됩시다라는 이것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진입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러합니다. 지금 2차선 도로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또 경사고 아주 굵이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진입도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만 민간 우주발사체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예타 면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간단히 답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께서 3개 사업, 거의 한 1조 6000억, 1조 7000억 규모의 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안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임미애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임호선 위원입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경찰청장님, 내일 수능 날이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수능인데 내일 집회 신고가 돼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예.

○최형두 위원 집회 신고가 상당히 많이 돼 있지요. 서울역, 송레문, 시청역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회 신고돼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형두 위원 내일 경찰들이 수험생들 안전하게 시험장 가는 것 그다음에 끝나고 수험생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요?

○경찰청장 조지호 예,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형두 위원 만일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관리에 문제가 없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2개는 분리해서 수능 관리는 수능 관리대로 집회 관리는 집회 관리대로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최형두 위원 집회 규모를 보면 그 집회 주최자들은 30만 명, 40만 명, 예컨대 지방 소도시의 인구가 거의 다 모인 정도의 인구가 모였다고 그러는데 경찰 집계를 보면 1만 몇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이 집회 규모를 일부러 낮추려고 그러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이 추산하는 것이 실증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최형두 위원 어떻게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저희들은 페르미 방식을 적용하는데 서서 집회하는 경우에는 3.3㎡ 당 9~10명, 앉아서 집회하는 경우에는 5~6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집회 장소의 면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추산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고, 2017년경에 집회 참가 인원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실제 카운팅을 해 본 결과 저희들 추산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북한군의 파병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급격히 종전이라든가 휴전으로 갈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용현 여러 가지 그런 우려와 함께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우리 역사를 보면 1953년 1월에 아이젠하워가 집권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전 종전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아, 예.

○최형두 위원 6·25라는 갑작스러운 북한군과 공산군의 남침으로 수많은 미군과 전 세계 유엔군이 죽습니다. 죽어서 미국 사이에서도 염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그래서 당시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와 비슷하게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고 실제로 당선인 신분엔 한국을 방문하지요.

그로부터 7월까지 무려 6개월 이상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에 미군들의 기록을 읽어 보면, 헬버스탐의 ‘콜디스트 윈터’ 같은 책을 읽어 보면 당시 미군들이 휴전 이야기는 나오는데 휴전 때까지 너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고지전과 한치라도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통에 비기기 위해서 죽는다, 다이 포 어 타이(die for a tie)라고 하는 기막힌 절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도 염두에 되야 되고.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끝냈습니다만 지금 젤렌스키도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역사적인 하나의 유사점 같은 게 발견

되는데, 어쨌거나 이게 일각에서 이야기했듯이 쉽게 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거기에 북한군이 동원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뜻밖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사리 트럼프의 당선으로 종전…… 끝난다, 그러면 끝난다, 다 끝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차관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동맹이라는 측면으로 이제는 AI동맹으로 가야 됩니다. 과학동맹이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정학 시대가 되었고 미국과 중국이,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더 디커플링된다는 사실이겠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그렇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제 AI혁명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AI 투자 규모가 너무 엄청나서 미국조차도 예컨대 세계 문명을 바꿀 만한 AI의 큰 인프라를 하기가, 돈을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AI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이 한번 같이 큰, 5GW급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어떠냐 했는데 한미동맹도 이런 과학기술동맹, AI동맹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 없습니까, AI 인프라를 같이 짓는 방식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현재 한미 간에 AI를 포함해서 핵심 신흥 기술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미 간에 AI 워킹그룹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신행 정부와도 그런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형두 위원 한미동맹은 새로운 AI동맹으로 진화함으로써 지정학적 리스크도 줄이고 우리도 새로운 문명의 선두에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예.

○임미애 위원 장관님께 질문드립니다.

행정통합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논의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 행안부가 이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아까 요구했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제가 일괄 질문드릴 테니 일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질문이고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역할과 기능에 차이가 많습니다. 대구시는 작은 면적에 집행 기능이 크고요, 경상북도는 넓은 면적에 흩어진 22개 시군 지원 기관의 역할이 큼니다. 22개 시군은 각기 인구 구성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사회문화적 풍토도 다릅니다. 경북 영양군하고 경북 포항시가 같은 경북이지만 인구도 다르고 산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경북도의회가 통합의 찬성 기류가 높다 하더라도 시·군의회에서 반대하면 도의회의 결정사항이 시군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시의회가 반대하고 안동시 도의원이 반대해도 도의회 의결에서 찬성 표가 많고 찬성 의결되었으니 안동시보고 결과에 따르라고 한다면 안동시민들이 따르겠습니까? 절대로 안 따릅니다. 난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필요합니다. 아까 주민투표 하기에 시간과 돈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의결이 시·군의회에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행안부는 조금 더디 가더라도 결정 사항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합의문 1번 사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행안부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는 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도시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역사성이나 낙후성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합에 따른 지위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행안부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에서 똑같은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든 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 특례를 부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세 가지 유형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를 살펴보면 수도의 위상 특례가 주어지고 부시장의 직급이 높고 그리고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여합니다. 대신 개발사업이나 조세특례는 없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특례라는 것은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특례라기보다는 고위공직자의 위상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은 지위 특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지방교부금이 집행되는 방법과 액수에 차이가 큼니다. 경북의 시·구는 보통교부세라는 이름으로 행안부를 통해서 직접 교부됩니다. 금액도 안동시가 6923억, 영주시가 4196억, 의성군이 3657억입니다. 반면에 대구시 동구·중구·서구 이런 자치구는 대구시로 교부되는 교부금을 대구시의회 의결을 통해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지급받습니다. 액수가 경북도 내 시군이 받는 교부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구가 181억, 동구가 251억, 서구가 268억을 23년도에 교부받았습니다.

통합이 되었을 때 특례 조항을 뒤서 교부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부 방식이 대구·경북특별시를 통해 조정교부금의 형태로 분배된다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군 지역의 재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통합 논의 과정에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행정 통합 논의가 산발적이지만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의 일환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기에 지금의 행정구역 체제가 과연 효율적인 체제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근거해서 백년 가는 행정 체제를 새롭게 만든다는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빨랐지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다 적었습니다.

○**임미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먼저 위원님께서 각 광역의회 그다음에 기초의회 사이에 결론이 다룰 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사 수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통합이나 분합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이분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의 의사를 어떻게 타진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의회 의사로 확인하는 방법 그다음에 주민투표로 확인하는 방법. 그런데 법에서는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났고 보조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미애 위원** 아니에요.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니까요, 지방의회의 의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안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어떤 것을 취하든 우리는 그쪽 의견을 중요시할 겁니다. 기본 원칙이 존치, 폐합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주도하면 중앙은 도와줄 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준하는 것이 어떤 대우냐, 첫 번째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쪽 대구·경북 합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행정안전부의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논의하는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면 똑같이 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회나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의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이것은 개념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특별’이라는 것이 어떤 지위에 관련된, 고위직의 지위에 관련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이 세 군데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다 특별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특별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특별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세 말씀하셨는데 특교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점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통합 과정에서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오늘도 교육재정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교육재정의 문제 그다음에 중앙재정의 문제, 이 3개는 한꺼번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 내에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심지어 도시설계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지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서도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연구 결과가 많이 활용이 될 거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축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구·경북 통합에 있어서 많은 자료와 도움을 드릴 것이고 그것을 다 싸서 의회에 풀어 놓으면 의원님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임미애 위원 길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 재보충질의까지 하신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과 기재부차관께 한 말씀 드리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내는 보도자료를 뿌렸고 어제 KDI에서 하반기 경제동향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나온 글이 이렇습니다. ‘KDI조차 이처럼 경기를 어둡게 보는데 불과 하루 전에 기재부는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찬했다. 아무리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정 홍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것이라고 해도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영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자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상황 판단 자체를 의심케 한다’, 제가 그대로 사설 하나 인용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점심 때 나온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 사설의 취지는 현 경제팀의 상황 판단 자체에 대한 비판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달나라 대통령, 달나라 총리, 달나라 장관, 체감과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희가 최근에 AI 계속 이야기하면서 논의들을 하는데 그 연장에서 저희들도 간단한, 도서관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실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서 독서문화 증진 등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다음 화면 보면, 실은 이번에 이런저런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정책개발·서비스 환경 개선 예산이나 중앙도서관 예산 또는 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 등 죽 여러 항목들이 삭감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떤 특정 항목만 가지고 해결될 수는 없을 거고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토론하는 문화를 키우는 프로그램 지원 예산 등은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도서관 사업보다는 아마 독서 진흥이나 지역 서점 살리는 것은 따로 내년에 많이 증액을 했고요. 도서관 쪽은 그동안에 아마 건립되고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좀 예산이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창의 문헌보존관이 예비타당성을 다시 하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정부 예산 낸 다음에 그게 끝나서 사실 여기 좀 빠졌습니다.

○오기형 위원 글썄요. 저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지만 규모가 있는 도서관 내에서 지역사회랑 소통하는 문화프로그램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찾아서 저는 이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정부 부처 간 소통하면서 추진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 부분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특히 문화프로그램 쪽은 저희들이 도서관 자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다음으로는, 서면질의를 따로 드릴 텐데요.

제 지역구가 도봉구입니다. 구청장님이랑 장관님이 같이 만나서 국기원 지원 관련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만났었습니다.

○오기형 위원 제가 정당이 달라도 지역에서 공통분모가 있으면 지지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아까 하다 만 이야기인데 행안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간단간단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새마을금고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계속 안 주셨습니다. 지금도 안 주셨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PF에 경제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불신이 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권한 자체를 차라리 금융위로 넘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안 주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 중에서,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이제 구상권 행사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소멸시효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검토된 겁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오기형 위원** 체크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검토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SDS 관련 구상권 행사의 소멸시효는 ISDS 관련 책임이 확정되어 정부가 청구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는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SDS는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사인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ISDS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손해배상책임이나 구상권 책임이 있는지는 조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기형 위원** 이 지점에서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소멸시효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문서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온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에 연루돼서 국민연금, 국민의 재산을 가지고 의결권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2500억대 손해를 봤고 ISDS, 대한민국 모두가 2300억, 2400억 손해를 본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입한 공무원이 있고 그 개입을 충동한 뇌물공여자들도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의 세금은 장관님이 다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부장관이나 그 당시에 했던 누가 책임질 것인가……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ISDS 책임이 확정되면 그에 대한 부분은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때 검토하실 게 아니라 지금 검토가 돼 있어야 그 검토 내용을, 법률적인 건 검토 요청하면 금방 나올 수가 있고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저희들이 주장……

○**오기형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삼성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다,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그 당시의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아직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면 국가권력이 오염됐다 이렇게 비판할 거다……

○**법무부장관 박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결정문 내용을 많이 분석도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충실히 검토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절대 공무원들이 권력 행사에 대해서 오해를 사면 안 된다, 이 지점은 가만히 있으면 오해 살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박정 정리해 주시지요.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입니다.

교육부총리님, 2022년 12월에 국가교육위원회하고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 ‘성평등’, ‘성소수자’, 교과서 내에서 그 용어 삭제를 명시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이런 용어가 지금 대다수 해당 교육과정 검인정교과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조기성애화 그리고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보통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한다는 그런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 아닌가요? 또 그렇게 정의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교과서 중의 하나인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학사 교과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결론에서 ‘인간은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서’, 이것은 전혀 교육부에서 정의한 개념하고 다릅니다.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고 다양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바람직한 성 문화를 통해 성과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미성년자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의 권리로 좁혀서 정의했는데 그 권고를 아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모르셨어요? 진작 검토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을 텐데.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교육부로서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 대한 문제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또 천재, 지학사, 리베르스쿨, 비상교과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요 성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서 자발적인 결론을 내릴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기들 자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사실 청소년들한테 성에 대한 윤리나 가치관을 올바로 심어 주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책임이 있으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국방부장관님과 방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AI 기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구체적으로 AI 기반 드론 또 광학 조준기, 정찰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활용돼서 5000달러짜리 드론 한 대가 500만 달러 탱크를 부렸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해서요 완전히 전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등에서 군사 분야에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님과 방사청장님은 익히 제가 얘기하기 전에 워낙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어떤 전략적인 자산이나 인적 자산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극대로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인데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AI 관련해서 2023년 기준으로 5억 5700만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김용현 방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AI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그게 기본이 돼야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인전투체계로 가야 되는데 무인전투체계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이 AI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배숙 위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재부에서도 AI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시간이 없는데…… 문화체육부장관님, 저 표를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 수가, 신청하는 학교 수가 저렇게 늘었어요. 코로나 때 빼고는 저렇게 계속 매년 늘었고요. 신청한 시수 또한 3만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저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예술강사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한 사만 몇천 원 될 겁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면 여쭙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급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처음 시작할 때요?

○임호선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임호선 위원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호선 위원 제가 퀴즈 내는 건 아니고요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 4만 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3000원 오른 거예요. 2005년도에 4만 원이었습니다. 4만 원에 시작된 사업이 4만 3000원이예요,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혁신처장님 나와 계십니까? 어디 계시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여기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백지신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임호선 위원 제가 행안위 있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백지신탁 안 하고 계셔 가지고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백지신탁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말썽을 부리고 있어요.

주식백지신탁제도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 보시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마 꿈수 시간 끌기에 대한 뉴스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면서 백지신탁제도가 우수 공직자 채용에 제한 요소가 된다는 여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주식만 해당이 되고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경우는 적용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그렇지요?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임호선 위원 그래서 용역 연구를 21년도 8월에 했고요. 그렇지요? 23년 7월에 했습니다.

이 백지신탁제도 개선에 의지가 있으십니까?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상충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구로구청장의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아서……

○임호선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구로구청장께서 195억이었던가요? 196억 원 중에서 170억 자산을 본인이 포기를 못 하셔서 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여기 선관위에서도 나와 있으시잖아요. 선거 보전 비용 이게 결국 구청장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평균 내보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서……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 또 엄청 고생하시게 생겼잖아요. 주식백지신탁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의 판단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떠나서 공직자로서 이런 문제가 대한민국 땅에서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저는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임호선 위원 그리고 편법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가면서 시간 끄는 이런 문제도 제도개선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 연원정 예, 알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이거는 소방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 소방청 정액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저걸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전국 소방관서 급식단가 현황입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야, 저거 진짜냐?’ ‘저게 시도에서 지원되는 게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없는 거래요.

울산·대구가 2800원입니다, 1식 기준 급식단가가요. 충북 6800원, 제주 7900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 부분은 시도에서 급식조례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게 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편차가 저 정도 난다면 적어도 저는 소방청이나 기재부에서 기준은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지방재정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저것은 아니잖아요. 저것을 누가……

저렇게 해 가지고 소방관이 불 끄러 다니고 응급구조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님, 소방공무원 국가공무원화 관련해서 저희가 소방안 전교부세를 2배 이상 올렸습니다, 2020년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호선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 빨리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방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청장님, 의지 좀 보여 주세요.

○**소방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 교대근무하는 근무 특성상 급식 수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좀 많은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보여 주신 자료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본부장들 전부 다 소집해서 교육을,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서…… 지금 현재 급식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14곳이고 만들어지지 않은 시도가 3곳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재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분입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늦은 시간에 재보충질의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문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세 분께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나왔습니다.

여가부 산하기관들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면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는 여가부의 정책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처

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예산의 대부분이 기재부가 관리하는 복권기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관이 제 역할을 할 때 노동자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복권기금의 지원을 여가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복권기금 재원 배분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복권기금의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임미애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하여튼 경직적인 복권기금의 재원 배분 구조를 이참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수익금의 30%를 지원했는데요 지금은 19.5%로 줄어들었고 이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 상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은 범피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최소한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범피기금 활용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성재 예, 살펴보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안도걸·김문수·박수현·문금주·차규근·위성곤·허영·구자근·임종득·박수민·최은석·이재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연·이주영·임미애·조승환·최은석·박수민·임종득·안도걸·오기형·임호선·위성곤·김영진·허영·구자근·조배숙·엄태영·최형두 위원님께서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허영 간사님, 김영진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 개최와 모든 속개 시에 가장 먼저 오셔서 회의장을 든든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의 시작과 끝을 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상임위와 예결위의 숨 가쁜 의정활동을 빈틈없이 보좌하시느라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보좌진 여러분, 이신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 경위분들과 속기사분들 그리고 국회방송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산회)

○출석 위원(48인)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향엽	김문수	김병주	김성원	김승수	김영진	김용태
김태선	문금주	박수민	박수현	박 정	박지혜	서범수	서영석	서일준	서지영
신영대	안도걸	엄태영	오기형	위성곤	윤종오	윤준병	이재강	이주영	임미애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정일영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주철현	차규근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한민수	허성무	허 영	홍기원	황정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현중
입법심의관 이형진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홍철호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장 태영호
사무차장 동승철
감사원
원장 최재해
국무조정실
실장 방기선
국무총리비서실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예산실장 김동일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외교부
제1차관 김홍균
통일부
장관 김영호
차관 김수경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방부
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여성가족부
장관직무대행 신영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인사혁신처
처장 연원정
법제처
처장 이완규
재외동포청
청장 이상덕
차장 변철환

병무청

청장 김종철

차장 최규석

방위사업청

청장 석종건

경찰청

청장 조지호

소방청

청장 허석곤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학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천대엽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김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보고사항】

○예비심사보고서 송부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20)

이상 2건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송부됨